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이상림
오신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35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33-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00>

발|간|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구의 위기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인구학적 도전이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청년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이 떠나고, 지역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며,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기는 떨어지고, 이는 다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기존의 연구와 인식들이 정책사업의 관점에서만 이뤄지면서 지역 인구변동을 둘러싼 인구지리적 맥락들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 단위 인구지표들이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사회학적·인구학적 이해 없이 단순 수치의 나열에 머물거나, 나아가 지역의 인구동태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지역 단위 인구지표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들의 인구학적 상황들을 인구지표들로 기술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위기의 종합적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인구지표들을 전체적 관계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였고, 이러한 맥락들을 따라 유형화하면서 지역들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연결하여 지역들의 당면해 있거나, 마주하게 될 인구적 위기들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설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의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 이슈들은 유형화되지 않고, 위기 수준의 일원적 분류만이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시작되어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을 지나, 부산과 경남으로 이어지는 인구의 선이 그려지고, 그 이남에는 광범위한 인구위기의 클러스터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과 충청 지역들은 이미 준수도권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광역시 등 지방 중핵 도시들은 청년인구를 중간 흡수하는 역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가 당초 기획한 인구변동 관련 정책적 이슈를 유형화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지역 인구변동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 모든 지역들을 휩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인구위기는 지방 지역들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들의 발전주의적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연대주의적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결과들은 그러한 대안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준 시군구 인구정책 담당자들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접근 분석	19
제2절 지역인구 지수 사용 사례 검토	27
제3장 지역 인구자료의 분석과 지수화	41
제1절 인구지표 간의 관계성 분석	43
제2절 인구지표의 영역별 지수화	72
제4장 지역인구의 유형화와 현장 대응 비교	107
제1절 지역인구의 종합적 유형화	109
제2절 시군구 정책 대응과의 비교	121
제5장 결론	127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129
제2절 인구지표와 정책과제	133
제3절 인구지표 관련 정책 제언	146



참고문헌	151
부 록	157
[부록 1] 시군구 인가지표	157
[부록 2]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표	179

표 목차



〈표 3-1〉 지역 유형별 합계출산율과 인구변동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55
〈표 3-2〉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과 인구변동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59
〈표 3-3〉 시도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의 변화와 증가율	62
〈표 4-1〉 지역인구의 현재적·미래적 측면의 유형화 결과의 조합 결과	113
〈표 4-2〉 지역유형별 지역 인구정책 부서의 계통	121
〈표 4-3〉 시군구 유형별 대표 인구 현안(지자체 인식)의 분포	122
〈표 4-4〉 현재 인구문제와 대표 인구 현안(지자체 인식)의 분포	124
〈표 4-5〉 시군구 유형별 미래 인구문제(지자체 인식) 교차표	124
〈표 4-6〉 현재 대표 인구 현안과 미래 인구문제 교차표(지자체 인식)	125
〈표 4-7〉 시군구 유형별 역량강화 방안 응답 분포	126
〈표 5-1〉 지역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들	149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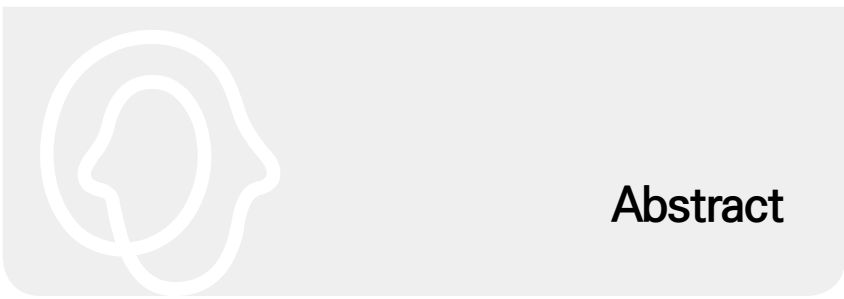
[그림 1-1] 청년 순이동률과 선형표준화된 지수값의 분포 비교	13
[그림 1-2] 청년 순이동률과 선형표준화된 지수값의 상관관계	14
[그림 2-1]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비용 프레임' 개념도	21
[그림 2-2]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비인구학 분야의 설명 프레임	25
[그림 2-3]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인구가동 관점에서의 설명 프레임	26
[그림 2-4]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29
[그림 2-5] 인구 고령화 지수와 지방소멸위험 지수의 산출 개념 설명	30
[그림 2-6] 인구 고령화 지수와 지방소멸위험 지수 간의 상관성	31
[그림 2-7] 시군구 수준 도시지역 인구밀도(로그)와 합계출산율 상관관계 그래프(2017) ..	33
[그림 2-8] 서울시 구지역 청년인구 중 1인가구 비율	34
[그림 2-9] 시군구 인구밀도(로그)와 비아파트 주택비율의 상관관계	36
[그림 2-10] 시군구 인구밀도(로그)와 노인인구 비율의 상관관계	36
[그림 2-11] 인구밀도와 30대 여성 1인가구 비율	37
[그림 2-12] 시군구 인구밀도(로그)와 30대 여성 중 신혼 비율	38
[그림 2-13] 지역적 특성(밀도)과 지역 출산율 간의 관계	39
[그림 3-1]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청년 순이동률 간의 상관관계	44
[그림 3-2] 지역 유형별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청년 순이동률 간의 상관관계	46
[그림 3-3]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47
[그림 3-4] 지역 유형별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48
[그림 3-5] 도 내 시지역들 대상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49
[그림 3-6] 지역 유형별 클러스터를 구분한 고령화와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50
[그림 3-7]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관계	51
[그림 3-8] 시군구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간의 상관성	52
[그림 3-9] 노인인구 비율 하위 100개 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율과 출생관련 지표들의 상관관계	53
[그림 3-10] 시군구 청년 순이동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56
[그림 3-11] 지역 유형별 시군구 청년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57



[그림 3-12] 시군구 청년 순이동률과 청년인구 비율 간의 상관관계	58
[그림 3-13]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인구요인들의 상관성 및 영향 관계	60
[그림 3-14] 인구구조의 비교: 전라남도과 울산광역시(2020)	64
[그림 3-15] 전국 인구와 울산 북구 인구구조 비교(2020)	65
[그림 3-16] 30대 여성 중 신혼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성	67
[그림 3-17] 시군구 30대 초반 여성 중 신혼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68
[그림 3-18] 신혼여성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 및 청년 순이동률의 상관성	69
[그림 3-19] 혼인 유입 비율과 신혼여성 비율의 상관성	72
[그림 3-20] 영역별 인구지표들의 구조 구성	73
[그림 3-21]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순이동률 및 자연성장률 상관성	74
[그림 3-22] 시군구 인구성장 영역 지수의 유형화 결과	77
[그림 3-23] 시군구 출생 30대 여성인구 중 신혼인구 비율(2019)	80
[그림 3-24] 시군구 출생 이후 5년 생잔율 등급화 결과	82
[그림 3-25] 시군구 합계출산율 등급화 결과	83
[그림 3-26]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잔율 간의 관계: 분석 대상 전체 지역	84
[그림 3-27]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잔율 간의 관계: 출산율 상위 100개 지역	85
[그림 3-28]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잔율 간의 관계: 출산율 하위 100개 지역	86
[그림 3-29] 생잔율을 반영한 합계출산율 분포	88
[그림 3-30] 시군구 출산력 영역 종합지수화 결과	90
[그림 3-31]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 등급화 결과	93
[그림 3-32] 시군구 청년인구 비율 등급화 결과	94
[그림 3-33] 시군구 인구구조 종합 지수화 결과	96
[그림 3-34]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중위연령의 상관관계	98
[그림 3-35] 청년인구 순유출과 MEI 및 OMEI의 상관성	100
[그림 3-36] 청년인구 이동 관련 MEI와 OMEI의 상관성(청년 순유출 지역)	101
[그림 3-37] 시군구 노인인구 증가율의 등급화 결과	105
[그림 3-38] 시군구 청년인구 증가율의 등급화 결과	106



[그림 4-1] 현재 시군구 현재적 인구활력 유형화 결과	110
[그림 4-2] 향후 10년 후 시군구 인구변동 유형화 결과	111
[그림 4-3] 지역인구 유형화 결과	114



Abstract

Developing Index on Population Dynamics and Categorizing Demographic Policy Issues at Regional Level

Project Head: Lee, Sang-lim

Regional population crises such as aging and population decline recently have been emerging as very serious social and policy issues, but population indicators showing the local population situation are being used without demographic and population-geographic understan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arious demographic indicators describing the demographic situation,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categorize demographic crises at regional leve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young-population migration is a key factor generating a disparities in population size, age structure, and even fertility between regions. Furthermore, the map of the population status of the region shows that there is a uni-direction population change, de facto polarization in Korea, consisting of two extreme groups: 'population gaining young areas' and 'population losing aged area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that help local population crisis-responding capabilities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regional population dynamics. In order to

Co-Researchers: Oh, Shinhwee

2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cope with the population aging and depopulation at regional level, the transition from population policy to a 'demographic strategy' in which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are integrated is required.

Keyword : demographic index; population dynamics at local level; local demographic strateg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지역 수준의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학교의 폐교, 지방대의 대량 입시미달 사태, 지역 경제의 위축 등 지역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적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의 인구변동 역시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인구적 현황 또는 정책적 수요와 효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시군구 수준의 인구지표들의 활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변동에 대한 지역적 맥락에 대한 체계적 이해없이 인구지표들이 단순히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사용되고, 심지어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 인구동태 요인에 대한 체계적 인구분석에 기반한 전문 인구학적 지표들을 개발하고, 각 지표들과 지역 인구변동들을 영역별 그리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다양한 '(영역별) 지역 인구지수'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역별 인구지수들을 종합하여 '지역 인구위기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현재 지역 정책 인식 및 현황과 비교 검증해본다.

2.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는 실증적·이론적으로 다양한 지역 단위 인구지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시군구 수준의 다양한 인구동태 및 인구구조 지표들 간의 상호연관성이나 또는 합계출산율과 자연증가율 등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상관성이 떨어지는 관계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인구이동, 특히 청년의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규모

4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와 연령구조(고령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출산율이나 합계출산율 등에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 지표들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구성장, 출산력, 인구구조 그리고 향후 인구변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표들을 산출, 영역별 지수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혼여성 비율, 출생아 생산율, 인구유출 기여도, 청년 유실률 등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만 이용되었던 지표들을 인구지표들 간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들의 지리적 분포를 제시하면서 인구변동의 전체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지표와 영역별 지수값을 바탕으로 현재적 인구활력과 가까운 미래의 인구변동 위험을 결합하여 전체 시군구의 인구적 특성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 종합화의 결과가 수준의 등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연구가 당초 의도했던 지수를 통한 유형화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유입지’와 ‘고령화된 인구유출지’라는 두 가지 극단적 양상을 잇는 단선적 인구변동(사실상의 양극화)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위기가 개별 위험지역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체적 인구변동의 양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거대한 인구위기 클러스터의 존재는 개별 위기지역들을 나열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 위기의 수준이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 및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얼마나 이러한 위기의 시급성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 왔는가에 대한 자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분석의 마지막으로 지역 인구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인구 상황의 인식과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이 연구가 산출한 지역의 인가지표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 결과, 지역의 인구 인식 및 증점적 대처와 분석된 인구상황 사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미래 인구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위기인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국가적 위기(저출산)를 중요 과제로 꼽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현장 담당자들의 인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역 단위 인구변동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인구변동에 관한 모니터링을 개별 지역에 맡기거나,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고 지표값만을 나열하는 것은 지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구학적 변동의 맥락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권역 범위 내 지역들의 인구변동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인 자료 구성, 지표 산출, 결과의 분석과 전문적 해석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 인가지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여 지자체의 지역화된 인구 대응을 중앙 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정책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운영 지원 체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정책은 저출산 정책 등 인구위기 완화 전략과 함께 인구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가 진전되면서 앞으로 초래할 부정적 파장에 대해 대응하는 적응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6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의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의 지역인구에 대한 이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함께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의 인구이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 인구조표, 지역인구 변동, 지역 인구전략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전국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지방소멸’로 일컬어지는 지역의 인구위기가 새로운 인구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같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전국 단위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있어서는 체계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지역 단위의 개별적 대응으로만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사실, 새롭게 부각된 지역 단위의 인구문제는 지역 특수성의 문제와 전국적 인구변동의 차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언론 및 사회적 논의에서 지역의 인구위기는 그 심각성만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인구변동의 지역적 구성에 대한 이해 수준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구학적 이해에 따라 지역의 위기만을 부각시키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위기관점(지방소멸)에서 총량적 인구규모에만 집중된 일원론적인 단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조차 지역 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노인복지 강화, 출산지원금, 귀농귀촌 지원 등의 정책 방안들이 전국에 걸쳐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구변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속도와 다양한 원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학적 이해에 기초한 종합적 분석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근거 없이 지역 차원의 논의들만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인구를 배제하고 지수를 산출하며, 출산의 관점(노인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인구비)에서 인구감소를 단정하면서 실제적·이론적 설명력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에서는 지역의 삶의 질,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한 ‘균형발전총괄지표’ 구성을 계획했으나, 정작 지역 불균형의 핵심 결과물인 인구요인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¹⁾

이와 같은 인구학적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제한된 단편적 요인들로 지역 인구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지역 인구변동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지역 단위 정책 개발에서 중장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심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파장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인구변동 대응과 관련된 저출산 정책이나 인구 유치 등의 완화정책과 더불어 미래의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응정책이 결합된 인구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인구에 대한 분석 접근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지방 차원의 종합적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y)’은 저출산 정책 등 인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8월 전국 지자체의 균형발전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2017년 3년간 평균 재정 자립도를 핵심지표로 하면서 인가지표가 일부 반영되었다(오영환, 2019. 8. 29.). 2020년부터는 지표 구성을 위해 통계청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기획담당관,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총괄운영과, 2020. 8. 18.).

구관리 정책(population policy)이 아닌, 지자체의 지방인구위기 대처, 인구변동 대응 사회정책, 지역 발전 및 복지 전략, 건설 등 도시계획 수립 등 정책 일반에 인구변동 요인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인구 분석은 인구(규모/구성) 개선을 전제하는 ‘인구 관리’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위기론 제기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요구되는 인구전략의 개념을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다양한 현황과 변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 인구동태 요인에 대한 체계적 인구분석에 기반한 전문 인구학적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수요의 측면에서 구성한 ‘영역별 지역 인구지수’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역별 인구지수들을 종합하여 ‘지역 인구위기의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현재 지역 현황과의 비교 검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인구변동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지역별 인구전략 방향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인구 지표와 관련된 논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지표가 지역 단위 인구변동의 구조와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 인구변동(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인구학적 맥락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구분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영역별 인구변동의 지수를 만들하고자 한다.

도출된 지수와 지표들을 사용하여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변동을 함께 고려한 우리나라 전체 지역(시군구)들의 지역 인구변동을 유형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유형화한 결과를 지역인구 및 정책 대응의 특성과 비교하여 지역인구 대응의 적절성을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고, 우리 사회의 지역 단위 인구분석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 자료 분석 및 지수화가 가장 핵심적 분석 방법이 된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동태 통계(출산, 사망 등), 인구이동통계 등 지역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며, 특히 지금까지 시군구 지역인구 지수화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표들도 함께 구성하여 분석한다.²⁾ 새로운 지표의 구성은 단순히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구변수들 간의 관계성과 그 인구·사회적 맥락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다양한 인구 지수들은 영역별로 구성되고, 각 영역별로 지역의 인구 상황을 지수화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지표들을 영역별로 지수화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표준정규분포화(Z-score)이지만, 관측치의 수가 적거나 정규분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표준화

2)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유의한 수준의 행정 경계 변동이 있었던 세종시와 청주시 두 지역은 조사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선형표준화 방법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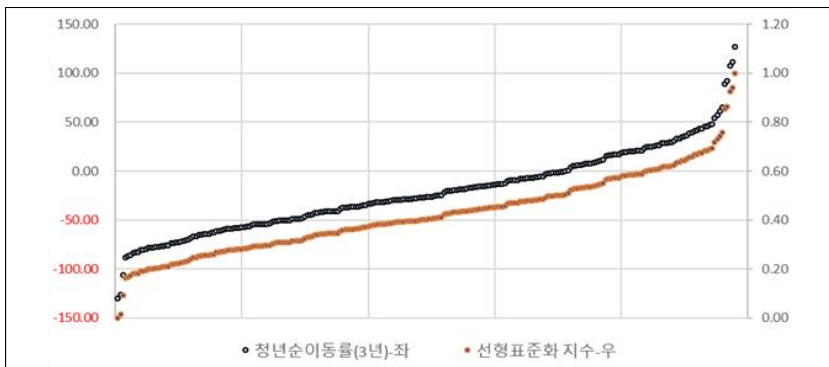
$$y_{ij} = \frac{x_{ij} - \text{Min}(x_j)}{\text{Max}(x_j) - \text{Min}(x_j)}$$

* y_{ij} 는 표준화 값, i 는 지역, j 는 변수를 나타냄

* 노인인구 비율 등 지표의 값이 부정적 의미인 경우는 그 역방향으로 지수들이 나타나도록 최소값과 최대값을 상치하여 산출

선형표준화는 어떤 지표값의 분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0~1의 범주 안으로 축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한 표준정규분포화나 단순 서열적 재배열와는 다른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그림 1-1]과 같이 2018~2020년 시군구 청년인구 순이동률과 선형표준화된 값을 값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여 그 분포를 비교해보면 원래 값의 분포형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지표값들의 상관관계를 구성하면 완전한 선형형태가 나타난다.

[그림 1-1] 청년 순이동률과 선형표준화된 지수값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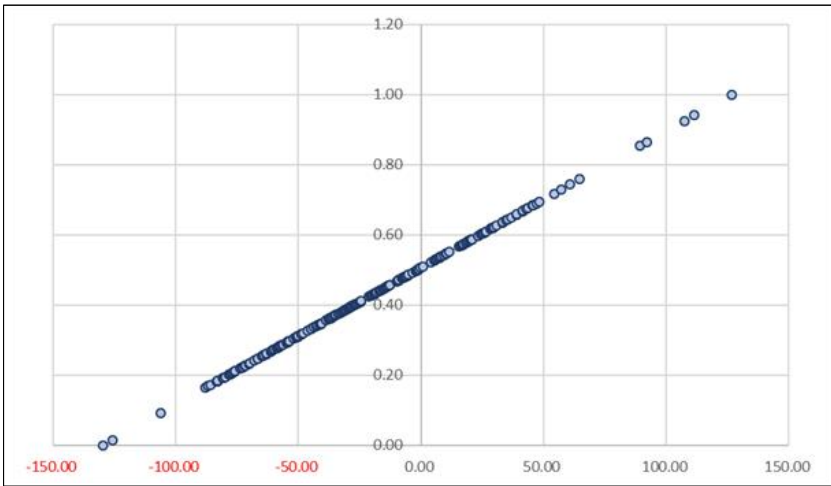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14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에서 2021. 4. 8. 인출.

[그림 1-2] 청년 순이동률과 선형표준화된 지수값의 상관관계



- 자료: 1)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에서 2021. 4. 8. 인출.

이렇게 도출된 표준화 값은 영역별로 합계를 구해 영역별 지수값을 구성한다.³⁾ 이후 기술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학적 지수들로 구

3) 이 분석에서는 지표별로 별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지표별로 지역인구의 규모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화된 연구가 없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천하는 값들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적으로 단순 영향력을 구하는 것은 지표의 실제적 의미를 크게 왜곡시킬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는 전체 인구의 0.6%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출생의 중요성에 그러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 통념에도 맞지 않고, 지역의 인구학적 변동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가중치를 부여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성되는 인구변동의 영역을 현재적 활력 부분과 향후 10년 후의 인구변동 부분으로 나누었다. 현재적 활력은 인구성장, 출산여건, 인구구조⁴⁾의 요인들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10년 후의 인구변동은 현재 시군구들의 인구구조와 코호트 동태를 H-P(Hamilton-Perry) 인구추계의 일부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된 인구변동 지수들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수화 과정을 거치기에 앞서 지표들 간의 맥락적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 간의 관계에 의해 실제적 인구변동과는 무관한 임의의 결과가 산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수 산출작업 이전에 요인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되는 요인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먼저 시도해 본다. 이를 위해 지표값들 간의 다양한 비교와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인구지표들의 특성과 관계성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지수화된 결과들은 다시 현재적 인구활력 영역별 지수들과 미래변동 맥락의 지수들과의 군집분석을 통해 조합하여 전체 지역들의 인구변동을 유형화한다. 군집분석은 현재적 인구활력 영역과 미래 변동영역 지표(인구학적 변인)들을 각각 포함시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와 미래 영역 각각에서 군집 수를 3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군구 지역이 속한 현재 및 미래 영역의 유형(군집)을 결합하여 최종적 전국 시군구 인구변동 유형을 구성하였다.⁵⁾

4) 이 연구에서 인구구조는 인구학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성별 연령구조가 아닌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의 의미로 한정한다. 이는 주로 노인인구 비율과 같은 고령화 정도를 의미하지만, 청년이나 다른 연령대의 구성비율 등도 포함한다. 참고로 인구학에서 활력, 혼인 상태, 직업활동, 출신지역 등 구성원들의 특성 분포는 '인구구조(population structure)'보다 '인구구성(population composition)' 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5) 군집의 수를 3개로 제한한 것은 이 연구에서의 최종 시군구 유형이 현재 영역과 미래 영역의 조합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의 군집이 유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더 많은 수의 군집화를 실행하고 이를 조합하였는데, 이론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군집을 단순화하였다.

16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한편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지수화, 유형화 결과와 현장의 인식 및 정책 대응을 비교해 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시군구 인구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상황과 정책적 대응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초 지자체의 인구상황 인식 및 정책 현황 파악은 각 시도에서 정보를 제공한 지역 시군구 인구정책 담당부서 담당자들의 응답을 통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웹상에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사 내용에는 지역의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성 방식과 지역 차원의 정책 대응의 초점, 앞으로의 지역 인구변동 전망 등이 포함되었다. 현황 파악에는 전국의 모든 229개 지자체⁶⁾의 인구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6) 이 연구의 실제 분석에서는 세종시와 청주시가 제외되었으며, 시도 내 시지역들의 하위 구(예를 들어 수원시의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들을 구분하여 총 255개 시군구의 인구지표들이 분석되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접근 분석

제2절 지역인구 지수 사용 사례 검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접근 분석

1. 중앙정부의 인구 관련 정책과 지방의 인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 지역 단위의 인구변동은 주요 정책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단지 전체 수준 인구변동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전까지 지역 단위의 인구변동은 기본계획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지역 인구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인구변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인구정책TF에서는 지역의 인구변동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지만, 그 논의 내용이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들과 전혀 공유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인구변동 관련 대응에서 지방의 인구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은 데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심적 인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근간에 존재하는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인구변동 및 출산 등에 대한 인구학적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 구성에서 베커의 인구경제학(Barro & Becker, 1989)과 맥락을 같이 하는 출산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주요 인식 프레임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

에 대한 경제주의적 사고는 출산과 양육에 투여되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출산 이행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비용의 감소는 출산의 이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⁷⁾ 이러한 인식의 프레임에는 총비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총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현물, 현금, 서비스 지원 정책을 주된 정책 도구로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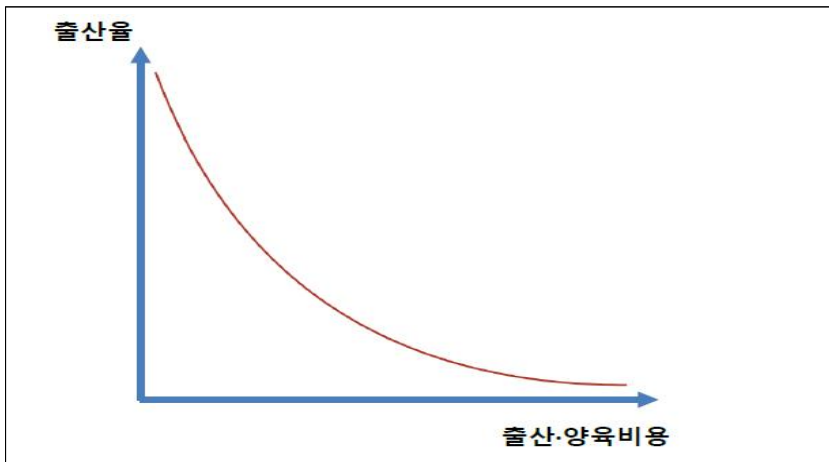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시행, 2014년 일부개정)」에는 법의 이념(제2조 기본이념)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이 가장 먼저 기술되어 있다.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 부분에서는 저출산 정책 도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출산과 보육(제8조)의 출산·보육 정책, 모자보건 증진(제9조)의 모자보건 정책의 직접 관련 정책 영역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경제적 부담 경감은 다른 영역(부처) 정책들이 저출산 정책에 참여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 부담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저출산 관련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사교육이나 대학 등록금 부채와 같은 교육분야 이슈, 가족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젠더적 이슈,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인구분포의 문제,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과 관련한 청년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적극적으로

7) 저출산 등 인구변동 결과를 경제학적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정책 경향은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대한민국정부, 2009)부터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p.26)를 강조하고, 출산율 회복시 영향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표로 가장 먼저 제시된다(p.50). 유럽에서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인구자연감소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독일은 우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같이 정부의 가장 중심적 인구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y)을 운영하는데, 가장 초기 작업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Every Age Counts(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라는 핵심 기조를 설정하였다(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2012). 사회적 연대성을 인구정책의 가장 핵심기조로 설정한 독일의 사례는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경우와는 많은 대비를 이룬다.

담겨져 있지 않고, 매우 일부분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총비용 프레임에 근거한 정책적 접근으로 정부는 정책 자원들을 끌어모으려는 국가적 동원체계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지원 위주의 개별사업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 프레임 상에서 지방정부는 전체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정책 자원을 동원하는 단위로 인식된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가중심적 관점이라는 비판들(정성호, 2018; 김수정, 2019)에는 이러한 지자체의 위상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비용 프레임’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정책 구조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구문제 현안들은 ‘저출산’으로 단순화되며, 지방은 중앙의 저출산 정책에 동원되는 보조적 역할로 자리매김된다. 총비용 프레임에 근거한 ‘합계출산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유출 등의 비출산적 차원의 문제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서 배제되어 왔다. 요약하자면, 지역 인구변동의 복잡한 인구학적

맥락들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접근 속에서도 지역의 문제는 간과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인구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인 사례가 존재한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고(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16. 8. 25.), ‘2017년 업무계획’에서는 지방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 지자체 인구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7. 10. 16).

이후 개편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 지방 단위 인구정책 체계 수립을 계획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각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 규모를 확대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과 중앙의 저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는 ‘출산지도 사건’을 거치면서 적극적 정책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⁸⁾ 이후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다.

당시의 출산지도 사건은 대중적 반발의 합리성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지역의 인구문제를 저출산의 문제로 단순화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후 지자체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한 총체적 거버넌스 체계 또는 정책 연계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에 개별 접근함에 따라 중

8) 이 시기에 행정자치부는 지역의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을 모은다는 취지로 소위 ‘출산지도’를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초 지자체의 합계출산율(비율, rate), 출산아수(분자), 출산기 여성인구(분모)가 지도화되어 제시되는데,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을 출산도구화 한다’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강력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양정부의 주류적 인구정책(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또는 인구정책TF)과는 단절된 정책운영 구조가 형성되었다.⁹⁾ 이에 따라 지역 인구문제의 핵심 현안인 지방인구 감소나 청년인구 유출 등의 주제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에 더 적합한 저출산 정책이 지방에도 그대로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박진경, 김도형, 2020).

2. 지방인구 위기에 대한 인구지리적 접근

2000년대 이전까지도 지방의 인구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처는 본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의 인구위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주요한 연구주제였다. 지방쇠퇴, 지방 인구축소, 지역불균형, 축소도시(shrinking city), 지역의 주변화(peripherization)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소멸’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지방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다양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구 요인의 이해에 근거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인구는 지방의 위기(쇠퇴)에 있어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지방위기의 한 단면으로 이해되면서, 여러 연구들에서 인구학적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분석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의 ‘쇠퇴’를 강조하는 접근에서는 삶의 질이나 빈곤수준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인구감소 지역의 분석에서도 핵심적 관심은 인구변

9) 사실 당시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지역 인구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판단된다. 당시 행정자치부의 논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처의 개별 안에 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행정부의 ‘안전’과 ‘인사’ 기능이 분리되어 조직이 축소된 가운데, 조직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인구감소, 인구유출이나 고령화) 자체라기보다는 지역의 소득, 산업 등 삶의 질과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박병호, 한상욱, 인병철, 2010; 기정훈, 2012). 또는 인구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에서도 인구감소를 도시 쇠퇴의 결과적 측면으로 강조하거나(김광중, 2010), 도시 축소를 도시 인구의 감소라는 측면보다는 사회·물리적 환경의 악화로 접근하기도 한다(성은영, 임유경, 심경미, 윤주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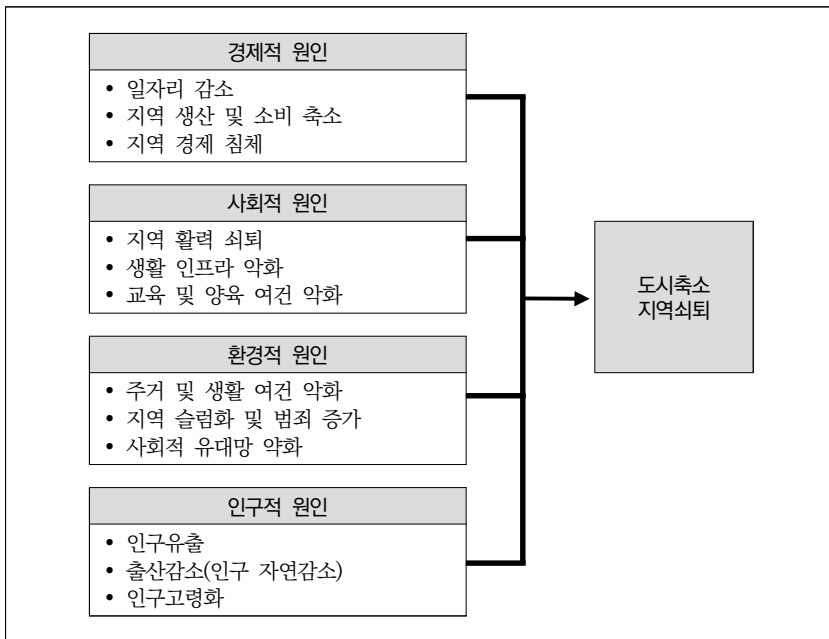
한편 인구과소지역의 개념에서 접근한 변필성, 김동근, 차은혜, 이효란(2015)의 연구에서는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정책 동향과 같은 정책적 대응의 측면에서 지방의 인구위기를 살펴보았다. 박진경과 김상민의 연구(2017)에서는 지역을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순이동)의 양상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지방의 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된 사회변화라는 인구학적 결과, 특히 인구이동(유출)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장인수, 우해봉, 임지혜, 손호성, 박종훈, 2020)은 지역의 인구감소가 자연성장이 아닌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상림(2020)은 인구이동 중에서도 청년 인구의 인구이동이 지방 인구감소 및 인구불균형의 핵심적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지방의 인구위기 또는 쇠퇴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것은 이해의 진전이나 이해의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더불어 사회·정책적 상황에 따라 주요 관심이나 관점이 영향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방의 위기 현상에 대한 인구적 요인이 강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의 위기를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일컫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 예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역의 위기는 발전의 문제와 함께 인구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역들에서 지방의 위기 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 방안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귀촌귀농’ 정책이나, 기초 지자체 차원의 인구종합계획이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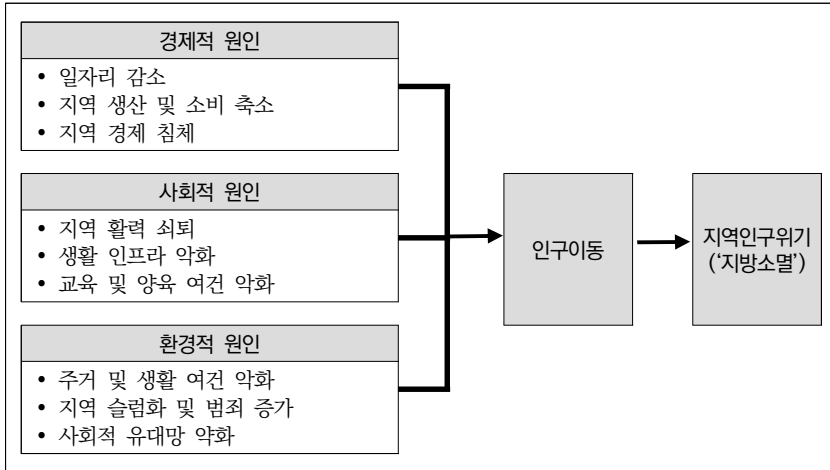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비인구학 분야의 설명 프레임



자료: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

26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그림 2-3]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인구이동 관점에서의 설명 프레임



자료: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6을 수정.

지역(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쇠퇴의 위기를 인구학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적 요인에 주목하고,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을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키게 한다. 그리고 인구지표의 생산과 심층적 분석은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 단위의 인구지표는 합계출산율, 인구증가율, 노인인구 비율 등의 결과지표들을 제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현상 기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결과지표 나열 이상의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각 인구지표들이 상호 독립된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의 인구현상이 다른 부분의 인구현상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년의 유출은 지역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지역에서는 비록 출산율(fertility rate - 주로 합계출산율로 표현)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에 출산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출생률(birth rate - 주로 조출생률로 표현)은 낮아질 수 있다. 심지어 청년의 유출과 유입은 그 자체로 출산율 계산의 분모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출산율 수준에 수리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현상들의 상호 연계성과 지역인구의 구조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바르게 인식할 때, 인구지표들로 표현되는 지역의 인구 현상들을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예로 지역의 자녀 양육 가족의 유출에 대한 이해 없이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지역의 출산율 수준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출산이 지역의 인구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방 지역들에서는 출산 이후 수년 내 출생아들의 대규모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지표들에 대한 인구학적 또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의 인구현상을 왜곡하는 지표들을 양산할 위험성마저 안게 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지표가 갖는 인구지리적 맥락 이해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실제 지표 활용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제2절 지역인구 지수 사용 사례 검토

1. 지방소멸위험 지수

최근 지방의 인구위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지표는 마스다 히로야(2015)의 ‘지방소멸’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내용 중 사용된 ‘지방소멸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소멸지수가 지역(우리나라 군지역보다 작은 행

정단위인 시·정·촌, 市町村)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에 비해, 국내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현재의 지역 인구구조의 일부 특성인 노인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인구의 비로 산출된다.

이 지표는 우리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체수준의 출산력 수준을 전제로 하고,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중장년층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상림 외, 2018). 특히 지역의 위기를 출산력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지역 인구문제의 핵심 원인인 인구이동의 문제를 전혀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표가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한다는 지표의 기본적 전제(황선재, 변준석, 심수진, 2019)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위기의 원인적 측면이나 인구변동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위기적 인구구조의 결과만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지수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담아내지 못하고, 단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곧 소멸될 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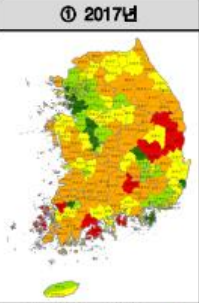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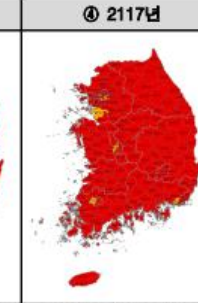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30년 후 사라지는 지역’이라는 선정적 정의로 해석되면서, 이 지표가 지역 단위의 인구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전에서 지역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의 현실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이 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감사원, 2021).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인구 대지진속 100년 후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생존?’(김종현, 2021.8.19.)이라는 식의 제목으로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내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 지

역의 인구변동을 지방소멸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47년에 서울의 강북·도봉 등 전국 157개 시군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되고, 100년 후인 2117년에는 서울의 강남·광진·관악·마포,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 경기 화성 등 8개를 제외한 22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모두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른다.

그런데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표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 ‘지방소멸위험 지수’ 지표는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정작 100년 후에도 실제로 소멸한 지역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어떠한 예측성도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2-4]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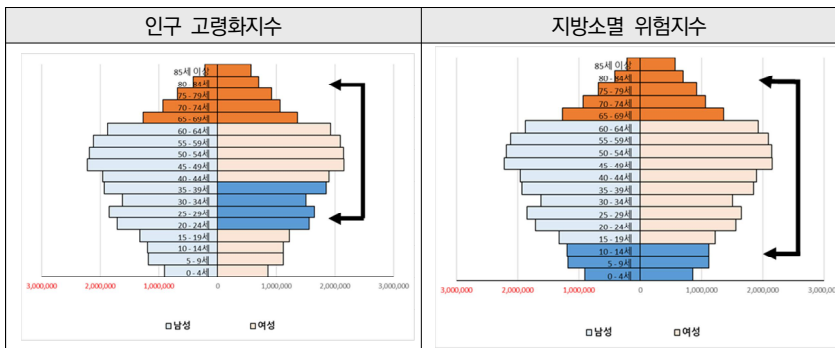
① 2017년	② 2047년	③ 2067년	④ 21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12): 전남(4) 고흥, 보성, 함평, 신안 경북(6)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경남(2) 남해, 합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위험 진입(72): 서울(23) 종로, 성동, 중랑, 은평, 서초, 강서, 송파 등 부산(3) 부산진, 강서, 연제 광주(3) 북, 서, 광산 인천(6) 중, 연수, 남동, 부평, 서 대전(2) 서, 유성 등 대도시구가 소멸위험 진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위험 진입→고위험(59): 서울(15) 노원, 금천, 종로 등 부산(2) 연제, 부산진 광주(2) 북, 서 인천(5) 남동, 부평 등 대전(1) 서 대구(2) 북, 중 등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를 제외한 221개 시군구가 고위험 단계 * 서울(4) 강남, 광진, 관악, 마포 부산(1) 강서 광주(1) 광산 대전(1) 유성

자료: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와 대응실태 I(지역). 서울: 감사원. p.30.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인구학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한 맥락을 보여주면서 널리 사용되는 인구 고령화 지수(population aging index)와 구조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수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노인인구 규모와 ‘장차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성인구’에 대한 비를 보여주고, 인구 고령화 지수는 실제로 태어난 아동 인구의 규모를 대비시켜 산출된다.

실제 수치에서도 그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들의 소멸위험 지수와 고령화 지수 간의 상관관을 살펴보면 기울기 1에 근접하는 추세선이 그려진다. 특히, 소멸위험 지수가 0.5 이하로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해당한다는 지역들만으로 대상을 한정시켜 보면 그 유사성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와 같이 사실상 대체가 가능한 두 지표이지만, 어떠한 인구학자도 인구 고령화 지수가 특정 수준 이하이면 ‘해당 몇 년 안에 지역은 소멸될 것’이라는 식의 해석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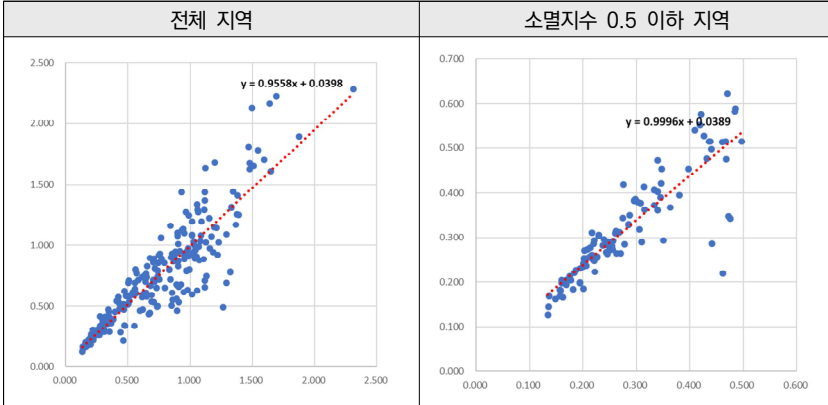
[그림 2-5] 인구 고령화 지수와 지방소멸위험 지수의 산출 개념 설명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에서 2021. 4. 8. 인출.

[그림 2-6] 인구 고령화 지수와 지방소멸위험 지수 간의 상관성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에서 2021. 4. 8. 인출.

사실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인구변동에 따른 지방의 인구소멸 위험을 나타낸다는 설명과는 달리 지역인구 고령화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킨 지표에 불과하다. 이 지수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인구위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의의는 있지만, 정작 이 지표는 인구 관련 자료를 활용한 인구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구의 변동이 갖는 복잡성을 간과한 채 인구변동의 현재적 결과를 미래 변동의 방향으로 왜곡하는 문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밀도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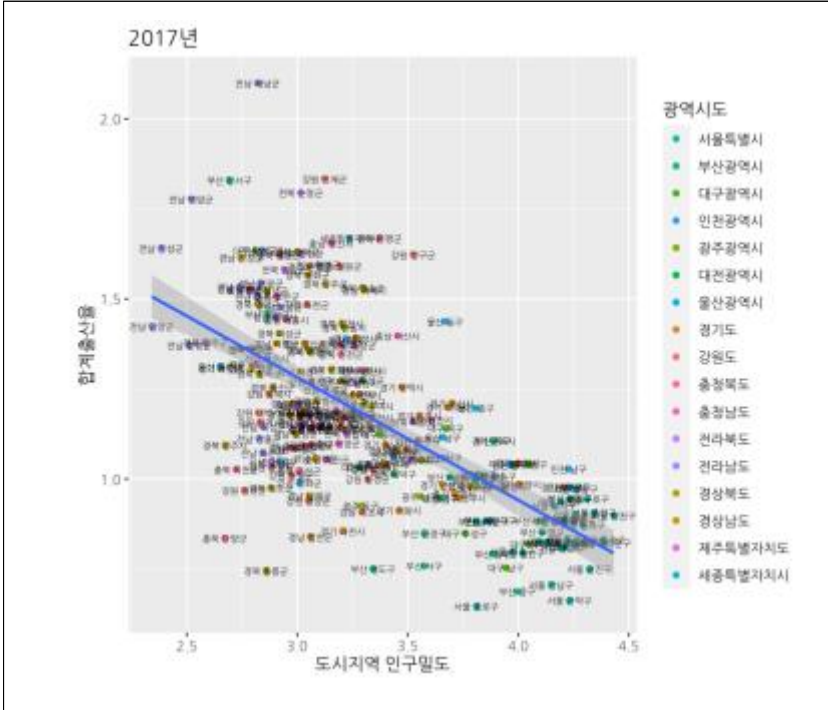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경제(예: 실업률, 주거비용)·인구(예: 혼인, 출산연령)·사회적 가치(예: 혼인 또는 출산에 대한 태도)·제도

(예: 복지 및 젠더) 등의 개인 또는 지역 단위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을 인문학적, 심리학적, 사회 발전사적 맥락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 중 하나로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이 접근은 인간이 갖는 본원적 욕망으로서의 개인의 생존과 집단의 존속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낮은 수준의 출산 의도를 설명한다. 경쟁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집단의 존속(출산)보다는 개인 개체 생존 또는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장대익, 차영재, 이민섭, 장재경, 2020; 조영태, 2021).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출산 의도는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인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출산 의도가 높은 개인들의 출산 행위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낮은 출산 의도 자체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장대익 외, 2020).

장대익 외 연구(2020)에서는 이러한 심리학적 설명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군구별 도시 지역의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지역의 인구밀도는 학업, 일자리, 주거 등의 경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실제로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의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그림 2-7] 시군구 수준 도시지역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을 상관관계 그래프(2017)



자료: 장대익, 차영재, 이민섭, 장재경. (2020). 우리나라 초저출생의 심리적 원인: 인구밀도로 인한 사회적 경쟁 및 수도권 집중을 중심으로. 감사원 연구용역 과제(990-20200004). 서울: 감사원. p.20.

이와 같은 심리학적 관점의 설명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설명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정책에 있어서도 개별 지원사업 위주에서 더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들의 접합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인구담론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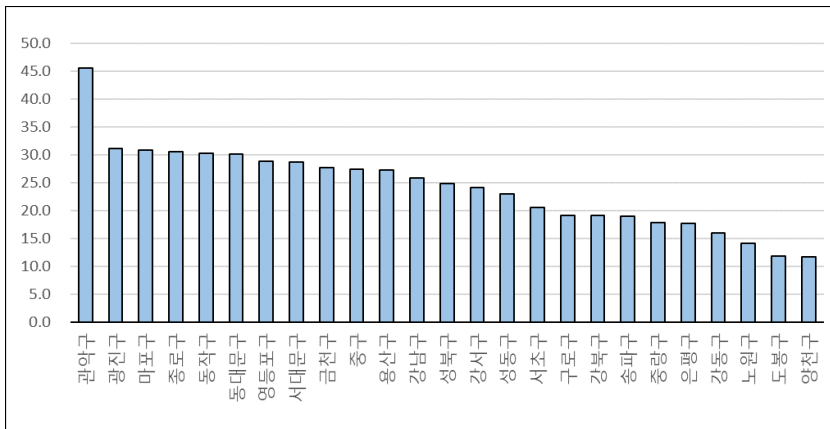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의 성과와 의의와는 별개로, 과연 지역 차원의 분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군구 단위의 거주지가 청년세대가 당면하는 경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34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단위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특히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거주지와 일터 또는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 구지역의 20~34세 청년 인구 100명 당 1인가구 수를 살펴보면 관악구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관악구가 지방에서 유입되는 청년인구가 서울로 진입하는 게이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원룸촌 구성으로 인한 저렴한 거주 비용과 청년거주 네트워크의 구성은 그리 높지 않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정착하며 거주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청년인구를 수용할 만한 산업이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상당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8] 서울시 구지역 청년인구 중 1인가구 비율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인구부문-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시군구(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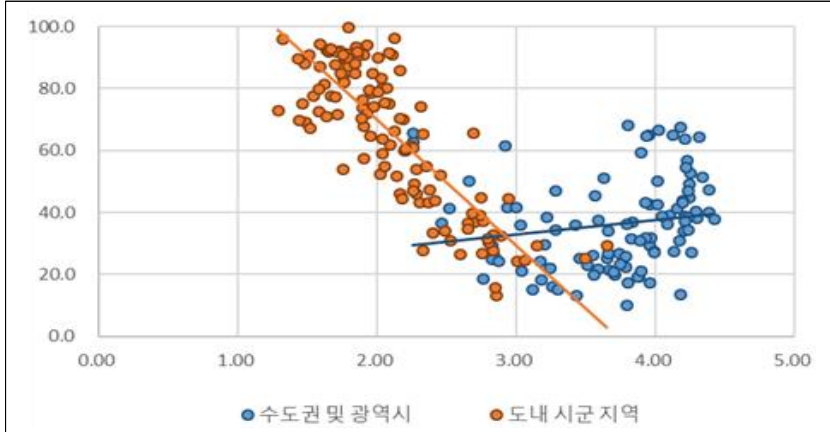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9&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한편, 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의 인구밀도 분포를 살펴보면 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지역별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부산 수영구, 대구 서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등인데, 이들 지역은 자신이 속한 시도에서 대표적인 오래된 저층 고밀도 거주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앞서 관악구 사례처럼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고, 더불어 도시 내 낙후지역의 특성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시군구의 인구밀도와 비아파트 주택 비율 및 노인인구 비율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설적 설명들을 뒷받침해준다. 도시화 정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들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비아파트 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의 밀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신도시 지역에서는 밀도가 높지 않고, 반대로 저층 주거 지역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허가되면서 밀집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맹다미, 장남종, 백세나, 2016). 반면, 도 내 시·군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비아파트 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비아파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서지역인 전남 신안군과 경북 울릉군, 그리고 산지가 많은 경북 영양군으로 모두 95.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36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그림 2-9] 시군구 인구밀도(로그)와 비아파트 주택비율의 상관관계



주: 수도권 내 군지역(강화, 양평, 용진, 가평, 연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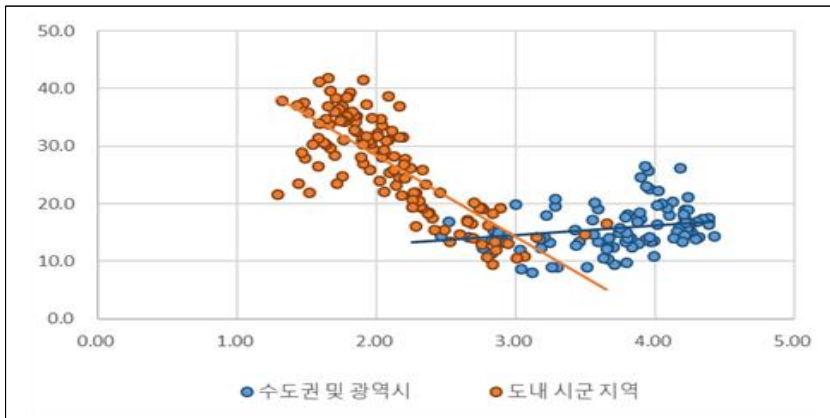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시통계-인구-성 및 연령별 인구와 인구밀도(2018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1N_2013_A00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총조사-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주택의 종류별 주택-읍면동(2015, 2020), 시군구(2016~2019)(2018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그림 2-10] 시군구 인구밀도(로그)와 노인인구 비율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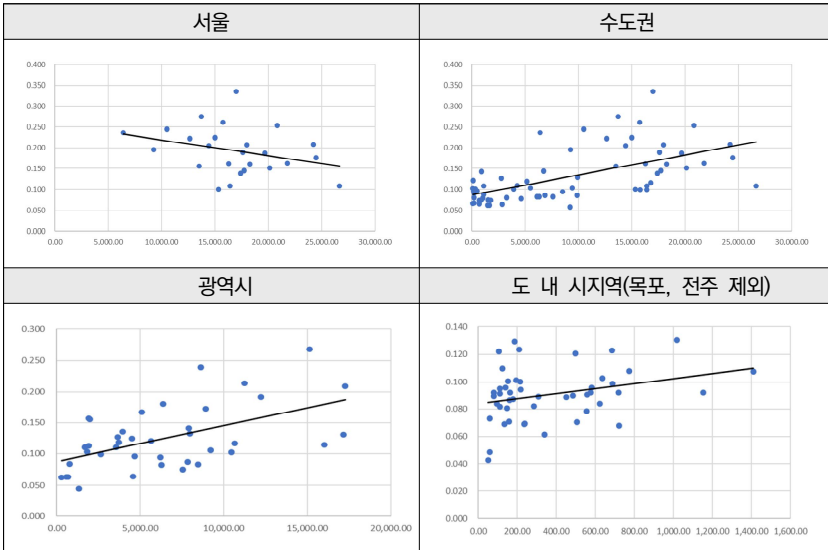


주: 수도권 내 군지역(강화, 양평, 용진, 가평, 연천) 제외.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시통계-인구-성 및 연령별 인구조사와 인구밀도(2018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1N_2013_A00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인구부문-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시군구(2018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9&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이러한 고밀도 지역은 저층 고밀화와 고령화 지역의 인구지리적 특성과 함께 젊은 여성인구 중 1인가구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군구별 지역의 인구밀도와 30대 여성인구 중 1인가구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역관계가 형성되지만, 광역시, 서울 포함 수도권, 도내 시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양(+)적 관계가 나타났다.

[그림 2-11] 인구밀도와 30대 여성 1인가구 비율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시통계-인구-성 및 연령별 인구조사와 인구밀도(2018년)[데이터파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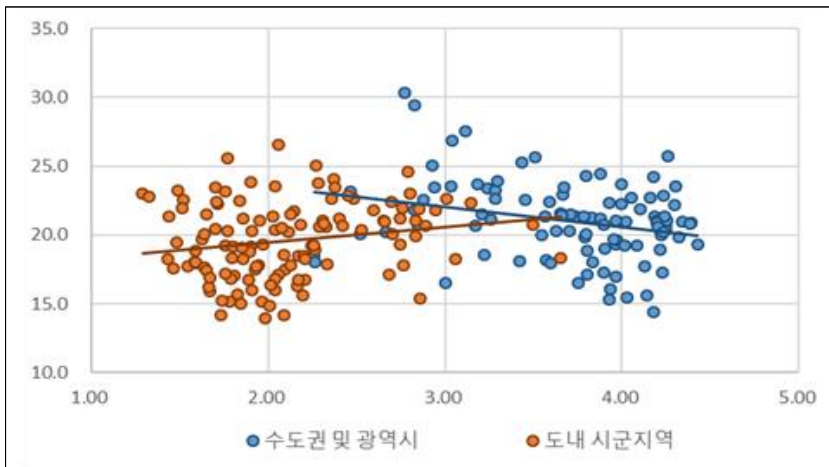
38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1N_2013_A00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가구부문-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반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들은 부산 강서구·기장군,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유성구, 그리고 경기도 내 도시 중에서는 화성·광주·이천 등인데, 이들 지역은 반대로 시도 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된 대표적인 아파트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은 자녀 양육 세대 특히 신혼부부가 거주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의 80% 이상이 신혼부부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저밀도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인구구성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지역의 인구밀도와 30대 여성 중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인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신혼부부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2] 시군구 인구밀도(로그)와 30대 여성 중 신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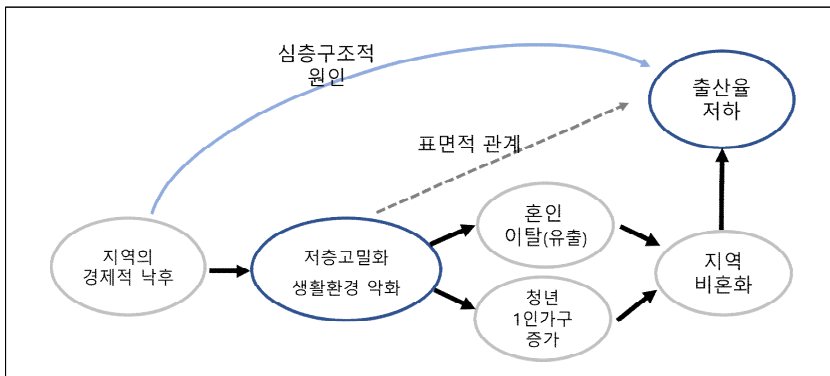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시통계-인구-성 및 연령별 인구와 인구밀도(2018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1N_2013_A001&conn_path=12에서 2021. 5. 14. 인출.
 2)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이와 같이 1인가구가 고밀도 지역에 거주하고, 신혼부부가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생애과정에서의 거주지 선택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지역 선택에는 거주비용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혼인이행의 계층적 양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청년세대의 거주지 선택은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낙후된 고밀도 지역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청년세대가 거주하는 경향이, 반대로 쾌적한 주거여건의 신도시 지역에는 혼인가구가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구밀도가 ‘경쟁의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라기보다는 ‘경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3] 지역적 특성(밀도)과 지역 출산율 간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인구밀도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와 같은 설명은 인구학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낙후도가 구성원들의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지리학적 층위에서 지역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의 출산율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지역의 낙후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빈곤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빈곤이 혼인의 기회를 낮추고,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으로 출산력을 낮추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인구밀도, 경제적 낙후도)이 지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것은 인구지리학적 특성으로 인한 구성적 요인¹⁰⁾(지역특성→인구구성)과 개인적 요인의 집합적 결과(경제력→개인의 출산)라는 중층적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시한 ‘지방소멸위험 지수’와 ‘인구밀도와 출산율 상관성’의 두 가지 사례는 지역 단위 인구지표의 사용에서, 지수 이면에 존재하는 인구학적 요인들의 맥락적 연관성과 지역의 인구지리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의 맥락적 연관성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이러한 인구지리학적 특성으로 인한 구성적 요인의 형성에는 인구가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출생, 사망 등의 다른 인구학적 요인이 구성적 요인의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지역 인구자료의 분석과 지수화

제1절 인구지표 간의 관계성 분석

제2절 인구지표의 영역별 지수화

제3장 지역 인구자료의 분석과 지수화

제1절 인구지표 간의 관계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인구변화의 양상을 알아보고, 인구지표들을 다원적으로 재구성하여 인구변화의 현황과 동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겠지만, 변수들의 군집화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 간의 관계에 의해 실제적 인구변동과는 무관한 임의의 결과를 산출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연구와 정책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구학적 지표들은 그 자체로 인구현황과 동태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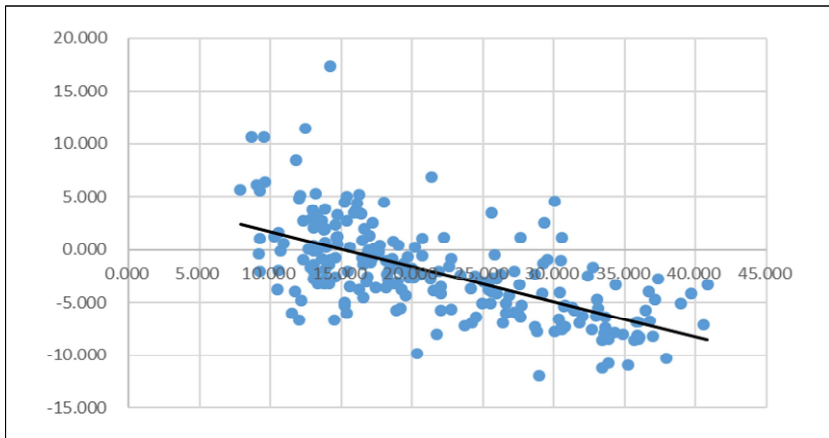
그러므로 유형화의 산출작업 이전에 요인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되는 요인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구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탐색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지역 단위 인구변동에 대한 검증된 이론적 설명이 매우 불충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요인들이 매우 특이한 양상으로 요인 간 상관성을 갖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동태

가. 지역의 고령화(노인인구 비율)와 청년의 유출(순이동)

지역의 고령화 수준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는 오랫동안 진행된 인구변동이 쌓아진 결과로, 지역 인구위기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멸위험 지수’도 사실상 ‘소멸’과 같은 지역의 규모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저출산 등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인구밀도’ 지표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의 고령화 수준은 인구 이외에도 그 자체로 지역의 경제적·지리적 특성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 지역의 고령화 수준과 다른 인구지표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림 3-1]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청년 순이동률 간의 상관관계



자료: 1)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에서 2021. 4. 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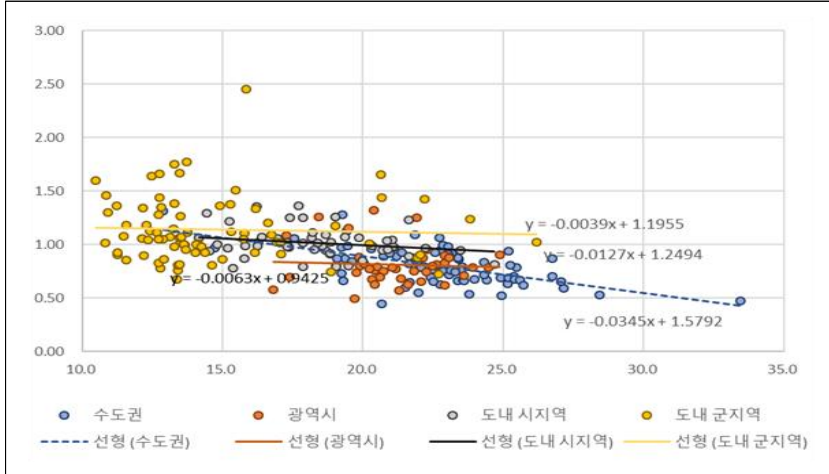
우선 지역 내 노인인구 비율과 순이동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낮은 청년 순이동률(인구유출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이나, 혹은 도시 내 저층 밀집지 등 낮은 인구·경제 활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나 생활 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청년인구의 지속적 유출은 지역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다시 지역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고령화와 인구유출의 관계의 지속은 청년의 유출로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고 활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다시 청년의 유출을 강화하는 부정적 악순환 구조가 구성될 위험성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이 누적되어 온 결과이다. 지역의 고령화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고, 반대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이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단위의 인구구조 고령화를 출산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고령화와 이것의 계속된 심화 구조를 잘 설명하여 준다. 한편 지역의 노인인구 비중과 청년 순이동 간의 부정적 상관성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지역이나 군지역들 모두에서 일관된 음(-)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46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그림 3-2] 지역 유형별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청년 순이동률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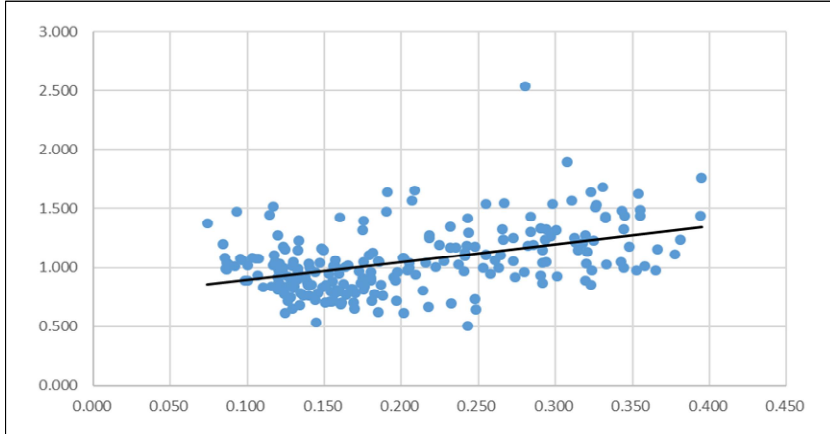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나. 지역의 고령화(노인인구 비율)와 출산력

다음으로 지역의 고령화와 출산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널리 알려졌다시피 고령화 정도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고령화 정도가 낮은 도시 지역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음(-)의 관계를 보인다.

[그림 3-3]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그러나 이러한 상관성을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전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와는 달리 수도권¹¹⁾과 광역시 지역들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 내 시지역들에서는 매우 약한 양의 경향이, 그리고 도 내 군지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양의 방향의 추세선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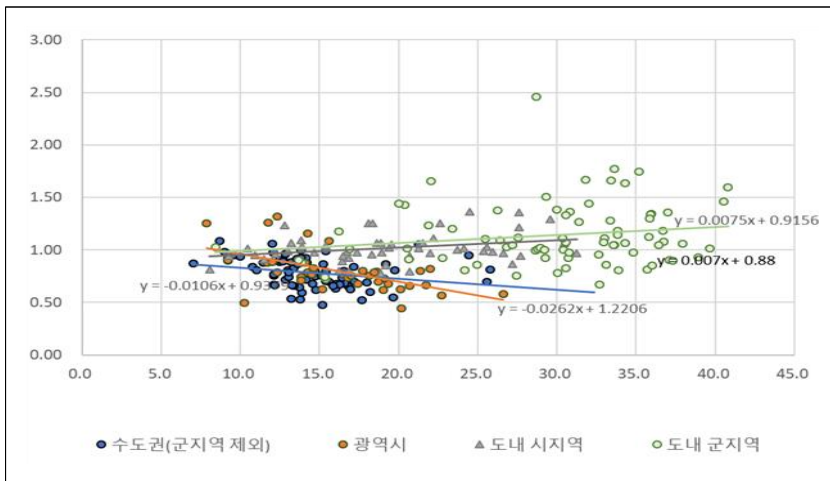
하지만 추가적으로 도내 시지역들에서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상위 20개 지역과 하위 20개 지역들을 따로 구분하여 상관성을 분석해

11) 이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들의 일반적 특성과 다른 고령화 및 출산 양상을 보이는 5개 군지역들을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이 포함된다.

48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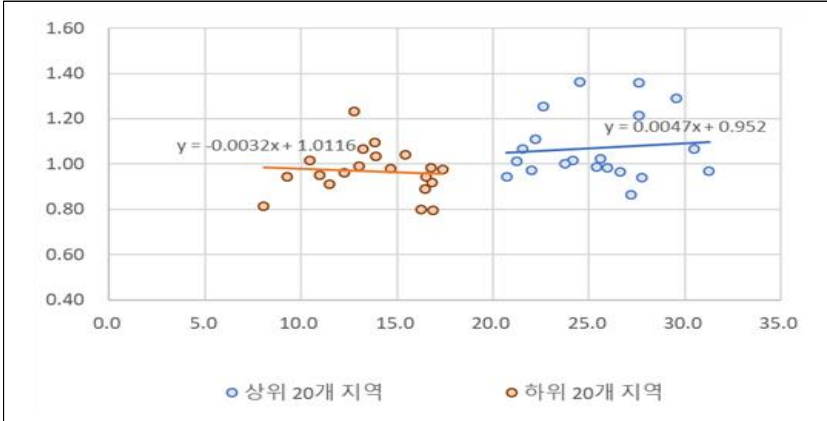
보면, 전자 그룹에서는 앞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의 방향이 부정적 관계로 바뀌었다. 한편 노인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도 내 군지역들에서는 전체 지역 대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성이 유지되었지만, 그 기울기는 훨씬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지역 유형별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 ath=12에서 2021. 4. 8.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 ath=12에서 2021. 6. 3. 인출.

[그림 3-5] 도 내 시지역들 대상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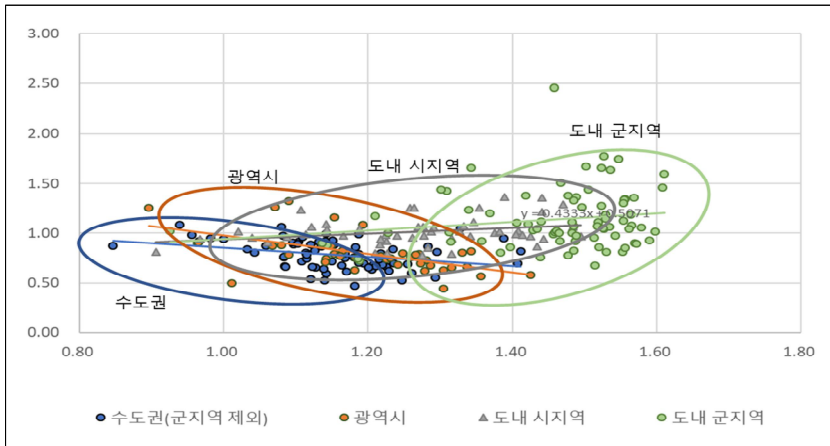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고령화 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등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은 고령화 정도가 농촌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고령화 수준의 다른 지역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지역 특성별로 구분한 분석 결과가 사실상 반대로 나타난 것은, 지역 단위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지역 권역별 클러스터의 위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비율이 낮고, 출산율이 낮은 순으로 수도권→광역시→도내 시지역→도내 군지역 순으로 구성되면서, 권역을 무시한 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권역의 내적인 경향성이 무시되고 권역 클러스터들의 상관성으로 대체되어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지역적 경향성은 지역 간 관계 이외의 구성적 맥락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 지역 유형별 클러스터를 구분한 고령화와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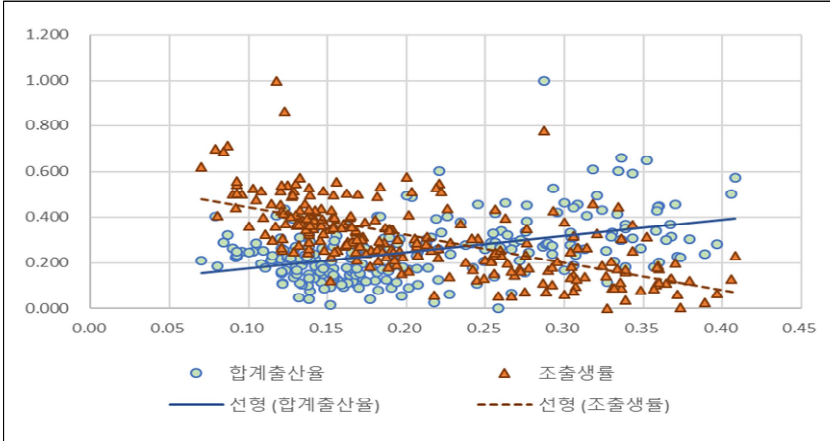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출생은 지역의 새로운 인구가 공급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은 인구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합계출산율은 지역 내 여성 1인당 출산력을 나타내는 개념(fertility rate)이어서, 사실상 지역에 출산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출생률은 전체 지역인구 대비 출생아 수로 비율이 구해지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인구학적 영향(birth rate)을 보여주는 데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림 3-7]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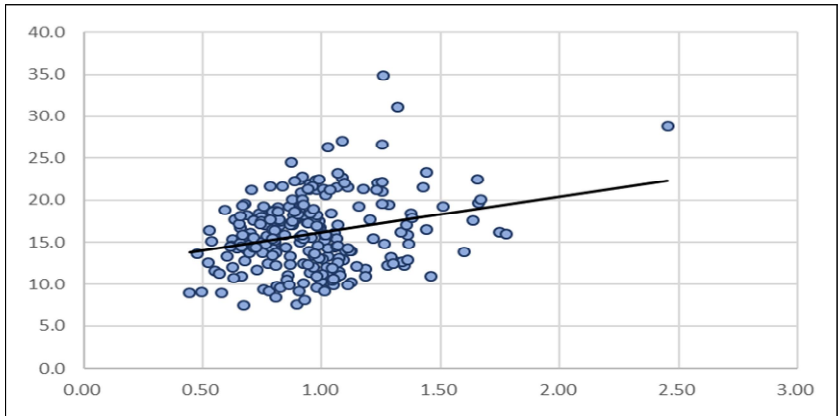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에 관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성을 함께 나타낸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여기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사이에는 지표 수치의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형표준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선형표준화는 수치를 0과 1사이의 범위로 압축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 분포 구조(모양)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분석은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상관성의 비교이지, 두 지표 간의 상관성을 비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출산력 지표의 상관관계 비교 결과를 보면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간의 부적(-)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지표 간의 개념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출산기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록 여성 개인당 출산력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역 수준에서는 그 영향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적인 출산율 수준의 차이(variance)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출산력은 합계출산율이 아닌 지역의 인구구조가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동일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지역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역 차원의 인구변동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합계출산율보다는 조출생률이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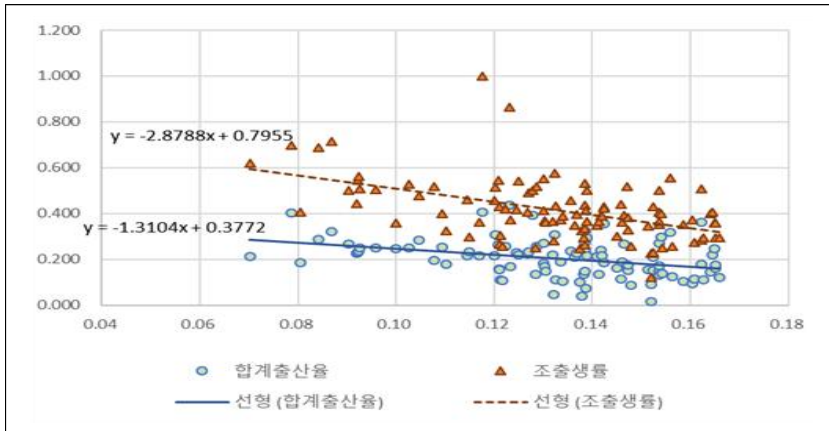
[그림 3-8] 시군구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간의 상관성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그런데 상관관계 비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전체적인 상관관계와는 다른 구성이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체 시군구 지역들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100개 지역을 구분하여 다시 같은 상관관계 비교를 해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인인구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에 놓인 지역들에서는 인구구조의 차이가 출산력의 차이를 왜곡하는 수준으로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개인 단위의 출산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출산력과 관련된 지역인구 변동성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9] 노인인구 비율 하위 100개 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율과 출생관련 지표들의 상관관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 인구변동에서 합계출산율의 다른 주요 인구변동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몇 가지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불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합계출산율은 지역에 걸쳐 일관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 예로 노인인구 비율, 청년 순이동률, 자연성장률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순이동에 있어서는 전체적 상관관계의 방향과 지역 유형별 상관관계의 방향이 모든 유형에 걸쳐 상반되게 나타났다. 청년의 순이동이 지역에 미치는 경향이 출산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합계출산율은 지역의 총인구성장(자연성장+순이동)에 그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연성장률에서도 전체 및 지역 유형에 걸쳐 매우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총인구성장뿐만 아니라 자연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합계출산율은 지역 인구변동의 가장 대표적 지표이지만, 실제 지역의 인구변동(규모 및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매우 특이한 상관성을 보이는 합계출산율은 비록 지역의 출산력에 대한 대표적 지표이지만, 지역 인구변동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분석에 그대로 투입된다면 전체적 유형의 산출에서 왜곡된 결과나 해석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지역 유형별 합계출산율과 인구변동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신혼부부 비율	노인비율	청년 순이동	인구 성장률	자연성장률	전체 순이동률
전국	.599**	.424**	-.221**	.163*	-.262**	.111
수도권	.859**	.123	.124	.589**	.097	.412**
광역시	.983**	-.725**	.460**	.780**	.885**	.501**
도 시지역	.422**	.271	.192	.219	-.044	.298*
도 군지역	.565**	.020	.156	-.024	.267*	-.006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세종, 청주 포함).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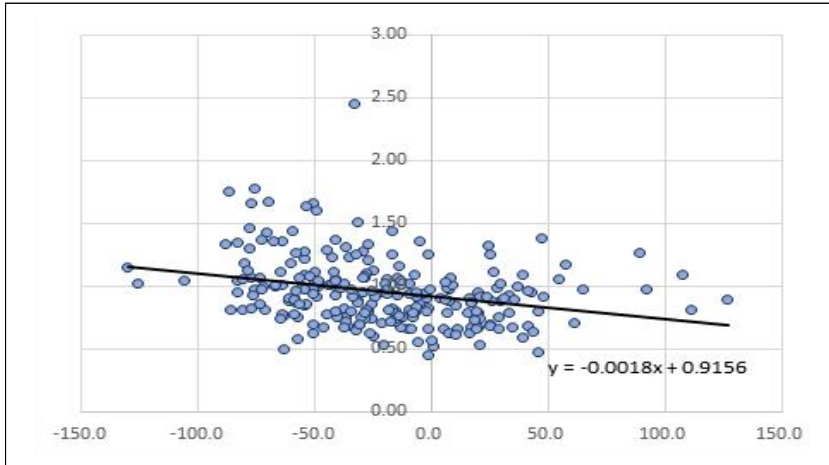
3)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4)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다.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청년의 인구이동(순이동률)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역인구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평가받는 청년의 인구이동과 다른 인구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구이동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면 앞서 출산력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음(-)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구유출 경향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고, 반대로 인구유입이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과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지역유형별로 구분하여 상관성을 살펴보면 상관성은 모든 지역 유형들에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의 유입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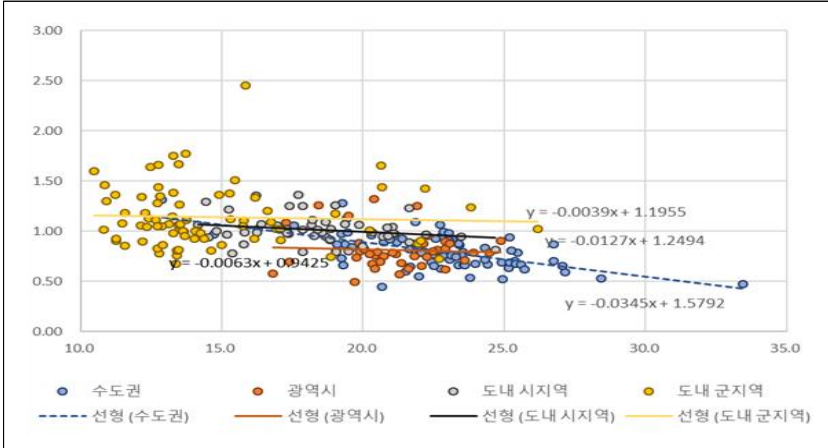
[그림 3-10] 시군구 청년 순이동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3)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그러나 인구유입으로 단순히 청년의 인구규모가 증가한다고 혼인 관련 생애과정 이행(파트너 만나기, 혼인, 첫째아 출산, 추가 출산 등)이 이들 사이의 출산 경향을 높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청년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지역 들을 수도권, 광역시, 도내 시지역, 도내 군지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방향성을 유지한다.

[그림 3-11] 지역 유형별 시군구 청년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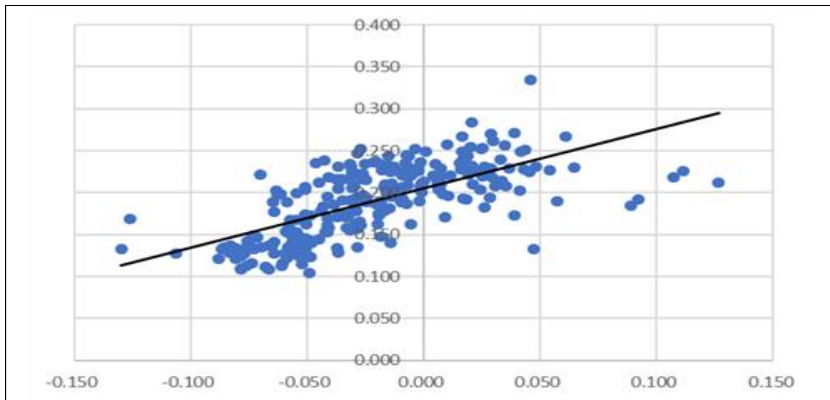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청년인구의 유입률이 높은 지역은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의 유입이 청년의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청년의 유입이 청년인구가 많은 곳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33.5%), 광진구(28.4%), 마포구(27.1%), 동작구(27.1%), 영등포구(26.7%)였으며, 비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원시 영통구(26.7%),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구(24.9%)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들로는 경북 의성군(10.5%), 군위군(10.8%), 전남 고흥군(10.8%), 경북 봉화군(10.9%), 경북 영덕분(11.2%) 등의 인구위기 지역들로 경북 지역과 전남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청년인구의 분포는 청년인구의 순이동과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

[그림 3-12] 시군구 청년 순이동률과 청년인구 비율 간의 상관관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에서 2021. 4. 8. 인출.
2)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청년인구의 순유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동시에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모순적 상황은 지역의 특성(청년들에 대한 흡입요인, pulling factor)보다는 인구가동을 구성하는 청년인구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년기 인구이동에는 혼인 또는 신혼시기의 이주 경향이 강하고, 순유입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예비)부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더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신혼부부 유입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과도 연관된 설명이다. 다시 말해 청년의 순유입 중 신혼부부의 유입이 높은 곳에서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과 인구변동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합계출산율	신혼부부 비율	노인비율	인구성장률	자연성장률	전체 순이동률
전국	-.221**	.268**	-.633**	.606**	.687**	.761**
수도권	.124	.385**	-.454**	.635**	.585**	.863**
광역시	.460**	.493**	-.123	.605**	.367*	.909**
도 시지역	.192	.455**	-.417**	.682**	.511**	.881**
도 군지역	.156	.396**	-.392**	.605**	.426**	.800**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세종, 청주 포함).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4)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5)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청년의 순이동률은 전국 단위 분석에서의 합계출산율을 제외한 다른 주요 인구변동 요인들과의 분석에서도 지역 구분과 무관하게 일관된 상관성을 보인다. 이상의 관계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순유입이 이뤄지는 곳에는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고, 인구의 계속적 유입(순유입) 및 낮은 노인인구 비율(낮은 사망)과 출산이 많이 이뤄져(높은 출산) 나타나는 자연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년인구를 끌어들이며 순유입이 나타나는 지역들에서는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다소 완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전체적 출산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시 지역의 높은 생활 비용 및 높은 진학률, 여성의 경제활동 등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합계출산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의 규모가 갖춰지면서 지역 수준의 출산력(조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더불어 지역에 유입되는 청년의 구성에 따라 출산력 수준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유입 흐름 중에서도 신혼의 기혼부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들은 출산력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들에는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신도시 지역들이 포함된다. 반면 청년의 유입 수준이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미혼상태의 청년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반대로 출산율 수준은 낮아질 수 있는데, 지방청년의 유입으로 1인가구 구성비가 크게 높은 서울의 관악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지역 인구변동의 인구요인의 맥락적 구조는 지역 인구변동이 개별 요인들의 상호독립적 영향들의 총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구의 구성적 변화(component factors) 또는 지역의 인구지리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지역의 인구구조와 규모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인구변동의 지수화 및 유형화를 위해 선택된 요인들은 단순히 그대로 지표화되는 것이 아닌, 이상과 같은 인구요인의 상관성 구조를 반영한 변수화 과정을 통해 유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3. 향후 지역인구 고령화 결정요인으로서의 현재 인구구조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추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50년대 후반부터 높은 출생률로 출생하면서 우리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규모 코호트 군이 오랜 기간에 걸쳐 노인기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는 가까운 장래의 인구구조 변화 특히 고령화의 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인구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라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인구동태만이 분석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구구조가 지역의 장래 인구변동 또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우리의 빠른 고령화가 우리의 인구구조에서 비롯됐듯이 향후 지방의 인구변화 속도 역시 현재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현재의 지역 인구구조가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대략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표 3-3〉 시도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의 변화와 증가율

(단위: %)

구분	2020(a)	2030(b)	2040(c)	a-b 증가율	a-c 증가율
전국	15.7	25.0	33.9	59.2	115.9
서울	15.4	24.2	32.4	57.1	110.4
부산	18.7	29.3	37.1	56.7	98.4
대구	16.0	26.3	35.5	64.4	121.9
인천	13.4	23.7	33.0	76.9	146.3
광주	13.7	22.5	31.9	64.2	132.8
대전	13.7	23.2	32.0	69.3	133.6
울산	12.0	22.9	32.6	90.8	171.7

구분	2020(a)	2030(b)	2040(c)	a-b 증가율	a-c 증가율
세종	9.3	14.8	22.4	59.1	140.9
경기	12.7	21.8	30.6	71.7	140.9
강원	20.0	30.9	40.5	54.5	102.5
충북	17.0	26.6	35.9	56.5	111.2
충남	17.7	26.0	34.9	46.9	97.2
전북	20.6	30.0	39.4	45.6	91.3
전남	23.1	32.2	42.0	39.4	81.8
경북	20.7	31.0	40.8	49.8	97.1
경남	16.5	26.6	36.5	61.2	121.2
제주	15.1	22.5	31.5	49.0	108.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인구추계-시도(2017년 기준)-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중위 시나리오)[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12에서 2021. 4. 28. 인출.

시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은 10~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속도, 다시 말해 지역이 젊어져야 할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의미하는 전체 지역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속도는 이와는 반대 방향의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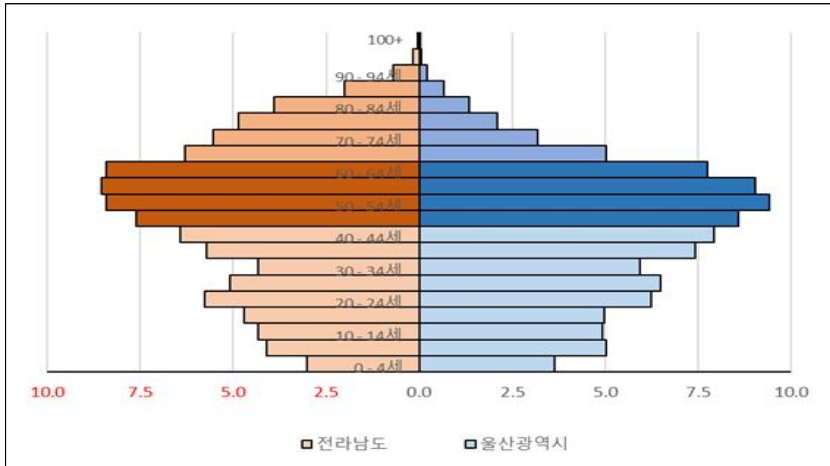
현재 고령화 수준이 낮은 젊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는데, 2020년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지역인 울산(노인인구 비율 12.0%)은 204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2.4%에 이르러 무려 171.7%의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젊은 지역인 세종, 경기, 인천 등도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140% 이상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3.1%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인 전라남도는 2040년까지 81.8%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는 가

장 낮았다. 그리고, 증가율이 100% 이하 또는 그에 근접하는 수준인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부산, 강원 등 6개 지역들은 모두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들이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고령화 수준과 향후 20년 간의 고령화 속도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노인연령 바로 밑에 있는 중년층(45~64세)인구의 규모와 이 인구의 현재 노인인구와의 대비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젊은 인구를 가진 지역들은 중년층 집단의 인구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들인데, 이들 인구가 곧 대규모로 노인기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반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곳들은 이들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미 노인기에 진입한 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년인구의 노인기 진입이 전체 인구구조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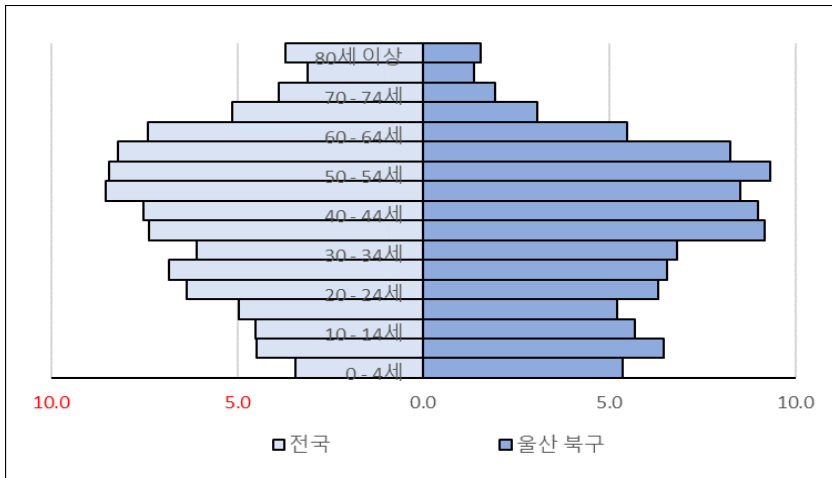
[그림 3-14] 인구구조의 비교: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20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지역의 범위가 좁은 시군구 지역들의 경우에는 인구구조 분포의 구조가 더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의 차이보다 그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 북구는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7.9%로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인구 대비 55~64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향후 10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그러한 빠른 고령화는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울산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 수준이 낮은 지역이지만, 곧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의 수요 급증에 대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 3-15] 전국 인구나 울산 북구 인구구조 비교(20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 h=12에서 2021. 4. 8. 인출.

다시 시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인구구조는 향후 인구구조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양상에는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천과 대전 사이에 2020년 노인인구 비율에 있어서는 매우 작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2040년까지의 증가 속도 차이는 인천과 대전 각각 146.3%과 133.6%로 그 차이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년 이하 연령의 비중과 중년인구 및 젊은 인구의 인구이동 경향(예를 들어 청년층의 지속적 유입 또는 중년인구의 타지역으로 이주)에도 향후 인구구조의 진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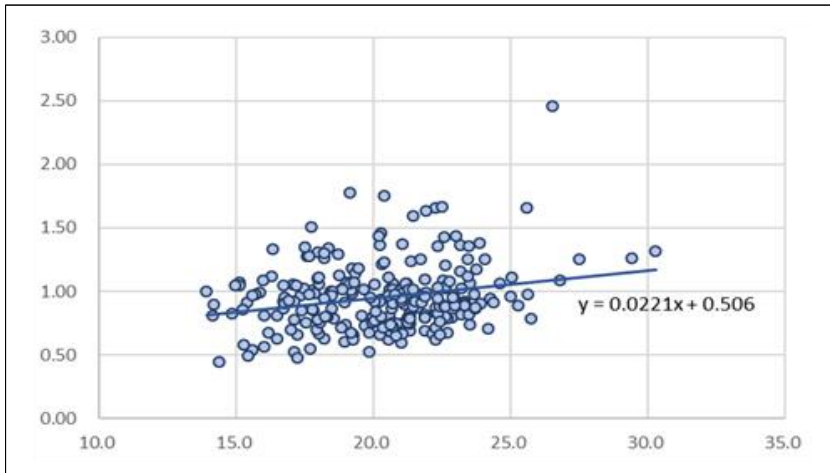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구변동 요인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의미하지만, 인구변동의 의미를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 속도와 수준으로까지 확대한다면 현재의 인구구조 역시 매우 중요한 변동요인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의 인구구조에 코호트 집단 차원의 최근 인구변동 경향(인구이동 및 사망)을 반영한다면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산을 결정요인으로서의 신혼부부 비율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98.0%)의 출산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며, 특히 전체 출산의 80% 이상은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출산연령 여성들 중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높은 출산율로 이어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혼부부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전체 30대 여성인구 중 혼인기간 5년차 이하의 신혼상태(유배우)인 여성들의 비율을 구해보았다. 연령 범위를 너무 넓게 정의하면 연령구간별 미혼 비율과 신혼기간 초과 여성들의 비율들이 뒤섞일 염려가 있어, 가장 출산이 많이 일어나는 3대로 연령 구간을 제한하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달성구(34.2%), 부산 강서구(29.4%), 울산 북구(27.5%), 경기 화성시(26.8%) 등의 대도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들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 신도시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20개 지역들 중에서 군단위 지역은 전남 영광군(26.5%)과 전북 순창군(25.6%) 두 곳에 불과하였다.¹²⁾

[그림 3-16] 30대 여성 중 신혼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성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안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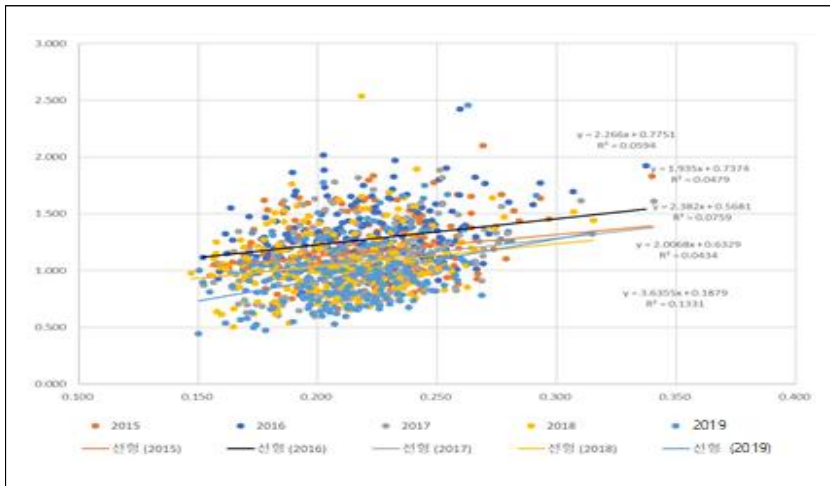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12) 이 분석은 내국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이 수치가 실제로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분석 기간을 확장하여 신혼부부통계가 제공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상관계수 및 설명력(R^2) 수준이 매년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나온 수치 등락인지 아니면 출산준비 부부의 증가 → 출산의 해소로 이뤄지는 구조적 기저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신혼부부 비율은 최근의 혼인 경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건수의 증감과 출산의 연관성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3-17] 시군구 30대 초반 여성 중 신혼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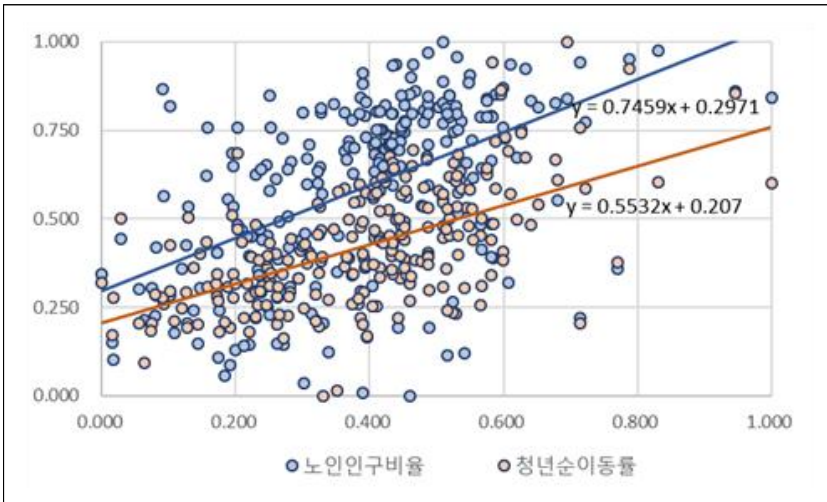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5~2019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2) 통계청. 2015~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5~2019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합계출산율과 양적 상관성을 보인 신혼부부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과 청년 순이동률과도 상관을 나타낸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30대 여성들 중 신혼의 비율이 낮았고, 청년 순이동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거주 환경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혼부부의 비율은 출산력 자체를 설명하는 출산력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의 출산여건을 반영하는 주요 배경변수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상관성과 이론적 설명력을 보이고, 다른 관련 지표들과도 상관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된다.

[그림 3-18] 신혼여성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 및 청년 순이동률의 상관성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2)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 3)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그러면 신혼부부의 비율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혼인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을 것으로 단순화하기 쉽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출산정책으로 지역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지역의 혼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지역 청년들의 혼인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혼인에 의해 주거지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지역에 거주하던 여성과 B지역에 거주하던 남성이 혼인하면서 가정을 C지역에 꾸리게 된다면 혼인율은 C지역에 반영되었지만, 남녀 각각의 거주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혼인력을 보여주지는 않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인과 거주지의 변화를 반영한 ‘혼인 이동률’을 산출해보았다. 이를 위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샘플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혼인연도와 1년 전 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혼인연도가 2015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 시점이 2015년 1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혼인한 경우를 특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1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차이를 비교하여 혼인을 통해 거주지 이동이 일어난 사례들을 추출하여 지난 10개월 간 혼인한 청년들(여기서는 25세부터 34세로 특정) 중 지난 1년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혼인건수나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이동건수 등을 비교해볼 때 상당한 수준의 과소 표집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년 전 거주지 응답이나 혼인 시점에 대한 응답이 부정확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³⁾ 특히 혼인건수가 매우 적은 군지역들에서는 이동 사례가 0건인 경

13) 혼인 이동의 과소표집은 응답의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최근 혼인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및 지자체 공무원 등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용의 상승과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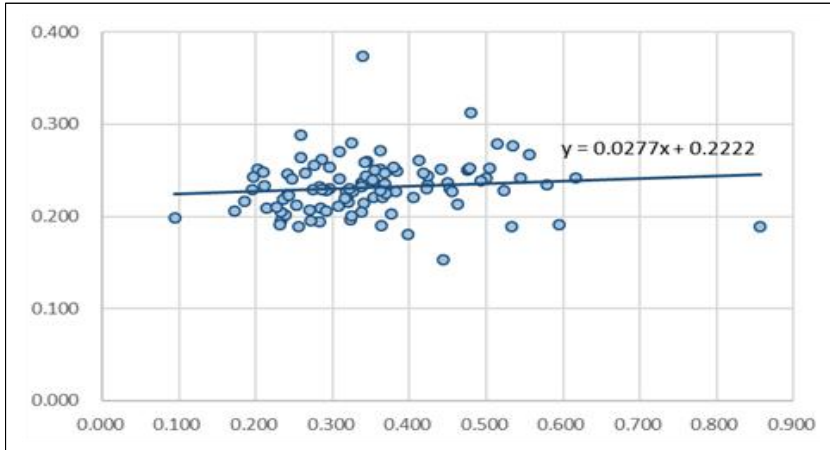
우도 진안군, 청송군, 군위군 등 10곳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따른 거주지 변화의 대략적 경향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혼인으로 인한 유입(지역의 2015년 혼인자들 중 1년 전 거주지가 현재와 다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연천군(85.7%), 인제군(83.8%), 양구군(75.4%) 등으로 모두 군 주둔이 많은 곳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혼인기 간부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주로 남편)의 근무지역으로 이주한 온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출된 수치상으로는 혼인 유입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군단위 지역들이었는데, 혼인건수가 많지 않아 신뢰성이 의심된다.

혼인건수가 많아 비교적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도권 도시 지역들 중에서는 하남시, 김포시, 용인시, 양주시 등 일부 지역만이 상위 20위 지역들에 포함되어 있었고, 광역시 중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없었다. 수도권과 광역시들만을 대상으로 혼인 유입률과 신혼부부 비율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혼인 유입이 높은 지역일수록 신혼부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신혼부부 비율은 지역의 신혼부부 유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 데이터에서는 혼인 유입 비율이 대부분 50% 미만으로 나타나, 이 데이터 분석상으로는 지역 혼인력의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자료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 혼인을 앞두고 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주거를 마련하면서 혼인신고나 결혼식 이전부터 사실상의 동거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에서는 실제 혼인생활이 이뤄진 시점을 혼인연도로 특정하였지만, 실제 혼인 시작시기를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았던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9] 혼인 유입 비율과 신혼여성 비율의 상관성



주: X축은 혼인 유입 비율, Y축은 신혼여성 비율을 뜻함.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5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20% 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AS(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1072003) 이용.
 3) 통계청. 2015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제2절 인구지표의 영역별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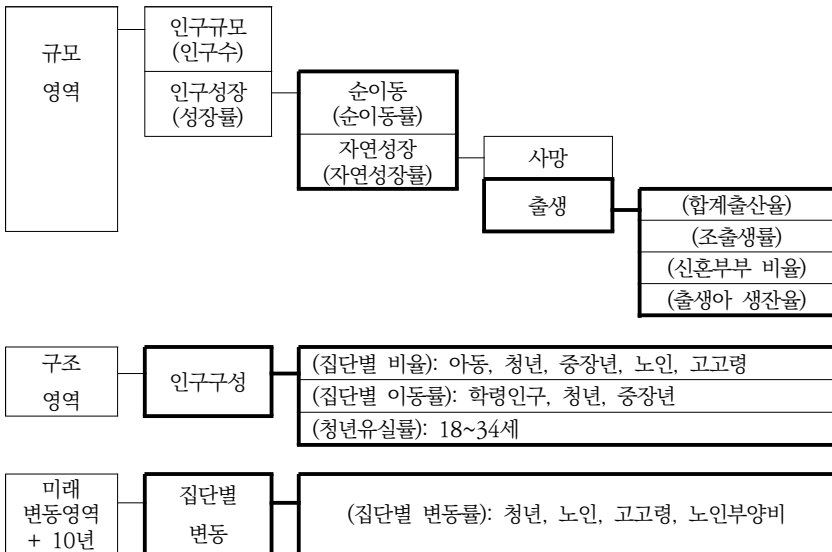
1. 지표 구조의 구성

앞서 논의한 지표 간의 상관성과 인구지리학적 함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지표들을 다음과 같은 관계로 구성하였다. 지역인구 지표의 영역들은 규모와 관련된 성장 영역과 고령화 수준 등의 구조 영역으로 나누었고, 단기적 인구 규모와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역 내 인구 재생산의 의미가 있는 출산력 부분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출산력 부분에는 합계출산율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출산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의 비중을 낮추었다. 사망력의 경우에는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구변동의 3요인 중 하나임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지표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성장률을 통해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역인구 지표 구성의 연구들과는 달리 성장, 구조, 출산력 등 현재적 상황을 보여주는 인구지표들과 함께 미래의 인구변화 측면을 반영하는 미래 변동영역의 지표들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현재의 인구구조와 코호트별로 최근 인구동향을 종합한 코호트 생산율을 통해 10년 후 연령집단별 인구규모와 노인부양비의 변화율을 산출한다. 사용되는 모든 지표는 선형표준화하여 표현되며, 이 연구에서 구성하는 영역별 인구지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0] 영역별 인구지표들의 구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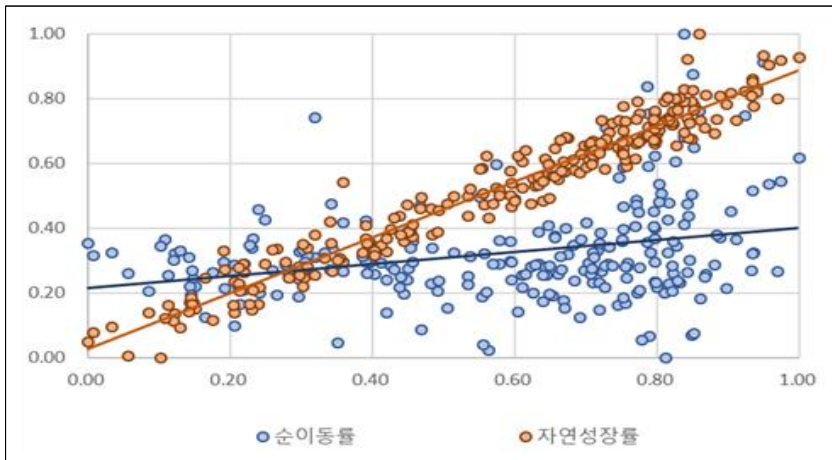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인구지표의 영역별 구성과 지수화

가. 인구성장 영역의 인구지표와 지수화

인구학에서 인구성장(population growth)은 인구규모의 변동을 의미하고, 인구의 증가와 감소 모두를 포함하며, 인구성장률로 표현된다. 1년 단위의 인구성장은 한 해 동안의 인구이동의 최종결과인 순이동과,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간의 차이인 자연성장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인구규모(주로 연앙인구)로 나눈 비율로 제시된다.

[그림 3-21]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순이동률 및 자연성장률 상관성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3)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인구성장 요인은 지역의 고령화 수준과 강한 상관성이 나타난다.¹⁴⁾ 특히 노인인구가 적을수록 자연스럽게 사망건수는 감소하고, 젊은 인구 비율이 커 출산이 증가하므로 자연성장률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인구구조가 젊은 지역들에서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시군구 지역 수준의 노인인구 비율에 관해 자연성장률과 순이동률 모두 양의 패턴을 보이는데, 추세선의 기울기나 오차면에서는 자연성장률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지역인구 성장에 대한 결정력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이동이 자연성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상의 순이동률과 자연성장률을 결합해 구성된 시군구 인구성장 영역 지수의 유형화(사실상의 등급화) 결과의 분포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였다. 이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증가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화 결과의 분포를 보면 충청권의 북부 지역을 경계¹⁵⁾로 이남의 중부 지역들에는 인구성장 영역 지표들이 매우 부정적인 분포를 보이고, 전주와 대전 그리고 대구 등 대도시 주변에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장 양상이 나타난다. 남부 지역들에서는 목포, 순천, 여수, 거제, 부산과 울산의 외곽 구지역들이 긍정적 양상을 보인다.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성장 영역에서 매우 부정적 지표를 보이는 지역들과 가장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는 지역들로 나뉘어지는 불균형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들 권역들 내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지역들의 인구마저 위기가 심화된다면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14) 앞서 선형표준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표준화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젊은 인구구조(낮은 노인인구 비율)임을 나타낸다.

15) 이 연구에서는 세종과 청주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의 인구동향을 볼 때 이들 지역 역시 성장영역에서 상위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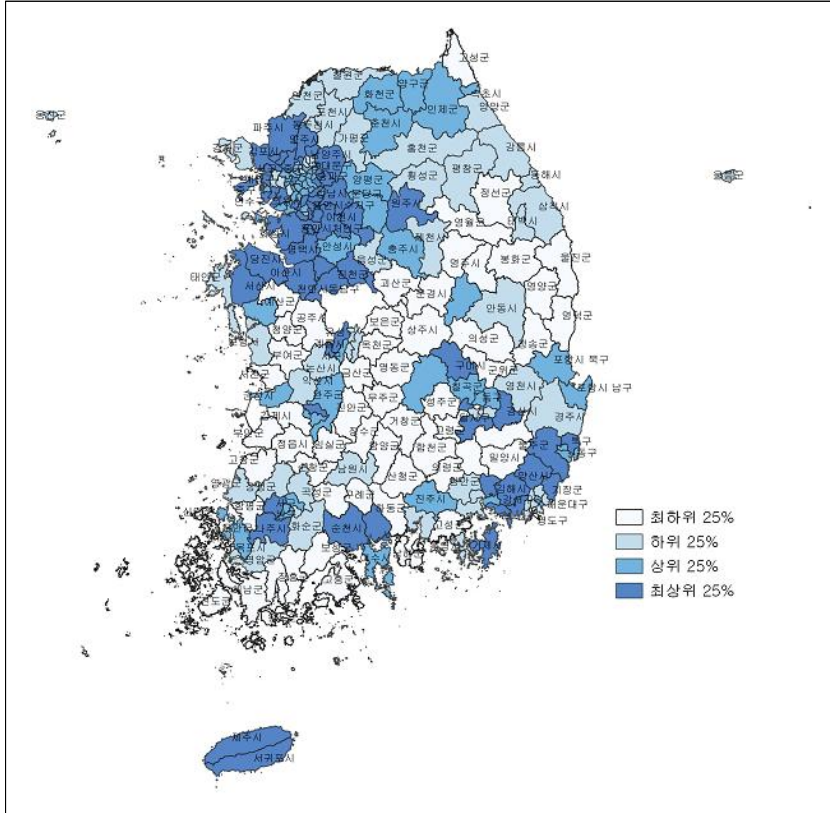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들이 높은 청년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으로의 유출도 심각하여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들에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서울에서 성장관련 지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등 북쪽에 인접한 3개 지역과 종로구였고, 가장 긍정적 양상을 보인 곳은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뿐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인구 순이동, 특히 청년인구의 순이동이 높았고 중장년인구의 유출이 낮았다. 영등포구는 중장년의 유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년의 순유입률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 이러한 순유출을 상쇄하였다.

한편 지방의 권역들에서 인구유출을 잡아주는(또는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광역시들 중에서도 구도심 지역의 낙후로 인한 부정적 성장세(하위 50%)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들로는 부산의 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대구의 서구, 남구, 달서구, 중구, 울산의 동구, 중구, 남구 등이 있다.

한편 충남 공주시와 더불어 세종시에 인접하여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대전의 대덕구 등도 인구성장세가 가장 부정적인 지역 그룹에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들의 이름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심에서 오래된 지역들이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광역시의 외곽지역에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 지역들에는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시 외곽의 인구증가 지역들은 광주시의 광산구, 부산의 강서구와 기장군, 대구의 달성군, 울산의 울주군과 북구, 대전의 유성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해당 광역시의 구도시 쇠퇴지역의 인구를 주로 흡수하는 지역들로, 이러한 인구지리적 관계를 통해 도시 내에서의 불균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 시군구 인구성장 영역 지수의 유형화 결과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3)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나. 출산 영역의 인구지표와 지수화

저출산 현상의 지속성 차원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 관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력은 합계출산율 지표로 표현되는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지역 내 개인들의 출산수준을 보여주는 데는 적합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인구학적 영향을 나타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출산의 결과와 여건 등 출산 관련 인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에서는 출산력 관련 지표들로 합계출산율과 조출산율을 사용하고, 이와 함께 출산력과 관련된 여건 변인으로 신혼여성 비율을, 출산이 지역인구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출생아의 5년 지역 생산율(출생아 생산율)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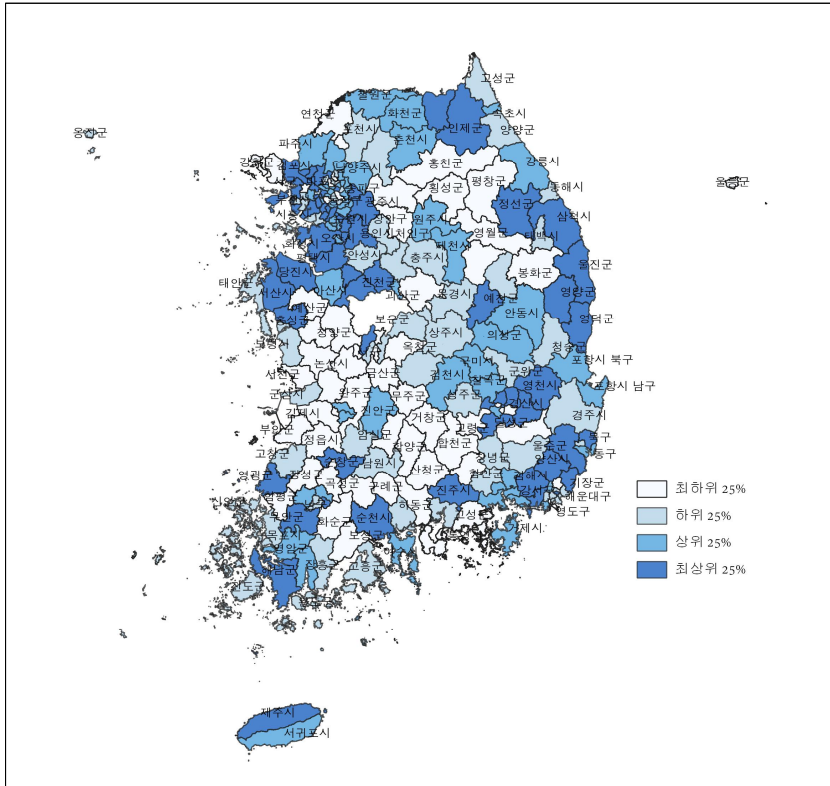
신혼여성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30대 여성 인구 중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하인 유배우 여성들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신혼부부 규모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를 통해 산출하였다. 수도권에서 신혼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 지역들은 서울 서북부의 김포시, 고양시의 하위구들, 서남부의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의 하위구들,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하위구들, 광주시, 하남시 등으로 서울을 서북 및 남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청년 유입이 높은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만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했다. 반면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관악구, 주택비용이 높은 강남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종로구와 강북구는 신혼여성(신혼부부)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부산에서는 인구증가가 눈에 띈 신도시 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의 비

율이 높았지만, 연제구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대구에서는 북구, 동구, 달성군, 광주에서는 동구 등이 신혼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광역시의 신혼부부 분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역 내부의 구·군 지역의 분포보다는 도시 외곽에 높은 신혼부부 비율을 보이는 도시들이 인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들로는 부산의 양산시와 김해시, 대구의 영천시와 경산시, 광주의 나주시 등이다. 이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광역시 지역에서도 혼인시기 또는 자녀 양육시기에 신혼부부의 외곽 이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혼여성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감소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충청/대전 이남의 시·군 지역들이었고, 특히 남서부 지역이 경북을 포함한 동북 지역보다 그 비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별히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인구규모가 작은 순창군만이 신혼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였고, 지역의 청년들이 집중되는 전주시에서조차 두 번째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에 그쳤다.

[그림 3-23] 시군구 출생 30대 여성인구 중 신혼인구 비율(2019)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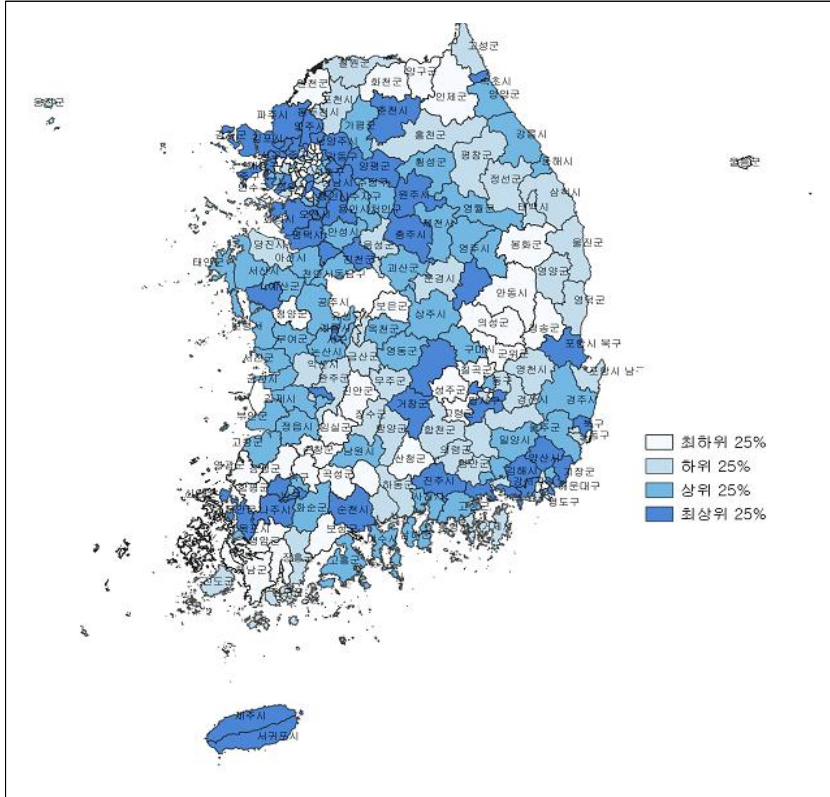
출생아 생산율은 한 해 동안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규모가 5년 후에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시군구의 전체 출생아 수와 2020년 12월 31일 현재 만 5세 인구 수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낮은 영유아 및 아동 사망률 수준을 고려하면 생산율은 사실상 인구이동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생산율이 1.0보다 낮은

경우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의 순유출이, 반대로 1.0보다 높을 경우는 순유입이 일어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출생아 생산율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의 순이동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지만, 이것은 순이동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명인 지역에서 5년 후 5세 인구가 150명이 되었다면, (사망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순이동률은 50%가 되지만, 생산율은 150%가 된다. 그리고 생산율은 인구이동의 영향을 반영하고, 원래의 지역 출생아보다 큰 100% 이상의 수치가 나타난다는 점, 지역에 남아있는 이들이 해당 지역 출생인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망률 지표인 생존율(survival rate)과도 구별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자체 인구 관련 정책에서는 (지역 인구감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되고, 지역의 합계출산율 수준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초지자체 출산장려금의 경쟁적 도입·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아 생산율 지표는 이동성(mobility)이 특이하게 높은 우리 사회의 인구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인구지표가 보여주는 단편적 인구동태의 결과를 넘어 지역의 출산이 지역의 인구에 미친 실효적 영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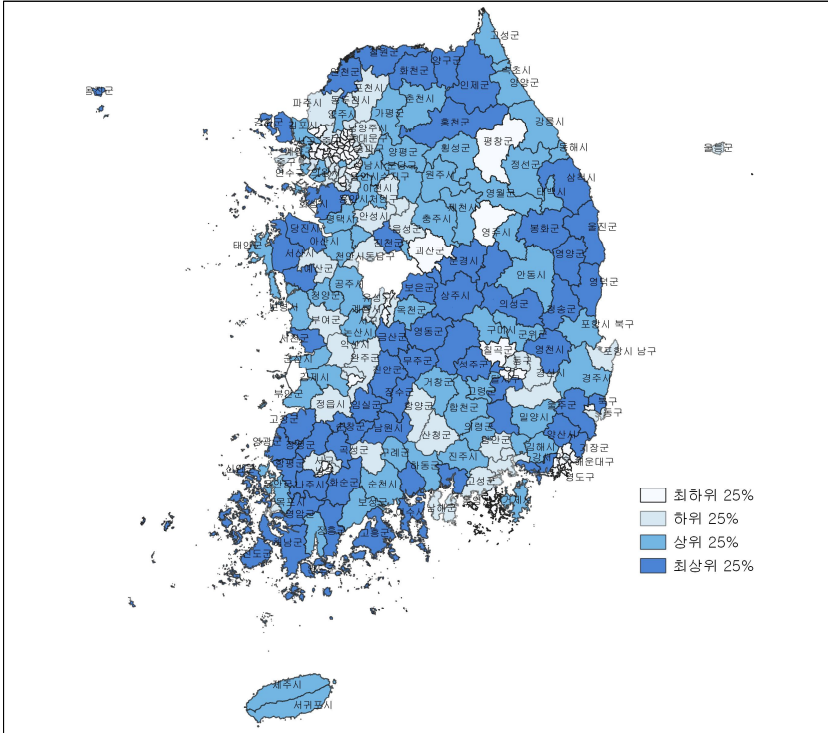
[그림 3-24] 시군구 출생 이후 5년 생산물 등급화 결과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15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그림 3-25] 시군구 합계출산율 등급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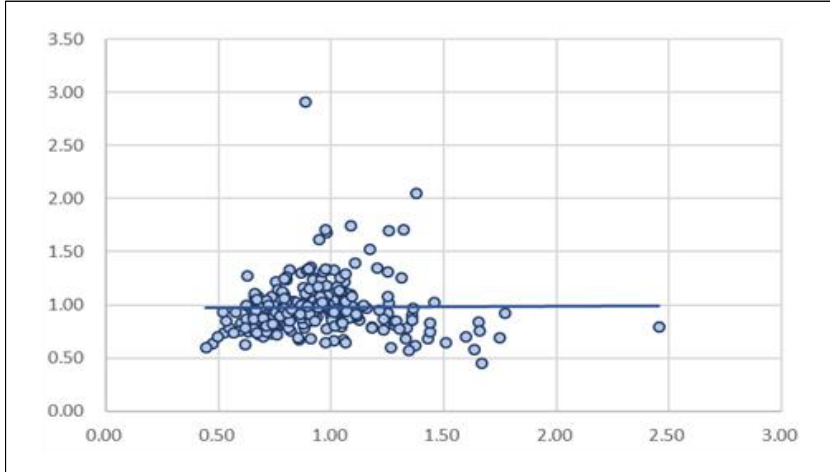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 h=12에서 2021. 6. 3. 인출.

출생아 생산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합계출산율에서는 전남 해남군으로부터 경북 문경시를 잇는 서남-동북의 고출산 축이 형성되는데, 출생아 생산율 분포 지도에서는 전남 나주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이 최상위 집단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북단의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등의 접경지역의 고출산군과, 동해안의 삼척시,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등의 고출산군 역시 생산율의 최상위 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3-26]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산율 간의 관계: 분석 대상 전체 지역



주: X축은 합계출산율, Y축은 출생아 생산율을 뜻함.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에서 2021. 6. 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12에서 2021. 6. 3. 인출.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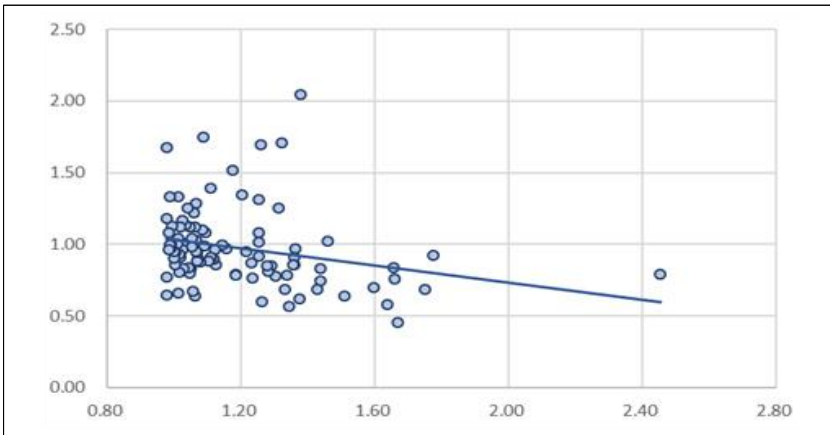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12에서 2021. 6. 3. 인출.

한편, 고출산 지역들이 출생아 생산율 분포의 최상위군에서 제외되고 해서 서울시나 광역시의 저출산 지역들이 생산율 분포에서 순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들은 낮은 수준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생산율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산율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아주 약한 양(+)의 관계는 형성되지만, 사실상 특별한 상관성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을 출산율 상위 100개 지역들과 하위 100개 지역들로 구분해 보면 상관관계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그림 3-27]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산율 간의 관계: 출산율 상위 100개 지역



주: X축은 합계출산율, Y축은 출생아 생산율을 뜻함.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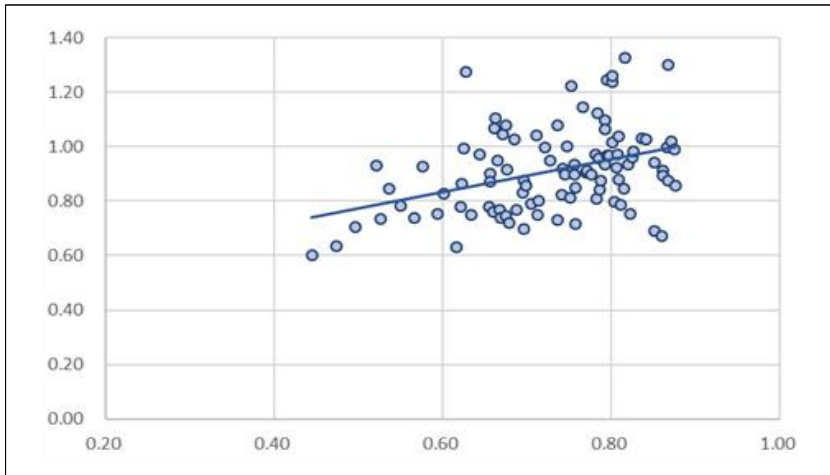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출산율 상위 100개 지역들에서는 합계출산율과 생산율 간의 관계가 뚜렷한 음의 상관성으로 바뀌는데, 이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5세 이하 아동들이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지역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상당 부분(해남군의 경우에는 무려 54.5%)이 지역을 떠

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 군지역들을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방 지역들의 높은 출산율이 지역의 인구성장과 활력에 그리 크게 기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인구지표의 수치를 수치적 차원에서만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며, 또한 인구수치의 결과지표만을 정책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예산의 활용과 실질적 효과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28]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생산율 간의 관계: 출산율 하위 100개 지역



주: X축은 합계출산율, Y축은 출생아 생산율을 뜻함.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반면 출산율이 낮은 하위 100개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출생아 생산율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앞서 상위 100개 지역들과는 달리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생산율 수준을 살펴보면 비록 양적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지역들이 1.0 이하의 수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출산율이 매우 낮은 지역들에서 출생아들의 유출률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실질적 출산(의 인구학적 영향력) 수준은 더욱 심각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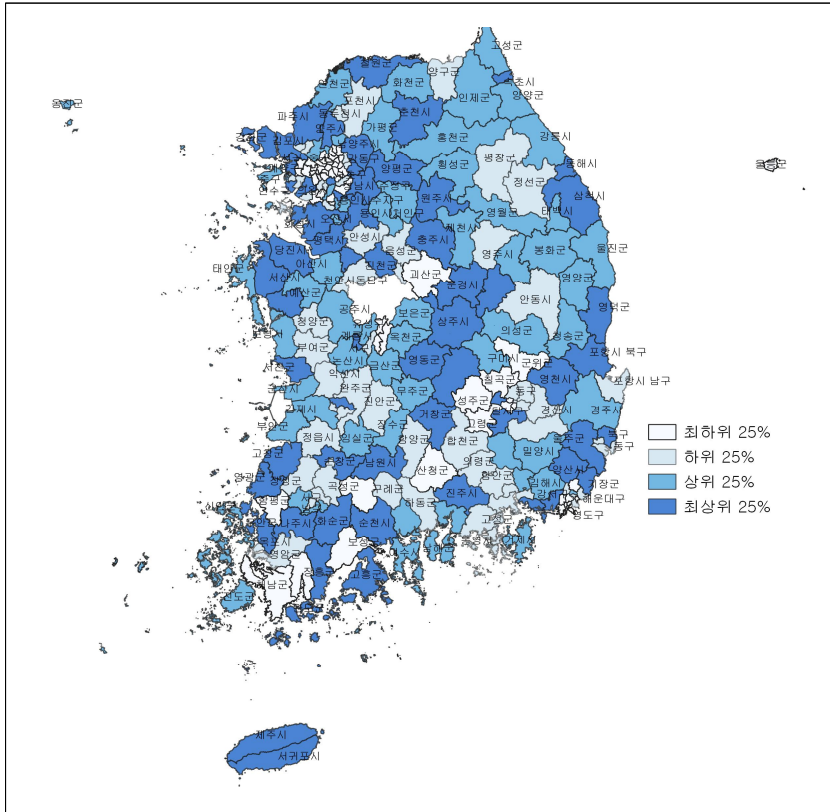
출산율이 낮은 지역들은 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 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앞서 인구밀도에 관한 설명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지역들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저층 고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율이 낮은 지역들은 자녀 양육에서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군 구성 및 생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자녀와 함께 이곳을 떠나는 경향이 강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에 출생아 생산율을 곱해 합계출산율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얼마나 인구학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과 충남의 당진시, 서산시, 전남의 화순시, 순천시, 경북의 상주시, 김천시, 경남권의 양산시나 진주시 등 주로 지방의 중간 수준 규모의 도시들에서 높은 값이 나타난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출산 수준과 유입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혼부부들을 끌어오면서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경기도의 김포시, 화성시,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강서구, 대구광역시의 달성구 등은 생산율 반영한 수치에서도 여전히 높은 값을 보여 태어난 자녀들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출산과 보육 환경, 특히 젊은 부부 세대를 지속적으로 거주시킬 수 있는 지역 환경이 실제적인 지역 인구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3-29] 생산율을 반영한 합계출산율 분포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_ath=I2에서 2021. 6. 3. 인출.
 2)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_ath=I2에서 2021. 6. 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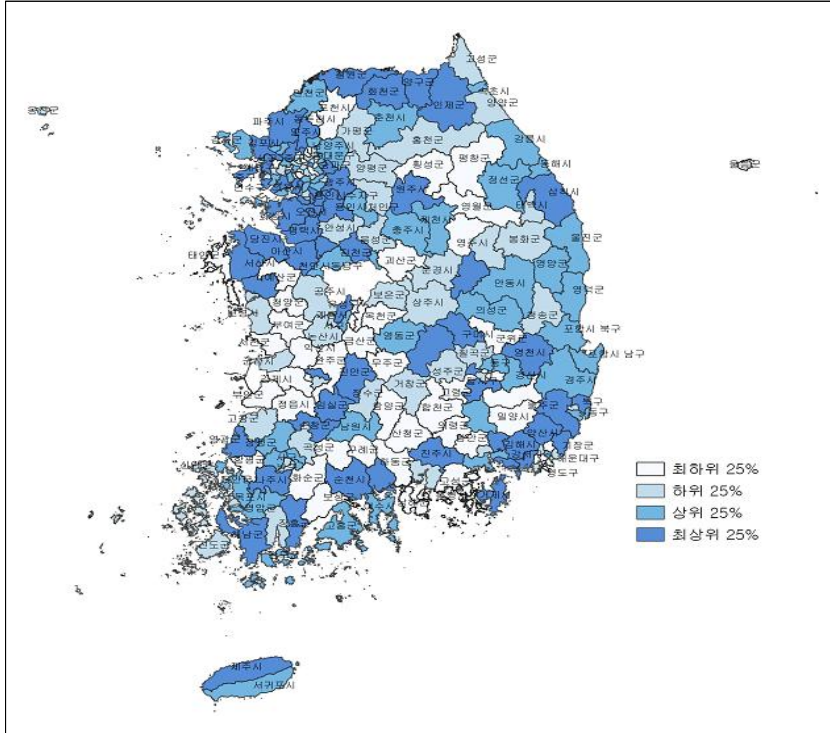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출산력 영역 지표 분석의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신혼부부 비율, 출생아 생산율의 선형표준화 값을 가중치 없이 더해 출산력 영역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출산력 수준의 결과지표, 신혼비율은 출산력에 관한 주요 근접요인(proxy factor) 지표, 그리고 출생아 생산율은 지역인구에 대한 출산력의 실제적 영향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출산력 영역 종합지수는 그 지역의 출산력 수준뿐만 아니라, 출산력 수준을 결정하는 인구학적 여건, 그리고 출산의 실제적 인구학적 결과를 모두 종합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종합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지역은 실제적 출산의 지역적 역량(출산이 실현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인구요건의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산출된 출산력 영역 종합지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90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그림 3-30] 시군구 출산력 영역 종합지수화 결과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4)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5)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출산여건의 전체적 분포는 앞서 합계출산율 분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남서쪽의 진도와 해남부터 내륙 북동쪽의 문경과 예천군을 잇는 고출산율 지역의 띠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의 지역들이 최고 출산율 그룹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청년인구 비율이 낮아 조출생률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순위가 낮아지는 지역들과 출산율이 높더라도 출생아 생산율이 낮은 지역들의 지수값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화순군, 금산군과 무주군 등은 합계출산율로는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전체적 출산여건 지수에서는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반면 생산율과 조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들에서는 종합 지수의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예를 들어 서울의 성동구는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그룹에 속했지만, 종합지수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는 김포시, 파주시, 용인시 하위구들과 광주시 등이 출산여건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순위 변경은 부산 주변의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와 의창구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들 지역 역시 지역의 청년인구 비율과 출산 및 자녀 양육 세대인 청년인구 집단의 인구이동 영향을 받아 출산여건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우들이다. 이와 같이 출산여건을 종합한 지수와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도 지역인구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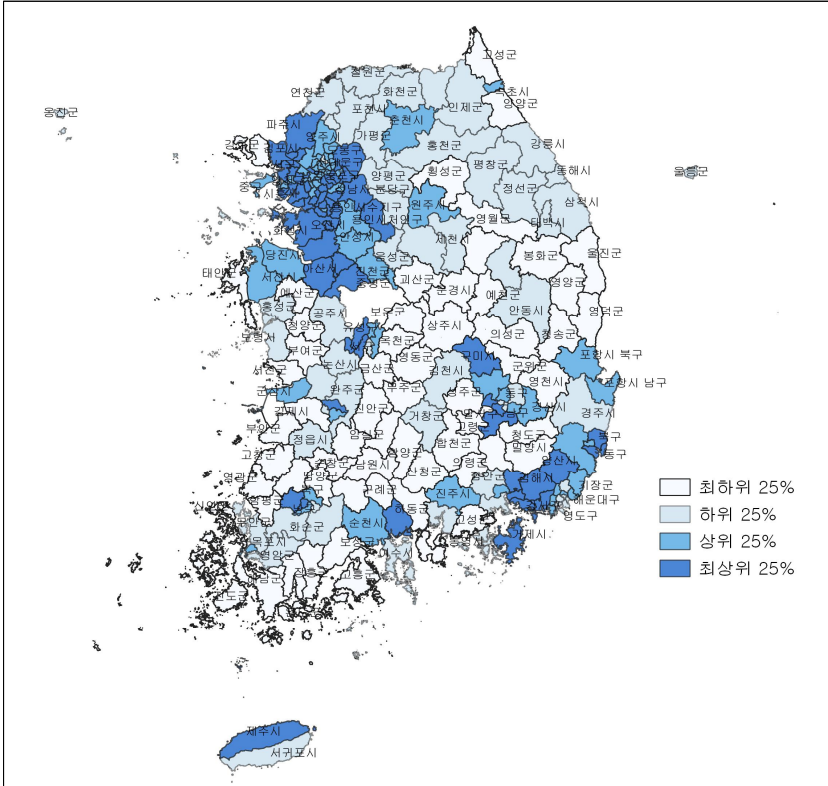
다. 인구구조 영역의 인구지표와 지수화

현재의 지역인구 상황을 총괄하여 나타내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에 대해서는 고령화 수준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 연령대의 인구는 지역에서 육아, 교육, 생산, 취업, 소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고령화에 편중된 인구 기술은 지역의 인구지리적 상황과 연결된 정책·사회적 현황을 보여주

지는 못한다. 여기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종합적 인구구조의 현황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고령화와 관련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값에 있을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젊은 인구구조임을 보여주는데, 상위와 최상위 지역들은 수도권외 대부분 도시지역과 충청권의 일부 도시 지역, 그리고 광역시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지역의 인구감소와도 매우 일치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그러나 광역시들 중에서도 중심부 지역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사하구, 사상구,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 시 외곽의 지역들을 제외한 내부 지역들은 모두 하위 25% 그룹에 포함되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그림 3-31]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 등급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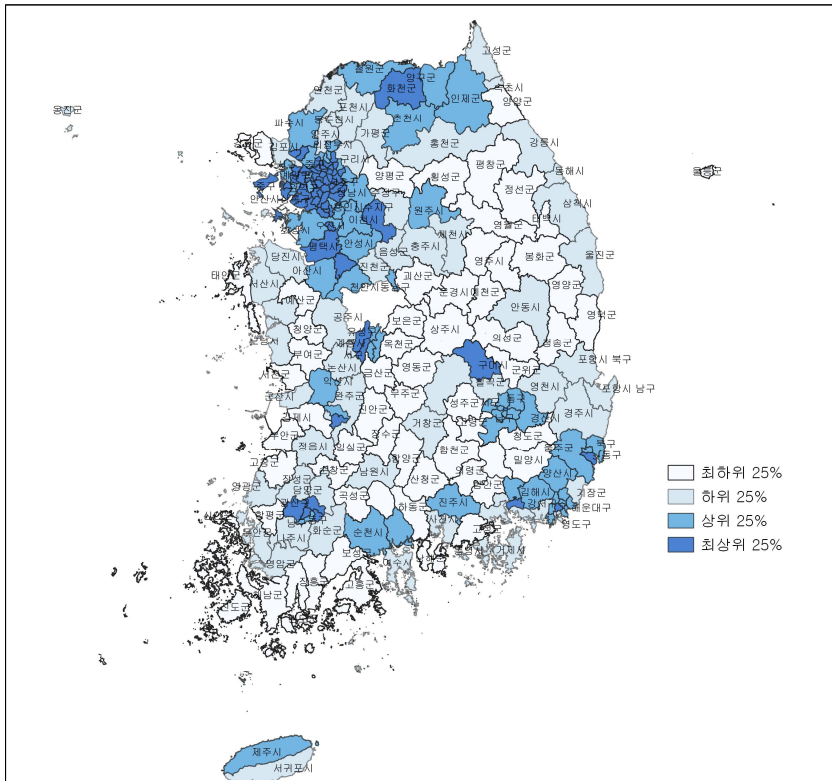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 h=12에서 2021. 4. 8. 인출.

한편 청년인구¹⁶⁾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밀집적 편중 양상을 보였다. 청년인구 비율이 상위 50%에 속하는 지역들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들 이외에는 군 배치와 관련된 화천군, 광역시가 인접해 있지 않은 전라북도

16)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은 19~34세로 규정된다. 하지만 인구변동에서 18세의 인구가동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8세부터 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의 전주시 완산구, 경북의 구미시, 경남의 창원 성산구 등 4개 지역에 불과하였다. 한편 출산율이 높았던 지방 지역들은 청년의 비율이 심각하게 낮았다. 이러한 극단적 인구분포는 출산의 효과가 결국은 청년의 인구가 동으로 인해 불균형하게 재구성되어 극단적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32] 시군구 청년인구 비율 등급화 결과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 h=I2에서 2021. 4. 8. 인출.

인구구조에 대한 종합적 지수 산출을 위해서 15세 이하 아동인구 비율, 18~34세 청년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그리고 지역 인구구조에 중요한 결정요인인 인구이동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장년(35~50세), 중년(55~64세) 인구의 순이동률 지표를 선형표준화하여 종합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지역 전체에 미치는 청년인구 이동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이동률(청년유실률)을 포함하였다. 이 값은 청년의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청년의 순이동률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특별히 이 지표는 합리적 수준의 지표별 가중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주요 요인인 청년의 인구이동의 영향력 비중을 더 강화하는 간접적 지수 관리의 방안이기도 하다.

이 종합지수는 지역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보인다고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젊은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현상적 수준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외의 외생적 요인(인구유입 또는 유출)을 함께 반영하여 지역의 인구구조의 활력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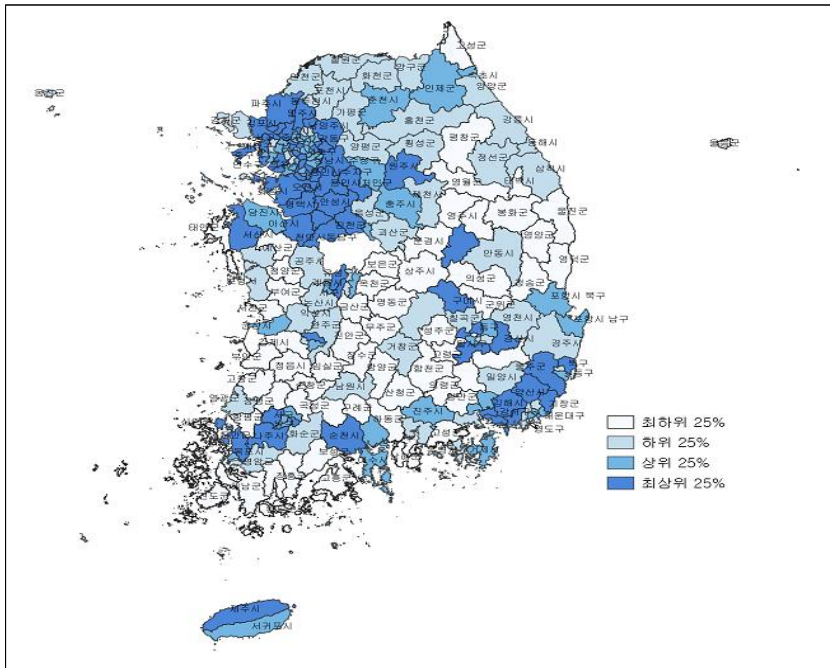
앞서 청년인구 비율에서는 서울 지역이 모두 최상위 집단에 속해 있었으나, 종합지수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상위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높은 청년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혼인 및 양육 시기의 청장년 인구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높은 청년인구 비율을 보였던 회천, 양구 등 접경지역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자녀 양육 세대의 유출로 인해 종합지수에서는 하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나주와 진천 등 일부 혁신도시들도 인구유입의 효과로 최상위 집단에 포함되었다.

반면 신안군, 서산시, 양주시, 원주시, 울주군, 예천군 등 일부 지역들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에서와는 달리 인구구조 관련 종합지수에서는 최상

위 집단에 포함되었는데, 가장 하위에서 최상위 집단이 된 예천군을 제외하면 그 상승 구간의 폭이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에 대한 종합지수는 고령화의 대표 지표인 노인인구 비율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고령화 수준과 청년의 이주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면서 역(-)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인구구조 격차가 인구이동을 통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33] 시군구 인구구조 종합 지수화 결과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2)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인구구조 종합화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중위연령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인인구 비율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 지표는 노인인구 비중에 초점을 맞추면서 64세 이하 비노인 인구의 구조는 사실상 무시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중위연령은 지역 내 전체 인구를 연령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순서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제시하면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평균연령도 비슷한 맥락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고연령 인구가 어린 인구에 비해 지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중위연령의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지표값은 정수가 나와야 하지만, 실제 인구학에서는 일반적 정의보다 더 자세하게 해당 중위 연령 인구 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고려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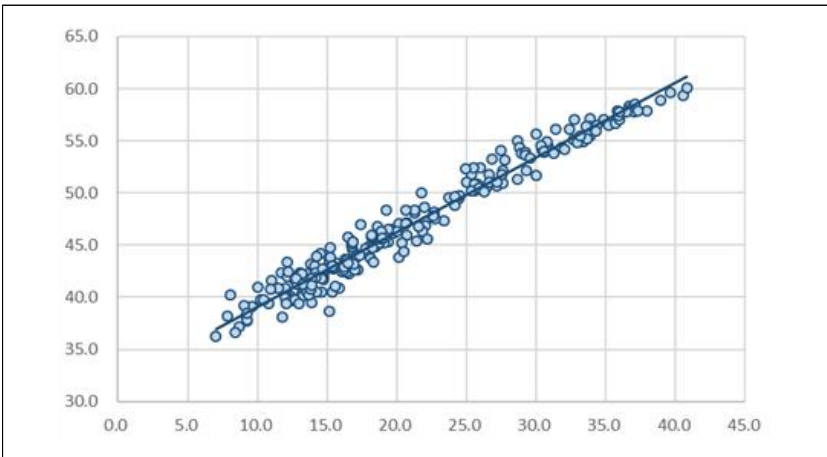
$$\text{중위연령} = a + (N/2 - \sum N_x) / (N_a), \quad (\text{단, } a \text{는 중앙값이 속한 연령, } N_x \text{는 } x \text{세의 인구})$$

이렇게 구해진 시군구 중위연령값과 노인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리 크지 않은 편차 속에서 강한 상관성이 확인된다. 지역 간의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다른 연령대(특히 50대 이하)의 구성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시군구 지역들의 인구구조의 차이는 고령화 수준의 차이이며, 형태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가리킨다.¹⁷⁾ 이와 같이 시군구 중위연령값과 노인인구 비율 간

17) 인구학 분야에서 중위연령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국가(사회)들은 아직도 아동의 연령이 큰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중위연령이 노인인구 비율보다 아동인구의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의 상관성이 크고, 선형표준화 값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반영 지표 산출에서는 중위연령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3-34] 시군구 노인인구 비율과 중위연령의 상관관계



주: X축은 시군구 노인인구비율, Y축은 중위연령을 뜻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 h=I2에서 2021. 4. 8. 인출.

한편 이 종합지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인구변동과 지역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구이동 관련 지표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인구이동은 지역의 규모 및 구조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유입을 꾀하는 유치정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과연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까?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유입되는 청년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더 많기 때문이고, 이는 순유출(net migration)로 표현된다.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인구이동

효과성 지수(Migration Effectiveness Index, MEI)라는 인구이동 지수(지표)를 사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의 비대칭성을 분석해 보았다. 순이동은 한 지역 내에서 인구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이 지수에서는 지역 간 이동의 비대칭성 정도를, 전체 이동(유입 + 유출)의 총량에서 얼마나 인구학적 변화(순이동)가 나타나는가를 통해 보여준다. 여기서 i 는 지역을 D 는 유입(in-migration), O 는 유출(out-migration)을 의미한다(Bell & Muhidin, 2009).

$$MEI = 100 \sum_i |D_i - O_i| / \sum_i (D_i + O_i)$$

인구이동효과성 지수에서는 지역별 인구이동 결과의 총합을 구했지만,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는 식을 변형하여 한 지역에서 청년들의 총이동(유입 + 유출)이 아닌, 청년인구의 유출이 순유출 발생에 기여한 비(유출효과성 지수, OMEI¹⁸)를 산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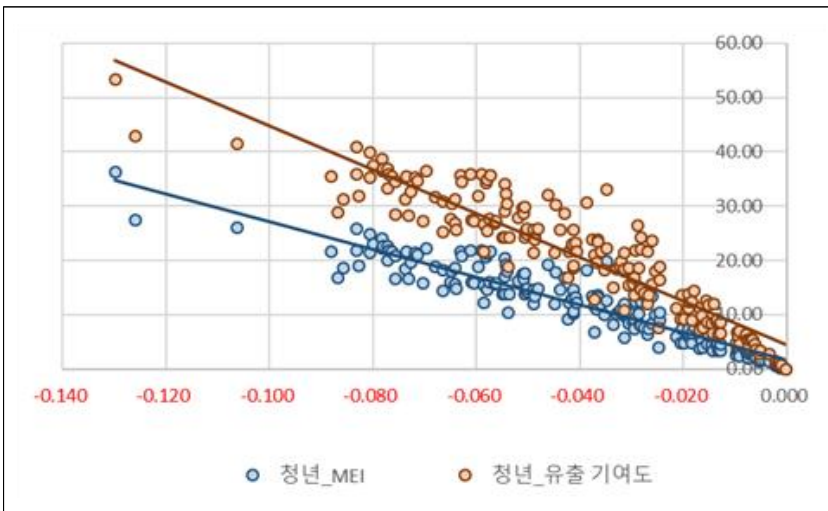
$$\text{특정 지역 } i \text{의 } OMEI = 100|D_i - O_i|/O_i$$

설명을 위해 극단적 예를 들자면, 만약 규모가 같은 임의의 두 지역 A와 B에서 순이동이 같은 100명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900명의 유입과 1000명의 유출의 인구교환을 통해 100명의 순유출이 발생한 A지역과 인구유입 없이 유출만으로 순유출 100명이 발생한 지역 간의 차이를 설

18) 이 지수는 순유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순유입지에서는 유출 대신 유입을 사용하여 인구 유입이 순이동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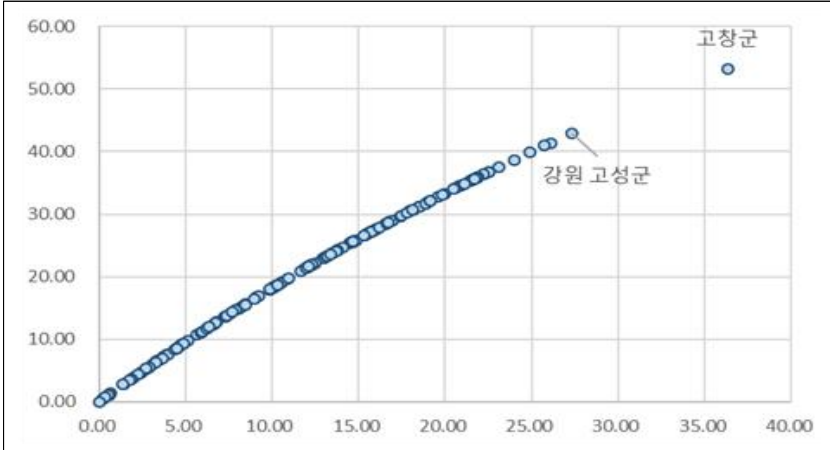
명할 수 있다. A, B 지역의 OMEI는 각각 10(%)와 100(%)가 된다. 실제 이 지수값은 MEI와 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시군구에서는 순유출(유입-유출의 양적 차이) 정도가 심할수록, 지역 간 인구의 비대칭적 청년인구 교환(일방적 유출) 정도가 일관되게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순유출의 지역적 분포는 지역 간의 인구교류 속에서 경제적 상황 등 일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매우 구조적이고 위계적 인구 흡수-유출 관계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35] 청년인구 순유출과 MEI 및 OMEI의 상관성



자료: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그림 3-36] 청년인구 이동 관련 MEI와 OMEI의 상관성(청년 순유출 지역)



자료: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이 연구의 자료에서 순유출 지역들 중 OMEI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모두 청년인구의 순유출률이 높은 군지역들이었는데, 전북 고창군(53.28%), 강원도 고성군(42.95%), 전남 하동군(41.41%) 등이었으며,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의 중구(35.58%)와 동구(35.90%)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은 강원도 고성군과도 확연한 격차를 보였다. 이 지수가 높은 곳은 타 지역 간의 인구교환에서 인구유출의 일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말해 유입을 늘리는 노력보다는 유출을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향후 인구변동의 지표와 지수화

지금까지 지역인구에 관한 거의 모든 접근들은 현재의 특성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유례 없는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인구의 자연감소,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 지방의 급격한 인구

위기화 등 인구변동 파장의 현실화 속에서 우리 사회 및 지역은 인구완화의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변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적응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지역 단위의 인구의 미래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인구변동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의 인구구조는 현재의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현재 인구구조의 미래 시점의 인구학적 함의를 도출해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의 인구집단(코호트)이 그대로 미래 인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차체 단위의 향후 인구 특성에 대한 분석은 장래인구 추계적 속성을 갖게 된다.¹⁹⁾ 현재의 인구동태를 현재에 대입하여 미래의 인구구성을 그림에 있어, 성인기의 인구동태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구이동을 포함한 동태의 양상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단·중기 기간 동안의 추정 결과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망 및 인구이동(국외 이주 포함)을 종합하여 코호트 생산율을 통해 미래를 추정하는 H-P 인구추계방법을 일부 사용하고자 한다. Hamilton와 Perry가 처음 제안하였다하여 국내에는 'H-P 인구추계법'라는 명칭으로 사용(이상립, 조영태, 2005)되는 이 장래인구 추계 방법(Hamilton & Perry, 1962)은 코호트 집단의 두 시점 간의 감

19)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일반적으로 현재(최근)의 인구동태(출생, 사망, 이동)이 계속될 경우의 가정으로 미래의 인구(규모와 구조)를 산출한다. 가장 대표적 추계 방법으로 코호트-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s)이 있는데, H-P추계는 이 방법과 매우 유사한 구성을 갖는다. 물론 다른 가정들을 대입하여 인구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이론적 가정과 실증적 근거들이 존재하여야 하는 별도의 연구 작업이다. 시군구 인구의 더 정교한 예측(forecast)를 위해서는 시군구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 성과들이 누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인구이동과 연관된 지역의 그룹화를 통해 차별적 방식의 예측(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하나의 예측 구성틀이 지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지역 인구변동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소(증가)율, 다시 말해 생잔율(cohort change ratio, CCR)을 이용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생잔율은 인구의 사망과 이동을 포괄하여 반영한 개념이다. 생잔율을 바탕으로 기준 시점에서 다음 시점까지 이러한 연령별 변화율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추계인구를 산출한다. 이 방식은 인구이동과 사망, 출산율 등의 자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작은 지역 단위의 장래인구추계에 유용한 방식으로 그 신뢰성이 검증받아 실제로 지역 인구추계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Swanson, Schlottmann, & Schmidt, 2010; Baker, Swanson, & Tayman, 2020). 이 연구에서는 각세별, 일 년 단위의 인구를 추계하게 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CR_x = P_{x+1,t} / P_{x,t-1}$$

여기서 $P_{x,t}$ 는 t 시점의 x 연령의 인구를 의미하며, CCR_x 는 $t-1$ 년 도와 t 년도의 x 세와 $x+1$ 세 사이의 생잔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2020년의 75세 인구가 2021년의 76세까지 지역에 남아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얻어진 CCR_x 을 이용하여 $t+1$ 년의 인구를 추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P_{x+1,t+1} = CCR_x \times P_{x,t}$$

이 연구에서는 10년 후의 인구추계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시점의 값을 10년으로 대체하여 10년 간의 코호트 생잔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CCR_x = P_{x+10,t} / P_{x,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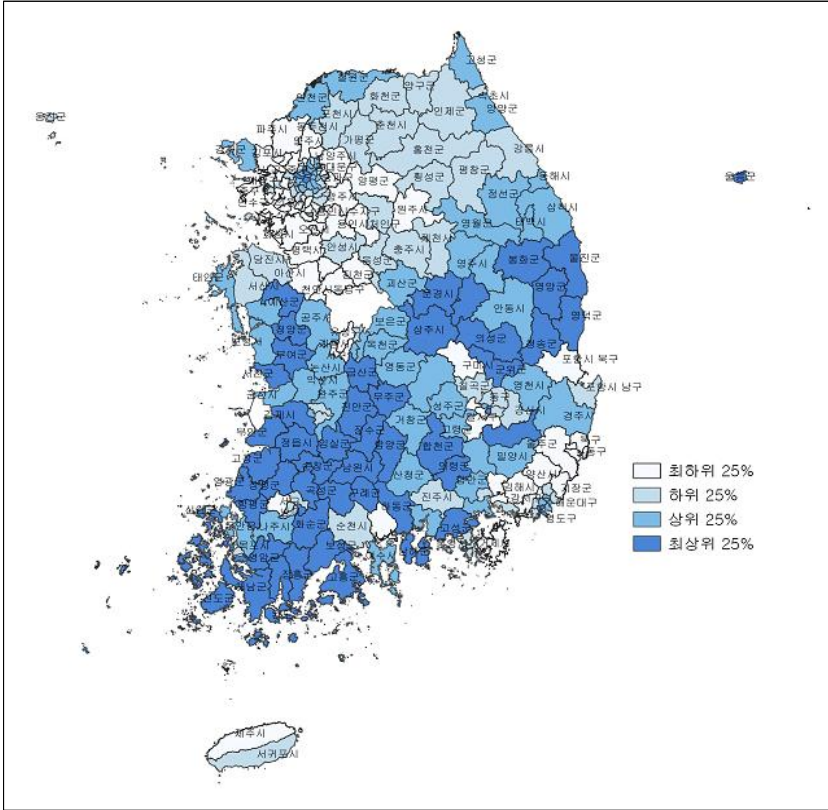
$$P_{x+10,t+10} = CCR_x \times P_{x,t}$$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분석에서는 향후 10년 후의 청년기 인구, 노인기 및 고고령 노인인구를 추계하고, 이들 인구집단의 변화율과 노인부양비의 변화율을 산출한다. 그 결과들의 지리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이고, 현재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지역 내 노인인구 규모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물론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미 고령화 수준이 상당 수준에 오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 시·군보다는 대도시 지역들에서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인인구 급증 위기 지역으로는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들과 부산, 울산, 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들은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중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청년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들 중 일부는 노인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역, 수도권 등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 모두에 걸쳐 나타나는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청년인구 변화율이 최상위에 위치해도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년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이 수치는 상대적 위치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지난 10년 간의 인구변동에 기반한 변화의 추정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으로 인구가 크게 변했던 지역들, 예를 들면 혁신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지역 등에서는 실제 성장 정도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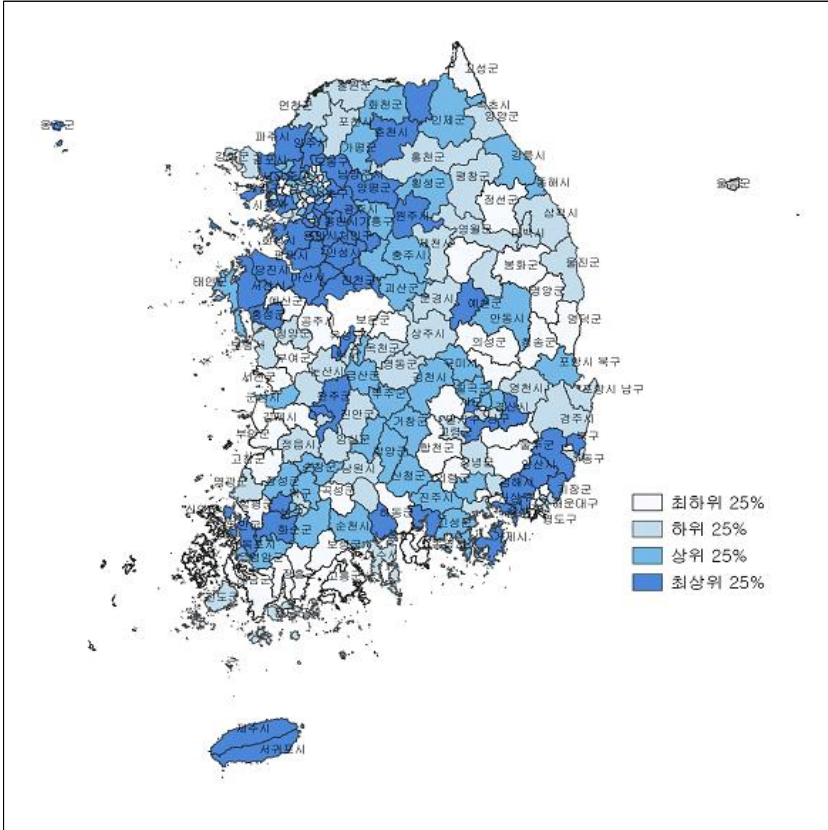
[그림 3-37] 시군구 노인인구 증가율의 등급화 결과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 h=I2에서 2021. 4. 8. 인출.

106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그림 3-38] 시군구 청년인구 증가율의 등급화 결과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 h=I2에서 2021. 4. 8. 인출.



제4장

지역인구의 유형화와 현장 대응 비교

제1절 지역인구의 종합적 유형화

제2절 시군구 정책 대응과의 비교

제4장 지역인구의 유형화와 현상 대응 비교

제1절 지역인구의 종합적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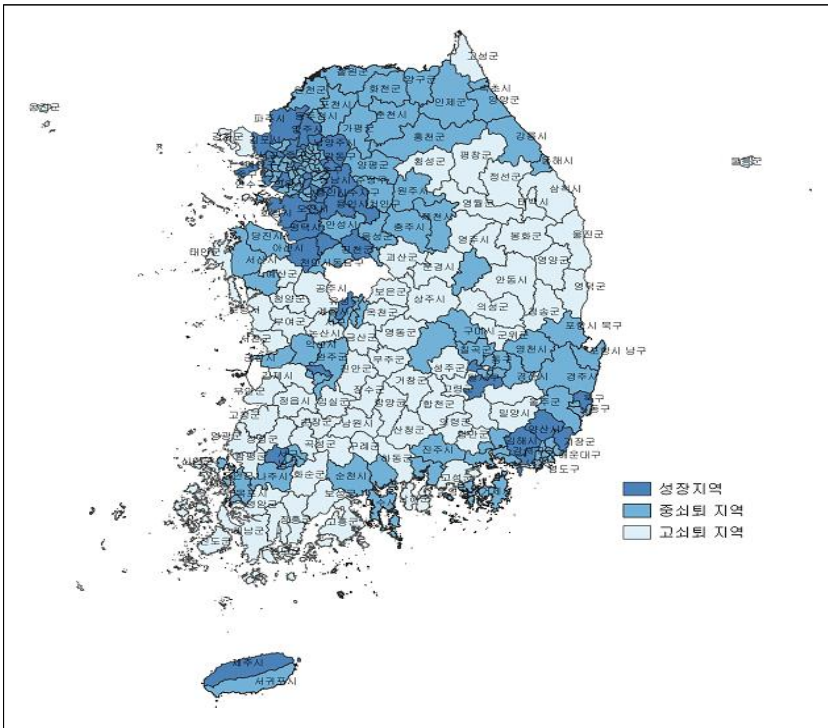
1. 지역인구의 현재 및 미래적 측면의 유형화

앞서 시군구의 다양한 인구지표 분석 및 지수화에서 얻어진 영역별 결과들을 현재적 인구활력과 미래적 인구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종합화하였다. 지수의 종합화는 앞서 방법론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인구성장 영역, 출산력 영역, 인구구조 영역의 지수값들을 더해 다시 지수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K-Mean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것은 지수적 등급화가 아닌 내용적 유형화를 의도한 바도 있지만, 방법론 상으로는 영역별 가중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의적 선택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 의도도 있다. 미래인구 변동 측면에 대해서는 지표들을 종합한 영역 지수들을 도출하지 않고, 청년인구 증가율, 노인인구 증가율, 노인부양비 변화율의 지표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적 인구활력은 인구성장, 인구구조, 출산력이 결합된 결과인데, 서울이나 광역시 중심 지역은 오히려 약간의 쇠퇴 경향이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 활력을 보이는 지역들은 수도권에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거나 혹은 남부의 외곽지역들로 이 집단은 하나의 권역을 이루면서 충청권 북부까지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 연구 분석이 제외된 세종시는 물론이고, 청주의 일부 지역까지 이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충청권 일부 지역까지 준수도권 범주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수도권이 인구 고밀화와 함께 지리적

팽창 역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은 지방의 인구를 대규모로 흡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등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중쇠퇴의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광역시의 중심부 지역들도 지역 쇠퇴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감소하는 쇠퇴 구조에 들어섬이 나타났다. 그 외의 충청의 남부부터 남해까지 이어지는 넓은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고쇠퇴 지역들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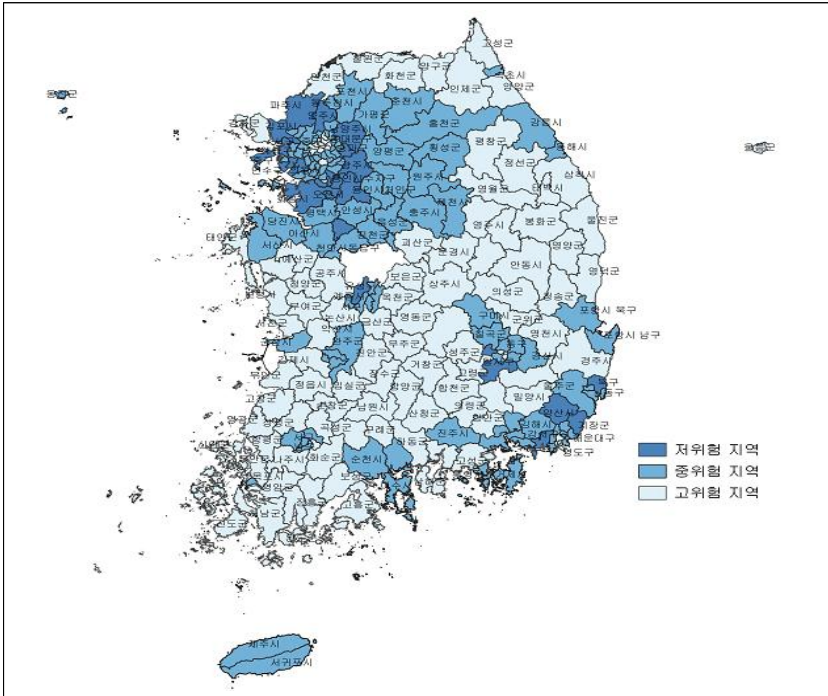
[그림 4-1] 현재 시군구 현재적 인구활력 유형화 결과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15년, 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4)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8~2020년) [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5)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 6)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그림 4-2] 향후 10년 후 시군구 인구변동 유형화 결과



112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앞으로 10년 후의 단기적 미래 추세도 현재의 인구활력과 매우 유사한 구조가 그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등이 가장 낮은 지수값을 보였다. 다시 말해 향후 10년 후 고령화 속도가 앞으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에 속하였다. 참고로 현재 인구구조 지수에서는 강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에, 영등포구는 가장 젊은 지역에 속하였지만, 모두가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 포함되었다. 그 외의 서울 지역들과 서울을 둘러싼 경기 및 인천 지역의 비교적 넓은 권역 내 지역들은 고령화 진행 양상이 중간 수준으로 빠른 지역군에 포함되었다. 다시 이들을 둘러싼 파주시, 양주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하위구들, 시흥시, 인천 남동구, 김포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느릴 것으로 지수상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충청·대전 남부 이남의 지역들에서는 광범위하게 지역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들 지역들은 현재도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고령화 수준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구 고취퇴에 해당되는 이들 지역들은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성장세의 도시들보다는 긍정적 지표는 보였지만, 청년인구의 빠른 감소와 고고령 노인의 증가로 이러한 긍정 지표의 효과는 대부분 상쇄되었다.

이는 비교적 도시 지역들에서는 앞으로 현재 인구구조가 고령화 문제를 청년의 흡수로 완화해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장래에는 청년을 흡수 또는 유지하려는 지

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인구적 요인들을 유형화 결과 조합을 통해 지역인구의 종합적 유형화를 제시한다.

2. 지역인구의 종합적 유형화

앞서 지역의 인구 현재적 특성과 가까운 미래의 변동 양상을 유형화하였는데, 이 두 결과를 조합하여 종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두 유형화가 모두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총 9개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조합을 해보면 8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이 연구 분석의 목적상 정교한 그룹화보다는 유형화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들의 인구변동 양상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세부화된 유형화 결과는 지역들에 대한 인구상황 해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소수의 사례들이 나온 3개 그룹(성장-고위험, 중쇠퇴-저위험, 고쇠퇴-중위험)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각 지수들의 분포를 판단하여 더 가까운 그룹에 포함시켜 유형화 결과를 5개 그룹으로 좀 더 단순화하였다.

〈표 4-1〉 지역인구의 현재적·미래적 측면의 유형화 결과의 조합 결과

(단위: 개, %)

구분		지역인구의 미래적 측면			전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지역인구의 현재적 측면	성장	23	12(→14)	2(→0)	37
	중쇠퇴	2(→0)	96(→98)	31	129
	고쇠퇴	0	2(→0)	77(→79)	79
전체		25	110	110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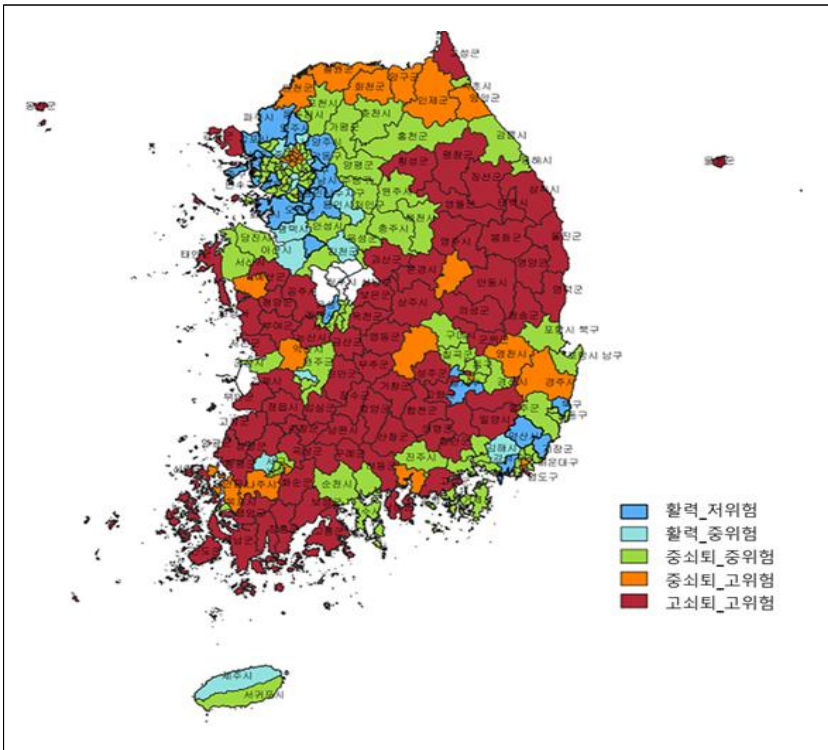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에서 2021. 6. 3. 인출.

114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 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4)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5)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 6)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그림 4-3] 지역인구 유형화 결과



-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2)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19~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 3)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 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4)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8~2020년)[데이터파일] 재분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 5)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이용.
- 6)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재분석.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우선 이번 지수화 과정에서 현재 인구현황 및 미래 인구변동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 평가²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활력-저위험’ 그룹에 속한 시군구 지역들은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거나,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광역시의 외곽에서 지역의 신혼부부나 자녀양육 세대 중심의 인구 유입이 이뤄지는 지역들이다. 앞으로 청년인구의 절대수 감소와 수도권 청년인구 흡수로 인해 광역시의 쇠퇴가 더 빠르게 진전된다면 이들 지역, 특히 광역시 외곽 지역들의 인구 안정성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광주의 외곽 지역에서는 이 ‘활력-저위험’ 그룹에 속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전북 지역을 포함하여 호남 지역 전체에서도 그러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

20) 여기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상대적 지수가 높았다는 의미이지, 인구변동에 관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지역들은 노인인구 증가, 청년감소,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당면할 것으로 여겨진다. 설사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지역의 청년인구의 유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 의미의 긍정적 평가가 되기 어렵다.

국, 이 지표의 분포는 역설적으로 호남 지역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가 지역 단위에서도 반영된, 우리나라 권역 수준의 인구변동이 보이는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활력-저위험 지역(23)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부산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남 양산시

다음은 현재적 인구활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간 정도의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들 ‘활력-중위험’ 지역은 가장 적은 수의 지역들이 포함되었는데,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강동구, 고양시 덕양구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이천, 평택, 아산, 진천 등의 경기 남부 및 충청권 지역들, 전북 최대 도시인 전주를 비롯한 광주, 부산의 외곽 지역들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권의 지역들은 유출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서울 및 그 주변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지역의 일자리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 그룹은 앞서 활력-저위험 지역에 속하는 인구지리적 특징이 있지만, 지역의 특성으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비교적 약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구지표들을 반영한 지수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더라도 그 내부적 인구 변화의 양상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충청이남 지방 지역의 높은 출산율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서로 다른 인구학적 맥락을 갖고 있음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활력-중위험 지역(14)

서울 강동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과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경기 평택시

광주 광산구, 충북 진천군,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경남 김해시, 제주시

우리나라 시군구 인구현황과 변동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중쇠퇴-중위험’ 지역군은 가장 많은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지역들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및 광역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활력-저위험’ 지역의 외곽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구미시, 군산시, 포항시, 완주군, 당진시, 서산시, 순천시 등 비광역시 지방의 주요 산업시설이 위치하는 지역들이라는 특성이 강하다. 대도시의 영향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지역의 산업으로 비대도시 지방 권역에서 인구의 유출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는 것은 권역 차원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중쇠퇴-중위험(99)

서울 강남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중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경기 가평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광명시, 경기 구리시, 경기 군포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 안성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경기 포천시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중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중구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원주시, 강원 춘천시,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북 충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남 광양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여주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칠곡군,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거제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 경남 창원 마산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다음으로 ‘중쇠퇴-고위험’ 지역은 현재는 중간 정도의 인구활력을 보이지만 앞으로 인구변동의 부정적 진전이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서울 및 대도시 지역의 인구 쇠퇴 성향(고령화 및 청년유출)을 보이는 지역들과,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이지만 산업적 쇠퇴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들 중에는 시 단위 지역의 비율이 높다. 군 단위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으로 젊은 인구가 유지되는 접경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접경지역들은 앞으로 병력자원 감소로 군효율화 사업에 따라 사단이 떠날 위험도 있는데, 이 경우 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이들 지역의 쇠퇴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중쇠퇴-고위험(30)

서울 강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연천군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 전남 무안군,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천시, 경북 예천군, 경남 사천시

마지막으로 가장 부정적 인구지수들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고쇠퇴-고위험’ 지역에 포함된 지역 수는 두 번째로 크지만 국토의 면적 면에서는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 그만큼 군 단위의 농촌성이 강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들은 부산의 영도구와 중구, 대

구 서구 등 대도시에 위치한 지역들로, 이들은 대도시에 위치하지만 고령화 수준과 청년 유출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들 지역은 도시적 인구쇠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는데, 인구적 불균형이 경제적 불평등과 연계될 위험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 고퇴-고위험(79)

인천 강화군,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대구 서구

강원 고성군, 강원 삼척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남 공주시,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경북 고령군,
 경북 군위군,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주시,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지역별 현재적 측면의 인구활력 지수와 미래의 측면의 인구변동 지수를 조합한 종합적 지역인구 유형화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 단위 인구변동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현재적 인구 규모의 성장과 구조의 특성과 가까운 미래의 인구변동에서의 군집화 결과는 두 부분 모두에서 선형적 수준의 차이를 드러낼 뿐 특정 요인들의 조합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들이 내용적 차이보다는 수준의 차이 중심으로 인구변동의 특이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의미에서는 지역 간 인구변동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유형 구성 분포를 요약해보면, 청년을 잃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중소 지역들,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을 대규모로 흡입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대도시 지역들, 대도시에 위치하면서도 지역의 쇠퇴를 통해 인구유출과 고령화의 위기를 겪는 구생활권 지역들,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을 통해 새롭게 신혼부부 중심의 젊은 인구를 유치하면서 예외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일부 신도시 지역들로 지역 구성이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인구변동의 특성적 유형화라기보다는 사실상 수준적 배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 사회 지방의 인구위기가 개별적 지역들의 일시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내부적 인구동태와 지역 간 관계의 지속가능하기 매우 쉽지 않은 거시적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충청 이남의 대부분의 군지역이 포함되는 남서부와 중동부를 잇는 지리적 연결선을 중심으로 고쇠퇴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인구 쇠퇴 클러스터의 존재는 지방의 인구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음을 보여주는 인구지리학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인구위기는 지역별 대응 사안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해소는 불가하고,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인구지리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 모두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년인구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에서조차 쇠퇴의 클러스터가 구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 인구위기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시군구 정책 대응과의 비교

이 연구에서는 앞서의 시군구 인구분석 결과와 기초 지자체의 지역인구 상황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전국의 기초 지자체 인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다. 지역마다 인구정책 담당의 체계는 동일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가족복지나 노인복지 등의 복지정책 계통에 인구담당이 위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64.0%).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예산 부서에 둔 경우는 도내 시지역·광역시·구·군 지역·인천·경기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 지역은 기초단체장의 직계 조직으로 구성하여 지역인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도내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제 계통 또는 청년 관련 부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별 인구 담당부서의 구성은 지역의 인구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따라 다른 구성을 보였고, 이는 지역의 지리적 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지역유형별 지역 인구정책 부서의 계통

(단위: 개, %)

구분	인구담당 부서의 계통				전체	
	기획예산	산업경제	청년정책	복지		
지역 유형	서울	7(28.0)	2(8.0)	0(0.0)	16(64.0)	25(100.0)
	인천·경기	31(59.6)	1(1.9)	4(7.7)	16(30.8)	52(100.0)
	광역시	26(66.7)	0(0.0)	4(10.3)	9(23.1)	39(100.0)
	도내 시	42(76.4)	0(0.0)	4(7.3)	9(16.4)	55(100.0)
	도내 군	37(50.0)	6(8.1)	20(27.0)	11(14.9)	74(100.0)
전체	143	9	32	61	245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 중 세종·청주 제외.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분석.

지자체에서 인식하는 지역의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지역들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고령화(인구구조)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들도 일부 나타나, 지역의 인구문제들이 갖는 상대적 심각성과 지역 정책 현안으로서의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저출산의 높은 응답률(71.2%)과 함께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을 문제로 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쇠퇴 지역의 문제 또는 지역 간 인구변동 격차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도내 시·군 지역에서는 인구구조의 문제보다는 인구감소와 청년유출을 문제로 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지역의 인구문제를 현안보다는 변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미래대응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지자체들에서 인구담당 부서가 비복지 분야에 배치된 것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시군구 유형별 대표 인구 현안(지자체 인식)의 분포

(단위: 개, %)

구분	대표 인구 현안(지자체 인식)				전체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유출		
지역 유형	서울	13(52.0)	7(28.0)	4(16.0)	1(4.0)	25(100.0)
	인천·경기	37(71.2)	3(5.8)	6(11.5)	6(11.5)	52(100.0)
	광역시	19(48.7)	5(12.8)	4(10.3)	11(28.2)	39(100.0)
	도내 시	16(29.1)	2(3.6)	21(38.2)	16(29.1)	55(100.0)
	도내 군	16(21.6)	5(6.8)	37(50.0)	16(21.6)	74(100.0)
전체	101	22	72	50	245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 중 세종 청주 제외.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분석.

앞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영역별 지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를 살펴보았다. 인구성장, 인구구조, 출산력 영역, 지방 지역들의 인구규모 및 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유출(청년유실률)의 선형표준화된 점수들 중 가장 낮은 점수(다른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한 정도를 보이는 인구문제)를 받은 부분을 지역의 대표 문제로 설정하였다. 시군구들 중 인구성장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구성한 지역은 14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출산(출산력 영역, 46개), 청년유출(39개), 그리고 고령화(인구구조, 16개)로 나타났다.²¹⁾

이를 지자체의 정책 현안 인식(가장 심각한 인구문제로 인식)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불일치가 발견된다. 출산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분석된 저출산 부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치성(63.0%)을 보였다. 한편, 그 밖의 문제들이 선정된 지역들에서는 일치도가 매우 낮았지만, 상호 연관성과 문제의 결합도가 높은 고령화-인구감소-청년유출로 영역을 확대해보면 분석된 인구문제와 현안 인식의 일치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의 문제 지역에서 저출산을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4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출산정책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된 지역들 중 출산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지역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21) 인구감소가 대표 문제인 지역의 수가 의외로 많이 나온 것은 각 지수들의 편차와 관련되어 있다. 인구성장은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커 하위 순위에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 비교인 선형표준화 과정에서 더 낮은 값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화-인구감소-청년유출이 상관성이 매우 높은 변인이라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24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표 4-4〉 현재 인구문제와 대표 인구 현안(지자체 인식)의 분포

(단위: 개, %)

구분		대표 인구 현안(지자체 인식)				전체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유출	
현재 문제 (지수 분석)	출산력	29(63.0)	5(10.9)	9(19.6)	3(6.5)	46(100.0)
	인구구조	5(31.3)	1(6.3)	8(50.0)	2(12.5)	16(100.0)
	인구성장	59(41.0)	11(7.6)	40(27.8)	34(23.6)	144(100.0)
	청년유실	8(20.5)	5(12.8)	15(38.5)	11(28.2)	39(100.0)
전체		101	22	72	50	244

주: 1)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 중 세종 청주 제외.

2) 지수 인구문제 중 고령화와 청년유출이 동일한 값인 고창군은 고령화로 정의.

자료: 1) [그림 4-3] 지역인구 유형화 결과 활용.

2)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분석.

〈표 4-5〉 시군구 유형별 미래 인구문제(지자체 인식) 교차표

(단위: 개, %)

구분		미래문제					전체
		저출산	고령화	고고령 인구	인구감소	청년유출	
지역 유형	서울	10(40.0)	9(36.0)	4(16.0)	2(8.0)	0(0.0)	25(100.0)
	인천·경기	23(44.2)	10(19.2)	10(19.2)	8(15.4)	1(1.9)	52(100.0)
	광역시	14(35.9)	6(15.4)	7(17.9)	5(12.8)	7(17.9)	39(100.0)
	도내 시	21(38.2)	5(9.1)	14(25.5)	8(14.5)	7(12.7)	55(100.0)
	도내 군	16(21.6)	7(9.5)	17(23.0)	25(33.8)	9(12.2)	74(100.0)
전체		84	37	52	48	24	245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 중 세종 청주 제외.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분석.

다음으로 지역 유형별 미래(향후 15년)의 지역 인구현안 인식을 살펴 보면, 앞으로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들에서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시·군 지역들에서도 저출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경우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문제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전국 단위)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6〉 현재 대표 인구 현안과 미래 인구문제 교차표(지자체 인식)

(단위: 개, %)

구분	미래문제					전체	
	저출산	고령화	고고령 인구	인구감소	청년유출		
현재 문제	저출산	51(50.5)	18(17.8)	17(16.8)	9(8.9)	6(5.9)	101(100.0)
	고령화	4(18.2)	5(22.7)	6(27.3)	6(27.3)	1(4.5)	22(100.0)
	인구감소	16(22.2)	10(13.9)	18(25.0)	26(36.1)	2(2.8)	72(100.0)
	청년유출	13(26.0)	4(8.0)	11(22.0)	7(14.0)	15(30.0)	50(100.0)
전체	84	37	52	48	24	245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 중 세종 청주 제외.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분석.

현재 지자체에서 인식하는 정책 현안과 미래의 인구문제를 교차하여 지자체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발견된다. 하나는 현재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문제를 그대로 미래의 문제로 투영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래의 지역 인구문제를 저출산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다.

이상의 미래 인구 현안에 대한 지역인구 담당자들의 응답은 미래 인구상황 예측에 대한 정답 여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미래 인구상황에 대한 인지가 그리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7〉 시군구 유형별 역량강화 방안 응답 분포

(단위: 개, %)

구분	역량강화						전체	
	중앙정부·지자체 간 체계적 역할 정립	인구정책 전문성 확보	단체장 및 의회의 인식 개선	지자체 정책 자율성 확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기타		
지역 구분	수도권	26(33.8)	26(33.8)	4(5.2)	2(2.6)	18(23.4)	1(1.3)	77(100.0)
	광역시	16(41.0)	10(25.6)	2(5.1)	1(2.6)	10(25.6)	0(0.0)	39(100.0)
	시지역	19(34.5)	12(21.8)	2(3.6)	1(1.8)	20(36.4)	1(1.8)	55(100.0)
	군지역	24(32.4)	15(20.3)	5(6.8)	3(4.1)	27(36.5)	0(0.0)	74(100.0)
전체	85	63	13	7	75	2	245	

주: 전체 시군구 지역 대상 중 세종 청주 제외.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분석.

이 절의 마지막으로 기초 지자체 인구 담당자들에게 정책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을 보면 중앙정부-지자체 간 체계적 역할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 지원의 확대(30.6%), 인구정책 전문성 확보(25.7%)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지원 예산의 확대 등 정책의 확대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정책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 정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지역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지역 유형과 상관성이 높았던 부서의 계통체계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합의

제2절 인가지표와 정책과제

제3절 인가지표 관련 정책 제언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인구지표들은 인구동태 및 상황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각 지표들로 반영되는 인구학적 변인들은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들이 나타내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는 지역별 인구동태 특성, 사회에서의 세대관계 진전의 인구학적 맥락,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과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구의 자연성장은 일차적으로 출산율과 기대수명으로 표현되는 출산력과 사망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지역차원 수준 지표로 나타나는 출산과 사망은 출산행위와 사망이 집중되는 청년인구 및 노인인구의 상대적 규모, 다시 말해 인구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인구지표들은 그 자체로 인구학적 결과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작용하는 인구학적 맥락들과 지역의 인구지리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술연구의 영역은 물론이고, 실효적 성과를 추구해야하는 정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지역 수준의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학교의 폐교, 지방대의 대량 입시미달 사태, 지역 경제의 위축 등 지역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적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의 인구변동 역시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인구적 현황 또는 정책적 수요와 효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시군구 수준의 인구지표들의 활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지표의 개발과 활용에서 지표의 수치 이면에서 작용하

는 인구학적 맥락과 지역의 인구지리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왜곡된 지표들이 만들어지거나, 지표에 숨겨져 있는 지역적 인구 특성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맹목적 인구지표의 사용은 지역의 인구상황과 변동의 맥락들을 무시한 채 인구지표 자체를 정책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청년이 계속 유출되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설사 합계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인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실증적·이론적으로 다양한 지역 단위 인구 지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시군구 수준의 다양한 인구동태 및 인구구조 지표들 간의 상호연관성이나 또는 합계출산율과 자연성장률 등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상관성이 떨어지는 관계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인구이동, 특히 청년의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규모와 연령구조(고령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출산율이나 합계출산율 등에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 지표들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구성장, 출산력, 인구구조 그리고 향후 인구변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표들을 산출하고 영역별 지수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혼여성 비율, 출생아 생산율, 인구유출 기여도, 청년 유실률 등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만 이용되었던 지표들을 인구지표들 간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들의 지리적 분포를 제시하면서 인구변동의 전

22) 이러한 설명이 합계출산율 무용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계출산율 수준이 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영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출산을 높이려는 노력은 결국 개인들의 출산력 수준인 합계출산율로 반영되게 된다.

체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지표와 영역별 지수값을 바탕으로 현재적 인구활력과 가까운 미래의 인구변동 위험을 결합하여 전체 시군구의 인구적 특성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 종합화의 결과가 수준의 등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연구가 당초 의도하였던 지수를 통한 유형화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유입지'와 '고령화된 인구유출지'라는 두 가지 극단적 양상을 잇는 단선적 인구변동(사실상의 양극화)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위기가 개별 위험지역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체적 인구변동의 양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거대한 인구위기 클러스터의 존재는 개별 위기지역들을 나열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 위기의 수준이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 및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얼마나 이러한 위기의 시급성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 왔는가에 대한 자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분석의 마지막으로 지역 인구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인구 상황의 인식과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이 연구가 산출한 지역의 인구지표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결과 지역의 인구 인식 및 중점적 대처와 분석된 인구상황 사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미래 인구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위기인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국가적 위기(저출산)를 중요 과제로 꼽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현장 담당자들의 인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인구지표의 활용과 이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였

지만, 새로운 대안적 지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체계적 지표 작성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지역 단위 인구 변동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 이슈들의 도출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상을 넘어서는 지역 단위 인구위기의 진전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상황 및 동태의 유형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연구가 의도하였던 유형별 정책 이슈 제시는 지표별 정책과제 수준으로 축소 대체해야 했다.

이 연구가 갖는 다른 한계는 지표의 구성에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각 지표별, 각 영역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비해, 지역 단위 인구변동이 어떠한 동태구조를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 인구 변동에 어떠한 또는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등 거시적 조망에 대한 이론적 틀 역시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변동의 분석 틀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접근 역시 전국 단위 인구변동과 지역 단위 인구변동의 차별적 맥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지역인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예비적 시도를 해보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및 영역 간의 견해와 이해도의 차이가 커 AHP 방법의 접근은 오히려 더 임의적 결과를 얻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지표나 영역별로 같은 비중의 영향을 전제하는 보수적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구구조 영역에서 노인인구 비율과 중위연령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하여 중위연령 지표를 지수 산출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조심스럽게 지표들 간의 관계성과 이론적 의의들을 기초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년인구의 특별한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다른 연령층들과는 달리 청년인구

의 순이동률과 함께 청년유실률과 같은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처럼 지표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지역 인구변동의 획일적 일원성 경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식이 전체적 결과와 지표 및 영역 간의 관계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않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지만, 신뢰성이 있는 정확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음을 자인한다. 앞으로의 추가적 연구 성과들이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성과 산출 지표들을 지역적 특성 또는 특정 지역집단과 연결하는 조합들을 통해 또 다른 영역의 분석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노후된 대도시 고령화 지역과 농촌형 고령지역의 차별적 인구동태 분석 등). 앞서 인구종합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언급한 높은 고령화의 중소지역, 인구유출과 고령화 위기의 대도시 내 쇠퇴지역, 낮은 출산율과 청년유입의 대도시 지역, 신혼청년 유입으로 인한 높은 출산율의 일부 신도시 지역의 구분은 이러한 시도의 초기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인구지표와 정책과제

앞서 분석한 시군구 인구지표들의 수치들은 각 지역의 인구학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인구규모(성장)와 구조의 결과변수가 아닌 이것들의 변화를 추동하는 인구동태의 세부 지표들은 지역들이 주목해야 할 차별적·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결과변수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 접근을 지양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접근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에 지금까지 설명한 인구지표들의 결과가 낮은(부정적 결과의) 하위 25개 지역들과 각 인구지표가 선정된 지역들에 대해 담고 있는 인구지리

학적 함의와 정책 접근의 방향들을 정리해보았다. 이하에 기술되는 내용들은 각 지자체들의 지역 인구문제 대응의 기초 매뉴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된 지표들은 앞서 내용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들로 대부분 2020년 인구동태 결과에 기초하였으며, 인구가동 관련 지표들은 2018~2020년 지표들을 모두 종합한 결과이다. 한편 미래 영역의 지표들은 2010~2020년 인구동태(코호트 생산율)와 현재 인구구조를 반영한 H-P 추계법으로 추정된 결과이다.

1. 청년인구 관련 지표

□ 청년 순이동률

고창군, 강원도 고성군, 하동군, 신안군, 임실군, 곡성군, 함평군, 부안군, 구례군, 부여군, 보성군, 보은군, 서천군, 고흥군, 봉화군, 순창군, 고성군, 금산군, 합천군, 장흥군, 청양군, 산청군, 강진군, 영동군, 고령군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농촌성이 높은 군지역들에서 가장 낮은 지표값을 보이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위기지역들
- 청년의 대규모 유출 구조는 지역의 인구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년인구 감소 완화가 인구정책 차원을 넘어 지역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역의 발전, 권역의 인구 불균형 등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기초 지자체의 정책 연계 필요

- 높은 수준의 고령화 환경에서 청년들이 정책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지 않는 노력 필요
- 인구감소 및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가시적 업적 중심의 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 절대 지양

□ 청년유실률

강원도 고성군, 고창군, 양구군, 하동군, 울산 중구, 칠곡군, 울산 동구, 대구 서구, 임실군, 곡성군, 삼척시, 부안군, 영동군, 신안군, 청양군, 부여군, 구례군, 계룡시, 익산시, 계양구, 함평군, 태백시, 함안군, 철원군, 장흥군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청년 순이동률이 지역의 청년인구 중 순유출된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데 반해, 이 지표는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의 순유출이 미치는 인구학적 영향을 의미
- 대부분 청년인구의 순이동이 낮은 지역(순유출 지역)들이지만, 지역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인구의 순유출 정도도 높은 광역시 지역과 도내 시지역들도 일부 포함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청년유출이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청년 대상 정책의 정책 우선 순위를 특히 높일 필요
- 지역 특성(군지역, 광역시 지역)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군지역의 경우는 앞서 순이동 지역의 정책을, 광역시 지역의 경우는 유출 청년의 주요 목적지 및 이동 청년의 특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주거 등 생활여건, 생활복지 등의 주요 정책들을 선택 집중할 필요

□ 청년 유출 효과성 지수 (OMEI)

고창군, 강원도 고성군, 하동군, 부안군, 부여군, 서천군, 보은군, 경남 고성군, 봉화군, 고흥군, 해남군, 금산군, 울산 동구, 함평군, 통영시, 영도구, 울산 중구, 신안군, 합천군, 강진군, 태백시, 보성군, 정읍시, 함안군, 장흥군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청년인구 유출지에서 순유출 수준 결정에 인구 유출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인구의 비대칭적 교환 구조가 강함을 시사
- 이 지표값이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청년 순유출률이 높고, 지역의 인구·경제 쇠퇴 정도가 높은 지역들
- 일반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유입(pulling factor)된다기보다는, 지역의 부정적인 배출 압력(pushing factor)에 의한 유출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표값이 높은 지역들은 청년인구 확보를 위해 청년유입을 늘리기 위한 타지역 청년유치 정책보다는 지역 청년정착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음. 타지역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 지역 청년들을 배제시키는 지역 청년정책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양
- 지역 청년의 유지를 위한 일자리 및 산업지원 정책과 더불어 생활영역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최근 출범한 청년정책과 지역 청년정착 지원 정책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 더불어 지역 청년의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예를 들어 청년 불공정 고용)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지역 청년의 주도적 정책 참여를 유도할 방안 필요(청년정책의 '참여·권리' 영역의 정책 개발)

2. 출산여건 관련 지표

□ 신혼여성 비율 (30대)

강원도 고성군, 고창군, 양구군, 하동군, 울산 중구, 칠곡군, 울산 동구, 대구 서구, 임실군, 곡성군, 삼척시, 부안군, 영동군, 신안군, 청양군, 부여군, 구례군, 계룡시, 익산시, 계양구, 함평군, 태백시, 함안군, 철원군, 장흥군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출산이 주로 이뤄지는 30대 여성들 중 혼인기간 5년차 이하 신혼부부인 여성의 비율을 의미하며, 지역의 출산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배경 요인
- 신혼여성 비율이 낮은 지역은 청년의 순유출 정도가 강한 군지역들과 지역적 쇠퇴가 일어나 인근 대도시로의 청년 특히 신혼부부의 혼인 유출이 일어나는 지방 시지역들이 포함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역의 혼인율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 혼인지원 정책은 정책 지원에 비해 타지역 정착으로 인한 반대 효과의 위험성도 있어 효과성 분석이 필요. 지역의 청년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만남 주선 등의 행사는 지양될 필요
- 새로 혼인한 청년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과 양육지원 정책에 우선적 자원 배분 필요. 무엇보다 지역의 활력 - 청년의 일자리 - 청년의 주거 - 양육세대의 정책 욕구 반영 등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산업·청년일자리·주거·청년생활의 청년정책·양육 등 저출산 정책 등을 총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 체계 필요

□ 혼인 유입률 (수도권 및 광역시 대상 - 참조 지표)

부산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대덕구, 부산 동구, 부산 중구, 대전 중구, 용진군, 대구 서구, 사상구, 해운대구, 광산구, 달서구, 대전 동구, 영도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대구 중구, 금정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혼인을 통해 지역으로 새로 전입한 인구의 비율(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1~10월 중 혼인한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들 중 지난 1년 간 지역으로 이주해 온 비율)
- 실제 혼인 시작 시점 및 1년 전 거주지 회상 질문에 의한 자료 수집상의 정확도 문제의 위험성이 있어 수치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략적 경향성 참조 차원의 참조 지표로 활용
- 이 수치가 높을수록 청년들이 새롭게 혼인 가정을 꾸리기에 적합함을 의미. 여기서는 혼인 유입률이 낮은 지역들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지역들이 광역시 내 쇠퇴 지역들이라는 특성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표의 의미만을 보았을 때는 앞서의 청년정착 정책과 신혼부부 정책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선정된 지역들이 대도시 쇠퇴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청년정착 여건 지원과 도시재생·재건축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청년부부에 중점을 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연계할 필요
- 지역에서 출산·양육하는 청년세대가 지역 환경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검토할 필요(안전, 치안, 교통, 환경 등)

□ 조출생률

괴산군, 남해군, 합천군, 부여군, 영도구, 부산 중구, 대구 서구, 청도군, 단양군, 군위군, 평창군, 영월군, 경상남도 고성군, 청양군, 곡성군, 함양군, 무주군, 구례군, 예산군, 서천군, 옥천군, 의령군, 횡성군, 산청군, 하동군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지역 전체 인구에 대한 출생아 수의 비율로, 지역의 전체 출생이 지역에 미치는 인구학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 내 청년인구의 상대적 규모(인구구조와 강한 연관), 기혼 특히 신혼인구의 비율, 기혼여성들의 출산율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표 수준을 결정
- 하위 25개 지역들로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군단위 지역과 광역시 쇠퇴 지역들로 모두 인구위기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 지역에서 합계출산율 중심의 접근을 할 경우 지역인구 현안을 왜곡할 위험이 높음. 인구감소 지역들에서는 합계출산율보다는 조출생률이 지역의 인구위기를 더 잘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역발전 정책, 청년인구 유지 정책, 청년세대의 생활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출산·양육 환경 개선의 저출산 정책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지역 인구정책을 청년정책으로의 적극적 해석 필요

□ 합계출산율

부산 중구, 관악구, 대구 서구, 종로구, 광진구, 강남구, 강북구, 대구 남구, 영도구, 마포구, 도봉구, 팔달구, 부산진구, 은평구, 금정구, 수성구, 용산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수영구, 중랑구, 부산 서구, 일산동구, 송파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여성 1인당 출산 수준으로 해석되며, 지역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영향을 의미하지는 않음
- 출산율이 낮은 지역들은 모두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역들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정책을 확대하기 이전에 지역의 미혼 인구의 비율, 신혼인구의 비율, 청년의 이동, 청년의 소득 및 주거 여건들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전제될 필요
- 여성 안전, 여성 고용, 일가정 양립 등 젠더적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

□ 출생아 생산율

해남군, 함평군, 진안군, 성주군, 부산 중구, 영암군, 팔달구, 관악구, 강진군, 장성군, 고령군, 군위군, 보성군, 울릉군, 군포시, 담양군, 양구군, 임실군, 산청군, 인천 동구, 의성군, 대구 서구, 중원구, 사상구, 구로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출산율이 높은 지방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지역을 떠나 출생아 대비 지역에 남아 있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결과적으로 지역의 높은 출산율이 지역의 인구 순환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 못하는 실

정에 착안하여 작성한 인구지표

-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지역의 총출생아와 5년 후인 2020년 12월 31일 5세 인구의 규모를 대비하여 생산율을 작성
-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생산율이 높은 지역들 중에서 높은 수준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지원금이 인구 이동(신고) 연기 등의 다른 인구학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의심 되기도 함
- 출생아 생산율이 낮은 지역들은 고출산율의 군단위 지역들과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생활권의 저출산 지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양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 지역들은 높은 고령화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이 공통적 특징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역의 출산지표들을 해석할 때 지역의 출생이 실제로 지역에 얼마만큼의 인구학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출생아 생산율을 함께 살펴야 함
- 출생아 생산율이 낮은 지역들은 본질적으로 양육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실효적 효과성 문제(지방도내 시군지역)와 청년인구의 거주 여건(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먼저 점검할 필요

3. 아동 및 청소년 인구유출 관련 지표

아동 및 청소년 인구의 유출은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에 비해 현격하게 작지만, 이들의 이주는 부모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의

이주라는 점과 궁극적으로는 지역 청년인구의 성장 규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주요 정책과제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의 이동은 교육여건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이라는 관점의 마련이 필요하며,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지역 교육지청과의 협조적 관계도 요청된다.

지역별로 성인이 이전의 인구이동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지역들에서 미취학 아동, 초등기, 중등기 순유출 수준이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들은 모두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이전의 구조적 유출은 지역의 인구 순환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 미취학 아동 순이동률

서울 강서구, 부평구, 부천시,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미추홀구, 성동구, 남동구, 계양구, 광명시, 군포시, 상록구, 동작구, 사하구, 금천구, 강북구, 권선구, 광진구, 만안구, 사상구,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울산 동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초등학교 취학 이전 아동들의 순유출률 지표이며, 더 나은 교육여건으로의 가족 이동 가능성이 높음. 더불어 자녀 성장에 따른 주택 확장 및 부모세대의 생애과정 진전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 모두가 대도시 내 지역들로 지역의 인구 유동성을 높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자체는 유출 완화 정책과 함께 지역의 높은 유동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 대응 필요
- 이동집단의 연령은 미취학기이지만 초등돌봄 및 지역 아동 돌봄 환경의 개선과 지역의 교육지원 정책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초등 연령기 순이동률

부천시, 서울 강서구, 부평구, 관악구, 구로구, 광명시, 성동구, 인천 남동구, 계양구, 중랑구, 동작구, 대구 동구, 미추홀구, 영등포구, 안산시 상록구, 군포시,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마포구, 유성구, 사하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지방(특히 군지역)의 심각한 인구유출 지역들에서는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이주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기에 주변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순유출이 높은 상위 지역은 대도시 지역들임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역 교육환경 및 청소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녀 양육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
- 유출지, 유출의 원인 등에 대한 가족 생애단계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점검 병행 필요

□ 중등 연령기 순이동률

부천시, 광명시, 부평구, 서울 강서구, 계양구, 성동구, 관악구, 광산구, 인천 남동구, 도봉구, 대구 동구, 동대문구, 구로구, 유성구, 중랑구, 광주 서구, 기흥구, 동작구, 안산시 상록구, 부산 북구, 목포시, 동안구, 군포시, 성북구, 사상구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지역 교육환경 및 청소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녀 양육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
- 유출지, 유출의 원인 등에 대한 가족 생애단계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점검 병행 필요

4. 향후 10년 후 인구변동 관련 지표

□ 청년인구 감소율

부천시, 광명시, 부평구, 서울 강서구, 계양구, 성동구, 관악구, 광산구, 남동구, 도봉구, 대구 동구, 동대문구, 구로구, 유성구, 중랑구, 광주 서구, 용인시 기흥구, 동작구, 안산시 상록구, 부산 북구, 목포시,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성북구, 사상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서울 및 주요 생활권 외곽에 위치하는 지역 분포의 경향
- 현재는 비교적 젊은 인구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낮은 성년기 이전 연령대의 인구 비율과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강한 유출 경향으로 청년 인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학령기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거주민의 가족 단위 생애과정 이행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개입 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청년의 거주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예방적 완화정책과 함께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야기할 수 있는 지역 주거 및 인프라 수요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략에 반영할 필요

□ 노인인구 증가율

영통구, 김포시, 울산 북구, 하남시, 인천 서구, 연수구, 시흥시, 광주시, 화성시, 유성구, 양산시, 오산시, 성산구, 수원시 권선구, 달성군, 천안시 서북구, 기장군, 일산시 일산동구, 의왕시, 남양주시, 계양구, 인천시 남동구, 부산 강서구, 구미시, 고양시 덕양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현재는 지역의 경제·산업·주거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50대 이후 중심의 생산가능인구가 거주하지만 이들의 노인기 진입으로 향후 10년 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될 지역
- 현재적 인구구조 인하여 빠른 고령화는 불가피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신규 유입 확대를 통한 고령화 완화 전략보다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안정적 적응화 전략이 요구됨
- 현재는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인해 노인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구변동에 따른 노인 정책 확대 플랜 구성을 준비

□ 고고령 인구(75세 이상) 증가율

하남시, 김포시, 영통구, 광주시, 울산 동구, 기장군, 인천 서구, 양산시, 오산시, 수원시 권선구,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기흥구, 연수구, 울산 남구, 화성시, 유성구, 남양주시, 부산 강서구, 달성군, 성산구, 울산 중구, 의왕시, 인천 중구, 창원시 의창구

○ 지표의 인구지리적 함의

- 현재 초기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는 고령화가 심각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대도시 지역들이 해당됨. 지역적 경기침체가 서서히 확산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음
- 앞서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도 속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고령화의 부담이 급격히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 지표의 정책적 함의

- 고고령 노인의 증가로 인한 요양시설, 노인 의료지원, 특히 치매 관련 복지정책의 기반 마련 필요.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 가져올 지역 경제에 대한 파장과 정책 수요 변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
- 지역 활기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기반 조성이 필요

제3절 인구지표 관련 정책 제안

이 연구의 핵심적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 인구변동의 상호 연계적 관계와 지역 인구위기의 수준이 몇몇 개별 위기 지역 수준을 넘어 전체적 위기 구조화의 양상으로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구지표의 관리와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지역 단위 인구변동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구변동은 개별적 지표들의 산출로 이해되지 않으며, 지표 수준의 변화와 더불어 다른 지표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면밀한 분석과 우리 상황에 맞는 이론적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 지역의 위기가 개별 지역의 낙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 간 관계와 전체적 사회변동의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인구변동에 관한 모니터링을 개별 지역에 맡기거나,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고 지표값만을 나열하는 것은 지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구학적 변동의 맥락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인구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경고 사인을 놓치고, 정책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대응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최소한 권역 범위 내 지역들의 인구변동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인 자료 구성, 지표 산출, 결과의 분석과 전문적 해석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 인구조지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인구종합 관리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역 인구위기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개별 사업들을 모아 관리하는 현행 체계로는 지역의 인구문제 관리 및 그의 파급효과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구정책TF 등으로 지방 인구문제 관련 대응 체계들이 나누어져 종합적 대처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로는 지역 인구문제에 대해 제한된 예산과 산발적 복지 지원 제공 정도의 대응으로 그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

양과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여 지자체의 지역화된 인구대응을, 중앙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정책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운영지원 체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정책은 인구불균형의 완화와 전체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이라는 인구위기 대응 정책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가 진전되면서 앞으로 초래할 부정적 파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높은 수준의 지역 인구위기의 진전과 이러한 위기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지금과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되기 어려우며, 문제의 지속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미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구문제에 의해 나타난 인식의 관성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변화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 또는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의 규모 또는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비혼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들이 현실화되고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심화·확대됨에 따라 인구 관련 정책의 대상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변동이 지역의 어떠한 인구지리적 요소와 반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문제화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지역(지방)이 경험할 수 있는 미래 문제들의 사례들을 <표 5-1>에 제시해 보았다.

〈표 5-1〉 지역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들

- 청년 유권자 감소 및 노인 유권자 증가로 인한 지자체 정책의 세대 편향
- 거동이 어려운 노인 증가(장보기 어려움)로 간편식 섭취 증가 및 노인 영양 문제 발생
- 노인(여성) 1인 가구 주택의 노후화 방치로 거주지 안전사고 증가
- 야간 응급구조 수요 증가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감염병 취약성 증가 (지역 방역체계)
- 인구 과소지역 발생과 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소비용품 유통망이 축소되면서 생활용품 구입의 장애 발생(일본의 ‘쇼핑난민’)
- 생활용품 구매와 약품 전달을 위한 운송 지원 요구 발생/가전제품 AS의 어려움, 난방 유류 구입의 어려움(농촌 지역 중심)
- 산사태, 수해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여건 악화
- 영농이 어려운 고고령 노인의 증가로 버려진 경작지 증가 → 농촌 환경시설 문제(쓰레기 불법 매립, 대규모 가축 사육장 등)
- 오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생활 인프라 수리의 미흡으로 안전사고 증가와 과소지역 증가로 인한 농촌 치안의 문제
- 무경작 농지의 증가로 인한 농토 황폐화
- 과소&고고령 지역의 병의원 진료 문제 (의료 접근성 악화)

주: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1) 가와이 마사시, (2018), 미래 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서울: 한국경제신문.

2) 河合 雅司, (2018), 未来の年表 2: 人口減少日本であなたに起きること, 講談社.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의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의 지역인구에 대한 이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과 함께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의 인구이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은 단발적 ‘인구교육’이 아니라,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해

인구학적 지식과 지역의 인구지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여 실제 정책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지역 인구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획, 경제·산업, 복지, 건설 등 다양한 직무의 현장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의회를 대상으로도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정책 영역 간의 구분을 넘어 총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역인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지표의 개발이 지속되고, 이러한 성과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가와이 마사시. (2018). 미래 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서울: 한국경제신문.
-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서울: 감사원.
- 기정훈. (2012).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쇠퇴에 대한 분석: 전북 김제시, 강원 정선군, 대구 서구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47(3), 37-50.
- 김광중. (2010).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43-58.
- 김수정. (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43-158.
- 김종현. (2021.8.19.). 인구 대지진속 100년 후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생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134300002>에서 2021.11.20. 인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18~2022).http://www.motie.go.kr/motie/py/td/Industry/bbs/bbsView.do?bbs_seq_n=210216&bbs_cd_n=72¤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에서 2021. 9. 2. 인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기획담당관,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총괄운영과. (2020. 8. 18.). 더 나은 삶,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그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7702&searchCategory=&page=6&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1>에서 2021. 9. 3. 인출.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5~2020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152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 2018~2020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인구추계-시도(2017년 기준)-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중위 시나리오)[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I2에서 2021. 4. 28.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15~2020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1. 4. 8.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 6. 3.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가구부문-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2020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인구부문-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시군구(2018년, 2020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9&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시통계-인구-성 및 연령별 인구와 인구밀도(2018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1N_2013_A00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총조사-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주택의 종류별 주택-읍면동(2015, 2020), 시군구(2016~2019)(2018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conn_path=I2에서 2021. 5. 14.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09).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listLen=19&searchKeyword=&position=E>에서 2021. 9. 21. 인출.
-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 전략. 서울: 와이즈베리.
- 맹다미, 장남중, 백세나 (2016).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 박병호, 한상욱, 인병철. (2010).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쇠퇴의 패턴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101-111.
- 박진경, 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 방안.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 김상민. (20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변필성, 김동근, 차은혜, 이효란. (201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 성은영, 임유경, 심경미, 윤주선. (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연구. 세종: 건축공간연구원.
- 오영환. (2019.8.29.). 지자체 첫 균형발전 지표... 기초단체 상위 10% 경기도 짝슬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5033#home>에서 2021.12.10. 인출.
-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5호. 2020년 12월 21일.
-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조영태. (2005).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 인구추계. *한국인구학*, 28(1), 149-172.
- 장대익, 차영재, 이민섭, 장재경. (2020). 우리나라 초저출생의 심리적 원인: 인구 밀도로 인한 사회적 경쟁 및 수도권 집중을 중심으로. *감사원 연구용역 과제 (990-20200004)*. 서울: 감사원.
- 장인수, 우해봉, 임지혜, 손호성, 박종훈. (2020).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8(2), 36-64.
- 조영태. (2021). 인구 미래 공존: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서울: 북스톤.
-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1. 5. 13. 인출.
- 통계청. 2015~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RDC(프로젝트 고유번호: RDC21040107).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20% 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RAS(프로젝트 고유번호: RAS21072003).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16. 8. 25.). 지자체 「출산 지도」 만든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 마련.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5857에서 2021. 9. 5. 인출.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7. 10. 16.). 지자체의 저출산 위기 극복,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 지원 및 우수 지자체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949에서 2021.

9. 5. 인출.

황선재, 변준석, 심수진. (2019). 지표작성 방법론: 정책지표 설계와 활용. 대전: 통계개발원.

Barro, R. J., & Becker, G. S. (1989). Fertility choice in a model of economic growth. *Econometrica*, 57(2), 481-501. doi:10.2307/1912563

Baker, J., Swanson, D., & Tayman, J. (2020). The accuracy of Hamilton-Perry population projections for census trac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0(6), 1341-1354. doi:10.1007/s11113-020-09601-y

Bell, M., & Muhidin, S. (2009). Cross-National comparison of internal migration.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 2009/30. UNDP.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2012). *Every age counts: The federal government's demographic strategy*. Germany. https://www.demografie-portal.de/EN/demographic-strategy-germany-2012.pdf?__blob=publicationFile&v=4에서 2021. 12. 8. 인출.

Hamilton, C. H., & Perry, J. (1962). A short method for projecting population by age from one decennial census to another. *Social Forces*, 41(2), 163-170. doi.org/10.2307/2573607

Swanson, D. A., Schlottmann, A., & Schmidt, B. (2010). Forecasting the population of census tracts by age and sex: An example of the hamilton-perry method in ac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9(1), 47-63. doi:10.1007/s11113-009-9144-7

河合 雅司. (2018). 未來の年表 2: 人口減少日本であなたに起きること. 講談社.

〈기타〉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부록 1] 시군구 인구지표

이하의 각 인구지표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으며, 각 출처의 링크는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1) 자연성장률

- ①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데이터파일].
- ②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8~2020년)
[데이터파일].

2) 순이동률

- ①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데이터파일].
- ②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3) 출생아 생산율

- ①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2015년)[데이터파일].
- ②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 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12월)[데이터파일].

4) 신혼비율

- ①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데이터파일].
- ②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 5) 청년비율: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데이터파일].

- 6) 청년 순이동률, 장년 순이동률, 중년 순이동률, 청년 유실률
 - ①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9년)[데이터파일].
 - ②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 7) 노인인구 증가율, 고고령인구 증가율, 청년인구 증가율
 - ①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0년, 2020년)[데이터파일].
 - ② 통계청. 2018~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데이터파일].

- 8) 중위연령: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데이터파일].

〈서울특별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진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 (3년)	중년 순이동 (3년)	청년 유실률	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종로구	-5.27	-33.47	12.6	0.930	17.1	24.9	0.80	-13.81	-13.44	0.60	1.204	1.144	0.669	44.27
중구	0.89	-6.73	18.1	0.767	21.9	24.9	41.64	-23.08	-5.08	31.11	1.296	1.283	0.677	44.86
용산구	1.88	1.19	17.7	0.749	21.0	25.2	43.56	-13.58	-3.22	32.68	1.222	1.154	0.765	43.05
성동구	7.92	-46.07	21.7	0.809	25.8	25.5	20.24	-31.15	-17.38	15.56	1.351	1.309	0.742	42.06
광진구	3.74	-36.54	16.3	0.733	19.9	28.4	20.66	-32.29	-19.60	17.48	1.413	1.472	0.706	41.13
동대문구	-0.54	-23.31	16.1	0.858	20.9	25.4	25.09	-20.59	-15.40	18.89	1.280	1.338	0.738	42.63
중랑구	0.23	-35.33	16.6	0.760	20.9	23.4	5.35	-24.44	-6.92	3.79	1.481	1.559	0.634	44.48
성북구	-0.49	-16.08	15.0	0.916	20.4	24.0	17.22	-12.61	-11.84	12.27	1.247	1.277	0.791	42.43
강북구	-7.02	-46.53	11.6	0.783	17.7	22.0	-6.00	-27.27	-10.18	-3.99	1.310	1.394	0.691	46.10
도봉구	-3.76	-54.01	13.3	0.826	18.9	21.5	-24.60	-22.46	-12.05	-16.19	1.461	1.510	0.634	45.75
노원구	-1.04	-58.82	14.5	0.830	21.3	22.4	-30.41	-18.34	-23.57	-20.72	1.392	1.406	0.696	43.32
은평구	-0.40	-15.11	15.3	0.866	20.6	22.8	16.14	-14.94	-6.70	10.99	1.419	1.474	0.792	43.44
서대문구	-0.66	-2.13	15.5	1.026	20.6	25.2	24.98	-8.05	-11.29	18.74	1.268	1.227	0.754	42.29
마포구	5.59	-13.91	18.7	0.755	21.0	27.1	39.11	-23.17	-16.95	31.59	1.224	1.197	0.824	39.50
양천구	1.80	-40.05	14.2	0.970	19.3	21.7	-31.99	-3.35	-25.53	-21.19	1.497	1.623	0.722	42.32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순이동 (3년)	청년 유실률 (3년)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강서구	5.62	-43.41	19.5	0.746	22.7	25.4	20.28	-33.72	15.41	1.539	1.712	0.750	40.53
구로구	4.40	-23.57	18.4	0.731	23.5	23.2	20.76	-25.64	14.44	1.440	1.675	0.755	42.48
금천구	-0.07	-18.48	15.5	0.767	21.1	25.6	34.92	-26.33	26.38	1.486	1.555	0.648	43.68
영등포구	6.98	19.87	21.2	0.790	24.2	26.7	60.91	-12.98	48.38	1.240	1.320	0.689	40.47
동작구	3.83	-18.03	17.1	0.778	20.9	27.1	28.88	-25.99	23.32	1.334	1.430	0.784	40.83
관악구	0.48	-18.67	13.7	0.635	17.3	33.5	45.74	-46.13	45.04	1.266	1.450	0.721	38.61
서초구	7.97	-46.11	18.1	0.900	19.3	22.5	-9.84	-14.01	-6.75	1.327	1.576	0.845	40.37
강남구	4.79	-36.88	15.1	0.844	15.6	23.8	-20.47	-4.03	-14.94	1.340	1.657	0.793	40.29
송파구	8.87	-4.51	19.3	0.948	22.2	24.4	19.03	-9.19	14.12	1.487	1.717	0.745	40.13
강동구	4.53	50.25	17.9	1.000	21.4	22.9	28.85	18.69	20.01	1.469	1.728	0.673	41.75

〈부산광역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진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전년 순이동 (3년)	중년 순이동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고령인구		청년인구		중위연령
											증가률 (2020~ 2030)	증가률 2030)	증가률 (2020~ 2030)	증가률 2030)	증가률 (2020~ 2030)	증가률 2030)	
중구	-19.24	-47.31	9.0	0.603	14.4	20.7	-1.23	-33.30	-8.62	-0.75	1.163	1.310	1.310	1.570	0.570	50.88	
서구	-17.98	-0.07	10.9	1.067	17.2	19.3	-9.04	2.94	-1.40	-5.30	1.157	1.263	1.263	1.621	0.621	49.45	
동구	-17.83	17.65	11.7	0.948	19.7	19.2	18.29	5.82	6.07	10.49	1.149	1.239	1.239	0.594	0.594	50.21	
영도구	-21.29	-66.59	8.9	0.927	15.3	16.8	-57.19	-26.74	-10.24	-29.83	1.160	1.314	1.314	0.530	0.530	51.74	
부산진구	-6.41	-27.53	14.6	0.780	19.3	22.9	7.53	-19.08	-8.34	5.14	1.293	1.373	1.373	0.658	0.658	45.27	
동래구	-3.35	2.85	14.5	1.236	20.6	19.9	-15.25	13.83	-9.55	-9.32	1.375	1.570	1.570	0.732	0.732	44.68	
남구	-6.52	-16.21	12.7	1.077	19.2	20.3	-12.77	0.57	-11.96	-7.86	1.263	1.439	1.439	0.738	0.738	45.32	
북구	-1.94	-63.69	15.5	0.914	21.2	21.2	-44.66	-22.22	-11.45	-29.22	1.653	1.697	1.697	0.615	0.615	45.78	
해운대구	-3.08	-22.85	14.3	1.077	19.0	19.8	-25.98	-1.47	-9.00	-15.72	1.503	1.556	1.556	0.721	0.721	44.82	
사하구	-5.64	-62.29	14.6	0.848	20.7	20.4	-36.58	-25.13	-13.02	-23.06	1.485	1.663	1.663	0.634	0.634	45.94	
금정구	-8.82	-40.00	12.0	0.992	18.2	21.6	-26.58	-15.04	-10.93	-17.50	1.420	1.584	1.584	0.656	0.656	47.07	
강서구	21.16	141.89	34.8	1.698	29.4	18.4	89.16	45.91	36.08	50.91	1.970	1.821	1.821	1.648	1.648	38.07	
연제구	-1.21	12.56	17.1	1.097	22.9	20.5	6.73	4.01	1.09	4.21	1.386	1.584	1.584	0.742	0.742	45.03	
수영구	-5.49	-13.27	14.9	0.870	20.2	22.1	11.53	-12.51	-6.29	7.66	1.336	1.584	1.584	0.704	0.704	46.00	
사상구	-5.82	-71.17	14.1	0.719	19.9	21.3	-35.96	-31.73	-11.22	-23.55	1.537	1.671	1.671	0.549	0.549	46.97	
기장군	4.32	73.53	22.7	1.100	22.5	17.3	38.86	21.04	28.88	20.29	2.046	2.061	2.061	1.540	1.540	41.10	

〈대구광역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존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중구	-3.76	-28.25	18.7	0.875	22.7	23.9	33.24	-19.72	-25.09	23.62	1.100	1.151	0.806	43.84
동구	-3.08	-19.09	16.9	0.936	23.2	20.0	-1.02	-12.74	-0.36	-0.62	1.443	1.495	0.781	45.22
서구	-14.60	-105.84	9.1	0.705	15.4	19.7	-62.92	-42.92	-21.52	-38.38	1.307	1.411	0.474	50.02
남구	-14.19	-28.55	11.3	0.737	16.0	21.3	-0.09	-17.31	-7.39	-0.05	1.218	1.290	0.607	48.22
북구	1.38	-4.53	17.0	0.989	23.4	22.1	-5.09	-1.76	-0.94	-3.39	1.589	1.490	0.777	42.70
수성구	-4.54	-30.47	10.8	1.274	16.5	20.4	-50.76	8.69	-20.06	-31.58	1.431	1.376	0.733	43.67
달서구	-0.27	-34.44	14.7	0.918	21.0	22.3	-28.60	-8.17	-10.45	-19.39	1.688	1.641	0.690	43.20
달성군	16.11	45.84	31.1	1.711	30.3	20.4	24.43	13.34	17.93	15.46	2.120	1.769	1.127	39.68

〈인천광역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진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 률(3년)	중년 순이동 률(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중구	1.41	167.53	19.1	1.325	23.5	22.6	111.61	49.98	34.02	73.95	1.746	1.754	1.380	40.53
동구	-9.84	-99.62	14.7	0.697	17.0	17.4	-51.02	-44.79	-14.06	-27.40	1.217	1.289	0.654	47.23
연수구	10.03	137.03	21.3	1.617	24.3	22.8	43.05	60.96	22.43	29.76	2.381	1.874	1.017	39.10
남동구	3.59	-26.39	18.7	0.972	19.6	22.0	-9.26	-12.79	-4.72	-6.23	1.974	1.886	0.863	41.56
부평구	1.19	-91.19	17.5	0.748	20.4	23.1	-36.53	-36.03	-22.45	-25.80	1.595	1.482	0.645	42.96
계양구	0.65	-90.08	15.8	0.740	18.0	23.6	-46.22	-34.16	-17.22	-33.44	1.993	1.582	0.601	43.41
서구	9.56	37.95	21.9	1.121	22.9	22.3	19.93	11.99	10.03	13.55	2.391	2.042	1.070	39.77
강화군	-23.56	29.13	12.7	1.252	18.0	12.9	-36.71	16.58	30.18	-14.74	1.371	1.298	0.732	56.12
옹진군	-14.34	-40.74	14.0	0.860	18.8	19.4	-24.78	-30.45	7.02	-14.73	1.578	1.465	0.914	52.39
미추홀구	-1.30	-35.57	17.3	0.966	20.0	22.6	-2.15	-17.39	-12.01	-1.47	1.449	1.461	0.728	43.52

〈광주광역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동구	-8.80	86.98	14.9	1.261	22.6	22.5	45.53	37.97	17.01	30.34	1.201	1.268	0.683	45.42
서구	0.40	-35.25	15.5	1.043	18.8	23.6	-21.28	-11.15	-11.12	-15.15	1.616	1.568	0.778	41.38
남구	-3.38	-14.96	15.0	1.222	20.0	20.7	-29.72	5.56	-11.61	-18.93	1.433	1.502	0.775	42.67
북구	0.40	-20.49	17.4	0.983	21.3	22.9	-16.45	-5.03	-7.64	-11.48	1.517	1.495	0.695	41.80
광산구	7.08	-4.22	19.6	1.096	21.1	22.9	-2.05	-1.03	-1.67	-1.41	1.909	1.508	1.061	38.17

〈대전광역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동구	-7.12	-26.86	14.3	0.843	18.6	21.0	-16.23	-11.21	-2.70	-10.38	1.365	1.390	0.752	44.85
중구	-6.46	-49.68	13.7	0.876	18.0	20.6	-30.54	-19.49	-9.15	-19.10	1.353	1.420	0.711	45.23
서구	4.61	-25.27	17.6	0.955	20.3	24.5	-7.43	-5.97	-18.00	-5.49	1.635	1.584	0.730	40.09
유성구	12.31	-5.54	22.4	1.057	23.9	24.9	16.53	-7.82	-8.91	12.35	2.248	1.859	1.085	37.69
대덕구	-3.30	-56.96	13.8	0.813	18.1	21.8	-40.62	-18.07	-8.87	-27.04	1.587	1.484	0.629	44.79

<울산광역시>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중구	0.65	-94.39	15.7	0.905	20.1	20.2	-63.02	-29.29	-22.20	-39.70	1.696	1.767	0.676	44.22
남구	4.34	-52.09	17.3	0.855	21.6	23.1	-31.27	-12.29	-18.17	-22.07	1.799	1.873	0.679	42.31
동구	7.28	-87.95	20.0	0.779	21.5	19.9	-61.18	-25.56	-18.63	-38.57	1.796	2.190	0.687	40.89
북구	15.99	69.54	26.6	1.311	27.5	21.9	25.49	27.14	16.00	17.15	2.506	1.879	1.012	38.24
울주군	1.23	6.15	19.2	0.966	23.2	19.5	-13.56	3.84	13.89	-8.08	1.872	1.569	0.944	43.94

<경기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수원시 장안구	-0.58	2.60	14.3	0.801	22.3	24.3	-15.07	-17.09	-13.24	-11.06	1.699	1.481	0.741	41.70
수원시 권선구	9.00	11.27	21.6	1.029	22.3	24.3	-6.55	-13.45	-10.41	-4.88	2.176	1.898	0.885	39.35
수원시 팔달구	-3.22	22.84	14.5	0.630	22.3	25.7	10.21	-20.54	-14.79	7.78	1.319	1.297	0.605	42.67
수원시 영통구	16.54	93.63	24.5	1.018	22.3	26.7	16.75	-5.54	-9.77	13.55	2.868	2.215	1.189	36.26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존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성남시 수정구	2.34	43.48	18.6	0.936	21.3	23.5	15.66	-10.88	0.30	11.07	1.588	1.614	0.765	43.00
성남시 중원구	0.34	-15.06	16.9	0.717	21.3	23.5	-7.74	-31.64	-16.77	-5.49	1.465	1.457	0.600	43.57
성남시 분당구 의정부시	8.03	56.04	19.2	0.898	21.3	23.1	-12.72	-9.21	-25.00	-8.98	1.587	1.462	0.838	40.05
안양시 만안구	-0.23	44.71	16.4	1.244	21.3	22.2	19.23	16.70	11.00	12.84	1.674	1.526	0.848	42.74
안양시 동안구	4.12	-18.92	19.3	0.894	23.7	23.4	-25.28	-26.86	-18.45	-18.11	1.551	1.513	0.653	43.80
부천시	9.24	-26.62	20.1	0.821	23.7	23.4	-31.35	-23.40	-31.87	-22.40	1.636	1.437	0.698	40.88
광명시	3.40	-43.97	17.4	0.896	20.9	23.3	-15.62	-18.16	-10.65	-11.11	1.798	1.677	0.677	42.31
평택시	4.25	-112.83	17.6	0.755	22.4	21.6	-37.48	-40.40	-35.04	-24.69	1.532	1.477	0.796	41.79
동두천시	6.40	104.14	21.6	1.218	23.5	22.7	54.33	40.81	21.32	36.88	1.772	1.426	1.057	39.93
안산시 상록구	-11.97	-18.85	13.7	0.879	16.5	19.0	-18.22	-14.70	4.90	-10.52	1.534	1.388	0.833	46.16
안산시 단원구	1.79	-17.15	16.3	0.798	20.3	25.2	-26.97	-21.37	-11.85	-20.61	1.925	1.465	0.707	41.65
고양시 덕양구	4.28	8.65	17.3	0.885	20.3	25.2	-3.36	-10.37	-7.69	-2.52	1.919	1.478	0.703	40.95
고양시 일산동구	3.01	84.80	18.1	1.160	22.4	21.9	29.27	26.02	14.98	19.32	1.954	1.632	0.933	42.31
고양시 일산북구	0.81	32.97	14.5	1.103	22.4	23.6	-1.40	5.87	-1.80	-1.00	2.005	1.528	0.835	42.12
고양시 일산서구	1.89	24.81	14.8	1.146	22.4	22.4	-14.02	8.62	-2.50	-9.49	1.914	1.384	0.826	41.95
과천시	3.72	95.46	16.7	1.128	21.5	22.9	36.74	44.79	13.68	25.12	1.442	1.237	0.654	41.81
구리시	4.02	-17.70	17.6	1.124	21.3	22.1	-7.68	-5.03	-5.20	-5.17	1.802	1.599	0.773	42.18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남양주시	2.55	66.82	17.0	1.300	20.7	19.4	17.14	28.58	17.77	10.01	1.996	1.845	1.157	41.72
오산시	11.87	59.92	22.8	1.078	21.5	23.2	48.24	11.39	19.46	33.64	2.227	1.921	1.230	37.78
시흥시	9.80	165.28	21.2	1.676	25.6	23.0	64.89	62.34	34.39	45.20	2.353	1.723	0.992	39.18
군포시	7.69	-35.76	21.0	0.682	24.4	23.0	-6.22	-19.28	-3.88	-4.33	1.829	1.553	0.775	41.58
의왕시	4.28	46.61	17.5	1.105	22.6	23.1	26.10	13.01	12.55	18.01	2.002	1.766	0.862	42.23
하남시	10.28	222.04	22.3	2.913	25.3	21.2	126.83	76.42	47.67	78.96	2.499	2.558	1.454	39.64
용인시 처인구	1.35	138.81	18.1	1.256	23.3	21.4	33.44	34.74	25.51	21.60	1.935	1.711	1.034	41.92
용인시 기흥구	8.01	115.31	18.8	1.149	23.3	20.8	30.85	7.21	12.92	18.97	1.880	1.879	1.277	39.81
용인시 수지구	8.71	150.63	18.6	1.332	23.3	20.7	35.56	20.45	9.24	22.10	1.677	1.713	1.208	39.74
파주시	3.88	57.02	20.0	1.240	21.8	21.0	20.98	21.03	17.83	13.42	1.862	1.556	1.181	40.47
이천시	2.65	21.08	19.4	1.045	20.2	22.6	23.45	2.38	8.97	15.78	1.699	1.400	0.888	40.81
안성시	-4.70	26.50	15.8	1.027	20.1	19.6	10.61	6.19	18.50	6.27	1.599	1.373	0.916	44.05
김포시	10.22	179.76	22.4	1.707	23.7	19.2	92.02	63.51	40.97	53.40	2.539	2.292	1.591	39.37
화성시	16.96	192.10	27.0	1.748	26.8	21.9	107.38	57.14	52.68	70.29	2.263	1.860	1.694	37.22
광주시	8.43	89.20	21.7	1.238	25.0	20.3	41.39	29.65	33.80	25.78	2.323	2.191	1.254	41.28
양주시	-1.08	83.48	17.5	1.333	20.8	19.5	28.32	31.97	22.65	16.55	1.839	1.705	1.074	43.04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존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포천시	-11.40	-27.96	13.3	0.876	18.5	19.1	-31.38	-11.25	6.56	-18.20	1.609	1.323	0.681	48.40
여주시	-9.43	7.86	16.0	0.982	18.0	17.5	-18.96	3.25	17.55	-10.19	1.559	1.383	0.790	48.08
연천군	-12.16	-32.82	19.4	0.811	17.6	19.3	-29.35	-15.11	10.25	-17.13	1.324	1.166	0.722	50.46
가평군	-18.26	7.18	13.4	1.011	18.9	16.3	-19.72	1.68	21.39	-9.78	1.544	1.356	0.823	51.74
양평군	-12.74	43.83	13.4	1.306	17.4	14.7	-18.27	19.84	33.48	-8.32	1.760	1.640	0.982	51.02

〈강원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존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춘천시	-2.21	9.29	17.8	1.134	21.2	21.1	-0.97	3.32	3.74	-0.62	1.542	1.303	0.842	43.97
원주시	0.21	37.00	18.2	1.177	21.8	21.1	7.47	16.19	10.62	4.76	1.777	1.403	0.922	42.76
강릉시	-10.20	6.68	14.0	1.062	21.0	18.7	-20.33	9.83	8.27	-11.54	1.441	1.350	0.766	47.14
동해시	-8.42	-16.94	14.4	1.040	20.1	17.0	-41.38	2.02	3.23	-21.50	1.395	1.336	0.758	46.48
태백시	-11.93	-61.87	13.0	0.903	18.5	14.8	-71.84	-19.11	-5.00	-33.11	1.238	1.298	0.704	49.53
속초시	-6.57	11.04	15.4	1.118	20.7	18.2	-14.40	8.38	6.86	-7.94	1.555	1.387	0.741	46.77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삼척시	-12.76	-36.59	15.9	0.907	23.2	17.7	-64.01	-0.69	6.20	-36.04	1.269	1.164	0.689	49.78
홍천군	-17.10	0.77	14.0	0.882	18.0	15.8	-28.15	-3.79	19.76	-13.43	1.552	1.257	0.722	52.42
황성군	-23.14	26.47	10.5	0.974	15.9	13.7	-66.52	11.24	35.32	-28.76	1.593	1.318	0.757	54.97
영월군	-22.51	-14.51	9.4	1.000	17.7	14.1	-63.98	-0.40	17.23	-28.32	1.343	1.172	0.719	54.40
평창군	-19.26	-15.37	9.4	0.933	17.5	13.4	-57.55	-5.18	17.77	-24.05	1.481	1.283	0.681	54.11
정선군	-20.00	-15.66	11.5	0.832	23.2	13.5	-50.16	-1.04	17.32	-21.25	1.313	1.178	0.655	53.25
철원군	-4.95	-50.05	22.5	0.836	22.3	20.6	-50.62	-16.90	3.14	-32.40	1.303	1.150	0.722	46.84
화천군	-2.58	-45.05	22.0	0.764	21.4	23.8	-42.34	-20.07	17.27	-30.74	1.440	1.131	0.798	46.29
양구군	-2.66	-66.17	21.5	0.684	22.6	22.2	-70.25	-24.10	1.43	-48.43	1.469	1.116	0.868	45.20
인제군	-1.54	-27.18	23.3	0.747	23.0	20.7	-16.78	-14.66	14.93	-10.66	1.505	1.168	0.769	46.36
고성군	-22.81	-97.29	12.0	0.912	19.7	16.9	-125.90	-18.56	-2.93	-69.13	1.264	1.166	0.580	53.77
양양군	-19.47	46.08	12.4	1.045	20.0	14.0	-14.33	27.82	31.60	-6.15	1.375	1.293	0.703	53.93

〈충청북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충주시	-8.29	16.87	15.8	1.124	20.6	18.9	-9.46	9.87	9.90	-5.44	1.504	1.261	0.757	46.54
제천시	-10.26	-15.91	15.2	1.039	20.7	17.9	-43.74	2.16	8.17	-24.11	1.468	1.319	0.731	48.39
보은군	-33.13	-16.96	11.9	0.789	19.2	12.3	-79.87	0.07	19.54	-31.16	1.241	1.042	0.652	57.11
옥천군	-25.06	-0.18	10.4	0.950	13.9	14.1	-48.11	1.55	21.98	-21.01	1.303	1.181	0.718	53.58
영동군	-24.79	-32.20	14.8	0.967	20.3	14.9	-73.07	-10.39	14.44	-34.84	1.268	1.080	0.712	54.58
진천군	0.72	124.59	21.3	1.519	23.8	19.0	57.34	55.01	30.50	32.93	1.653	1.294	1.149	42.64
괴산군	-31.43	39.72	7.5	1.047	16.2	13.4	-37.24	26.69	39.81	-15.59	1.394	1.143	0.769	57.07
음성군	-12.49	-32.69	15.0	0.852	18.9	17.1	-33.60	-17.21	11.24	-17.71	1.587	1.271	0.805	48.40
단양군	-25.84	-9.87	9.2	0.971	18.0	12.8	-64.09	-4.64	19.36	-25.94	1.347	1.149	0.643	55.70
증평군	-0.05	-27.08	21.3	0.856	21.0	20.2	-13.26	-11.03	4.89	-8.18	1.594	1.334	0.865	43.15

〈충청남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자역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잔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천안시 동남구	0.52	37.83	17.4	0.953	22.6	21.9	7.64	5.64	5.27	5.08	1.717	1.465	0.889	41.82
천안시 서북구	15.09	66.33	26.3	1.170	22.6	26.2	29.71	10.21	5.17	23.57	2.085	1.597	1.067	36.60
공주시	-17.33	-20.75	14.3	0.961	17.5	17.3	-48.70	-1.59	8.28	-26.24	1.238	1.098	0.603	50.82
보령시	-15.85	-14.27	13.1	0.997	19.2	15.8	-40.71	-0.48	10.50	-19.96	1.295	1.225	0.715	50.17
아산시	6.13	7.28	22.5	1.003	21.9	20.3	6.54	0.09	9.27	4.08	1.681	1.406	1.070	39.41
서산시	1.04	20.51	21.0	1.018	24.1	19.0	-1.65	10.98	15.03	-0.96	1.474	1.281	0.907	43.71
논산시	-17.90	-30.02	14.6	0.962	17.9	16.2	-50.31	-7.64	5.48	-25.17	1.242	1.122	0.703	50.49
계룡시	2.92	-29.52	15.6	1.361	15.4	18.8	-58.64	3.52	-11.35	-33.71	1.857	1.628	0.895	40.89
당진시	0.45	-8.79	22.1	0.919	23.4	17.9	-16.82	-0.43	9.41	-9.39	1.421	1.238	0.988	43.36
금산군	-26.38	-22.38	11.5	0.880	15.1	13.1	-76.93	-5.67	14.28	-31.66	1.216	1.106	0.764	54.16
부여군	-31.55	-25.16	8.4	1.038	16.0	13.4	-80.66	-2.47	10.96	-34.11	1.156	1.066	0.609	56.40
서천군	-31.13	-31.81	10.3	0.964	16.3	12.4	-78.30	-7.70	8.34	-30.37	1.101	1.064	0.604	57.11
청양군	-34.59	-25.16	9.6	0.771	15.7	14.2	-75.67	-15.20	20.48	-34.40	1.206	1.035	0.694	57.09
홍성군	-10.40	-4.92	17.6	1.343	22.6	16.6	-27.42	1.13	8.39	-14.05	1.335	1.189	0.961	47.31
예산군	-25.79	-3.60	10.1	0.941	16.7	14.4	-48.82	3.46	15.51	-21.85	1.225	1.134	0.630	54.26
태안군	-20.49	-7.11	11.2	0.941	18.5	13.6	-54.93	-2.25	21.29	-23.56	1.291	1.285	0.744	54.17

〈전라북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잔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전주시 완산구	-2.04	7.50	14.3	0.997	20.7	22.7	-17.86	2.90	-3.98	-12.25	1.501	1.493	0.737	42.74
전주시 덕진구	3.55	48.36	18.3	1.339	20.7	22.0	4.13	18.89	2.19	2.75	1.561	1.519	0.930	40.27
군산시	-5.58	-21.69	15.5	0.981	19.9	18.3	-29.23	-5.35	1.31	-16.35	1.415	1.415	0.827	44.72
익산시	-7.46	-54.90	14.3	0.940	17.8	20.0	-54.51	-15.49	-4.71	-33.55	1.413	1.318	0.722	45.81
정읍시	-21.02	-27.19	12.3	0.997	16.7	15.8	-57.81	-2.86	5.49	-28.00	1.171	1.060	0.695	50.63
남원시	-18.59	-14.51	15.4	0.951	20.3	15.2	-54.36	2.66	11.51	-25.51	1.205	1.120	0.720	50.98
김제시	-26.38	-27.79	11.3	0.975	15.6	14.2	-54.02	-5.97	9.27	-23.86	1.119	1.041	0.662	53.85
완주군	-10.48	-37.57	15.4	0.886	17.1	16.1	-41.31	-19.25	13.25	-20.70	1.407	1.268	0.972	47.57
진안군	-21.06	-14.59	17.5	0.582	21.9	12.5	-53.56	-9.01	25.68	-20.71	1.167	1.045	0.730	56.47
무주군	-32.49	0.58	9.9	0.896	18.0	12.7	-50.25	4.19	20.90	-19.76	1.171	1.033	0.741	55.24
장수군	-25.18	-15.98	12.2	0.852	17.7	12.7	-54.43	-0.09	15.80	-22.14	1.163	1.050	0.767	55.39
임실군	-26.31	-71.97	16.1	0.688	20.4	13.3	-86.72	-37.62	6.26	-37.91	1.095	0.976	0.680	56.46
순창군	-23.65	-43.21	19.7	0.758	25.6	12.8	-77.18	-12.96	14.95	-31.02	1.092	0.951	0.764	54.92
고창군	-26.96	-80.43	12.2	0.993	19.3	13.2	-129.84	-28.20	-2.60	-54.47	1.105	1.010	0.656	55.45
부안군	-28.17	-46.63	11.4	1.026	16.8	13.7	-83.12	-12.06	5.54	-35.56	1.100	1.034	0.625	55.06

〈전리남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잔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목포시	-5.23	-40.61	15.2	1.016	18.3	19.5	-41.23	-10.13	-5.79	-24.79	1.421	1.408	0.768	42.94
여수시	-4.28	-18.39	17.0	0.951	21.2	19.4	-28.22	0.36	2.29	-16.70	1.401	1.413	0.739	45.57
순천시	0.22	9.49	18.4	1.251	22.6	21.1	-13.47	11.65	3.59	-8.61	1.572	1.321	0.801	42.80
나주시	-5.15	52.66	21.5	1.392	25.1	18.2	26.38	18.32	26.40	14.64	1.300	1.091	1.064	45.55
광양시	6.26	-33.25	21.2	0.868	20.4	21.7	-35.25	-3.82	-1.48	-23.62	1.756	1.400	0.863	41.80
담양군	-19.81	-1.96	16.2	0.683	16.3	16.2	-26.83	-3.43	20.10	-13.27	1.207	1.075	0.751	53.90
곡성군	-32.32	-39.58	9.8	0.785	14.2	13.5	-85.80	-12.05	14.39	-36.69	1.091	0.940	0.658	56.72
구례군	-27.40	-41.23	9.9	0.795	15.1	12.9	-82.78	-19.72	12.32	-33.85	1.171	1.023	0.729	55.67
고흥군	-36.96	-7.04	11.0	1.021	20.3	10.8	-78.13	11.15	20.67	-26.91	1.019	0.974	0.607	59.36
보성군	-33.08	-44.59	10.8	0.671	17.1	12.1	-80.47	-15.53	12.58	-30.90	1.022	0.932	0.606	57.91
화순군	-16.80	-17.97	12.9	0.987	16.0	16.7	-54.49	-6.19	15.67	-28.04	1.227	1.015	0.754	50.51
장흥군	-24.27	-37.17	15.9	0.925	19.2	13.7	-75.74	-2.44	6.96	-32.40	1.065	0.934	0.665	55.20
강진군	-24.65	-40.99	14.5	0.641	21.2	13.5	-73.56	-5.83	10.17	-31.17	1.055	0.935	0.617	55.94
해남군	-20.67	-47.92	20.1	0.455	22.5	13.5	-69.74	-8.83	10.03	-29.22	1.076	0.969	0.639	54.38
영암군	-14.56	-22.39	18.4	0.618	21.1	15.3	-41.27	-3.01	14.60	-19.35	1.166	0.985	0.746	50.13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3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무안군	-11.37	50.99	15.8	1.329	19.2	17.0	9.27	26.17	13.42	4.74	1.242	1.109	1.097	44.39
함평군	-30.99	-39.23	12.2	0.569	17.5	12.8	-83.16	-9.24	15.70	-33.43	1.048	0.923	0.635	57.00
영광군	-7.70	-24.27	28.8	0.790	26.5	15.9	-32.91	-2.00	4.70	-15.95	1.106	1.014	0.716	51.34
장성군	-15.40	-21.62	19.2	0.641	17.8	15.5	-31.33	-6.61	13.75	-14.81	1.175	1.027	0.782	52.11
완도군	-20.83	-23.37	16.5	0.831	20.2	12.8	-59.62	2.07	10.56	-24.02	1.075	0.983	0.708	54.14
진도군	-28.65	10.32	13.1	0.898	19.0	13.5	-28.28	22.70	20.28	-11.46	1.047	0.910	0.714	54.82
신안군	-30.14	-48.11	12.6	0.783	18.4	12.2	-87.98	-7.89	8.35	-34.70	1.048	0.956	0.587	57.41

〈경상북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3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포항시 남구	-2.46	-4.07	15.8	0.918	21.0	18.8	-24.48	-1.63	-3.14	-14.29	1.527	1.656	0.697	45.33
포항시 북구	-1.53	-9.21	16.8	1.084	21.0	18.5	-38.55	0.11	-1.11	-22.11	1.687	1.655	0.784	45.13
경주시	-12.14	-5.98	13.6	1.037	20.6	17.4	-34.75	4.02	9.72	-18.67	1.398	1.281	0.707	48.62
김천시	-9.02	-8.26	19.5	1.082	21.7	17.4	-32.23	-0.61	9.69	-17.35	1.347	1.210	0.797	47.84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존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인동시	-13.20	-33.33	15.9	0.804	21.3	17.1	-37.24	-9.88	0.08	-19.43	1.269	1.172	0.761	48.78
구미시	8.99	-22.89	21.4	1.004	21.0	23.5	-18.88	-5.36	-4.46	-13.74	1.963	1.516	0.812	38.46
영주시	-18.67	-32.52	12.0	0.997	18.5	15.2	-58.09	-5.64	1.32	-27.18	1.261	1.216	0.699	51.06
영천시	-16.15	28.90	17.0	0.856	23.5	16.2	-5.37	10.77	25.87	-2.68	1.295	1.180	0.720	52.14
상주시	-24.19	-13.90	12.5	1.030	19.2	14.2	-56.24	1.71	11.33	-24.98	1.216	1.086	0.706	54.07
문경시	-22.55	-4.32	13.2	0.852	18.7	14.4	-44.95	1.01	15.62	-19.88	1.223	1.146	0.696	53.33
경산시	0.02	15.43	18.6	0.912	23.0	21.7	5.78	5.00	10.70	3.80	1.600	1.475	0.900	43.54
군위군	-35.80	-4.39	9.2	0.660	18.9	10.8	-66.48	-1.49	27.57	-23.11	1.180	1.047	0.597	59.66
의성군	-38.78	4.88	13.8	0.699	21.5	10.5	-48.88	6.91	24.40	-16.15	1.086	1.001	0.529	60.07
청송군	-33.15	-5.28	11.0	0.781	19.5	11.6	-60.38	-0.65	25.36	-22.16	1.184	1.062	0.595	58.31
영양군	-34.72	-12.42	11.1	0.878	22.8	11.5	-52.00	-5.06	19.14	-18.65	1.103	0.965	0.652	58.02
영덕군	-31.54	-28.17	12.9	0.856	22.4	11.2	-67.87	-4.64	10.65	-24.53	1.071	0.992	0.626	57.83
청도군	-34.17	8.88	9.2	0.914	16.8	11.2	-60.91	10.72	24.35	-21.68	1.229	1.156	0.638	58.55
고령군	-24.17	-49.85	11.0	0.643	17.7	13.3	-72.72	-19.52	5.95	-30.39	1.269	1.134	0.688	54.92
성주군	-23.24	-17.02	14.8	0.602	18.2	13.5	-57.98	-4.03	19.12	-24.97	1.324	1.195	0.596	56.08
칠곡군	-2.17	-51.02	17.1	0.824	20.7	18.9	-64.67	-12.61	10.69	-38.96	1.541	1.249	0.825	42.96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진율 (5년)	신호비율 (30대 여성)	청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순이동 (3년)	중년 순이동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 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 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 2030)	중위연령	
양산시	8.77	29.87	23.2	1.288	24.6	19.9	8.52	10.59	13.20	5.23	2.235	2.026	1.100	41.22
창원시 의창구	3.74	-11.96	18.9	1.022	21.9	22.2	-25.96	-0.42	-4.87	-17.75	1.943	1.740	0.736	42.41
창원시 성산구	8.59	-23.48	18.6	0.847	21.9	24.7	-28.19	-5.18	-8.88	-21.43	2.194	1.768	0.628	40.27
창원시 마산합포구	-7.93	-14.10	15.4	1.064	21.9	17.9	-28.86	-4.11	-3.06	-16.14	1.409	1.505	0.687	47.10
창원시 마산회원구	-4.23	-21.53	13.4	0.968	21.9	19.1	-34.74	-4.52	-5.45	-20.52	1.462	1.664	0.661	45.32
창원시 진해구	6.21	10.45	22.0	1.081	21.9	18.7	-7.12	2.97	3.38	-4.09	1.604	1.569	1.042	40.78
의령군	-35.88	-2.68	10.5	0.837	17.2	12.4	-48.62	0.08	27.39	-18.78	1.111	0.927	0.643	57.80
함안군	-17.33	-43.91	12.2	0.922	18.3	14.6	-71.37	-16.08	4.51	-32.86	1.354	1.177	0.834	49.69
창녕군	-24.16	-21.21	14.3	0.912	20.5	13.7	-64.87	-2.87	15.29	-28.15	1.289	1.109	0.722	54.59
고성군	-27.98	-23.82	9.6	0.959	14.8	12.7	-77.12	-14.27	13.25	-31.02	1.203	1.110	0.745	54.00
남해군	-41.71	2.48	7.6	0.984	14.2	12.2	-58.44	11.92	14.27	-21.88	1.085	0.964	0.632	57.87
하동군	-28.87	-57.94	10.6	0.833	15.0	12.7	-106.15	-13.96	5.34	-43.35	1.178	1.029	0.609	56.43
산청군	-32.78	-9.64	10.6	0.692	17.4	11.6	-73.66	-3.75	25.96	-27.13	1.239	1.074	0.758	57.80
함양군	-31.45	3.29	9.9	0.914	15.2	12.9	-56.49	9.25	21.86	-22.80	1.191	1.016	0.754	55.50
거창군	-21.93	1.37	12.0	1.124	16.7	15.7	-41.35	5.02	13.72	-19.93	1.248	1.068	0.780	51.03
합천군	-41.50	-25.69	8.2	0.846	16.9	11.3	-76.20	-10.53	16.13	-27.02	1.077	0.926	0.586	58.8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자연 성장률 (3년)	순이동률 (3년)	조출생률 (3년)	출생아 생산율 (5년)	신혼비율 (30대 여성)	청년비율 2020년	청년 순이동률 (3년)	장년 순이동률 (3년)	중년 순이동률 (3년)	청년 유실률	노인인구 증가율 (2020~2030)	고령인구 증가율 (2020~2030)	청년인구 증가율 (2020~2030)	중위연령
제주시	4.55	22.42	21.2	1.132	22.4	20.8	5.89	13.37	4.48	3.71	1.684	1.452	0.990	41.19
서귀포시	-4.17	24.04	16.8	1.342	20.8	17.3	-18.97	22.59	12.37	-10.22	1.565	1.360	0.952	45.71

[부록 2]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표



응답자 ID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정책 추진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본 조사는 기초 지자체 인구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전국 기초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인구변동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정보는 코드화되어 통계 산출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 결과물에서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리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이상림 연구위원

조사업체 : ㈜엠브레인퍼블릭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담당 : 권민오 부장

202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5. 귀하 지자체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인구문제들(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유출) 중에서 **최우선적 과제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저출산 문제
- ② 고령화 문제
- ③ 인구감소 문제
- ④ 청년유출 문제

문6. 귀하 지자체에서는 다음의 인구문제가 향후 **10년 후**에 얼마나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심각할 것	② 심각한 편일 것	③ 보통일 것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일 것	⑤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
저출산 문제	①	②	③	④	⑤
고령화 문제	①	②	③	④	⑤
고고령 인구(75세 이상) 문제	①	②	③	④	⑤
인구감소 문제	①	②	③	④	⑤
청년유출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 지자체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인구문제들(저출산, 고령화, 고고령 인구, 인구감소, 청년유출) 중에서 향후 **15년 후**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저출산 문제
- ② 고령화 문제
- ③ 고고령 인구(75세 이상) 문제
- ④ 인구감소 문제
- ⑤ 청년유출 문제

182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문8.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인구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필요함	② 다소 필요함	③ 보통	④ 다소 필요하지 않음	⑤ 전혀 필요하지 않음
중앙정부-지자체의 체계적 역할 정립	①	②	③	④	⑤
인구정책의 전문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지자체 단체장/의회의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 보장	①	②	③	④	⑤
정부 지원 예산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9.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인구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들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지자체의 체계적 역할 정립
- ② 인구정책의 전문성 확보
- ③ 지자체 단체장/의회의 인식 개선
- ④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 보장
- ⑤ 정부 지원 예산의 확대
- ⑥ 기타 (_____)

문10. 귀하 지자체는 다음 중 어떠한 지역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 ①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 ② 광역시 지역
- ③ 도 내 대도시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
- ④ 도 내 중형 도시 (인구 5만~50만 명 미만)
- ⑤ 도 내 소형 도시 (인구 5만 명 미만 또는 도농 복합지역)

문11. 응답하신 귀하께서는 인구분야에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유관 영역 포함)

- ① 10년 이상
- ② 5~10년 미만
- ③ 2~5년 미만
- ④ 1~2년 미만
- ⑤ 1년 미만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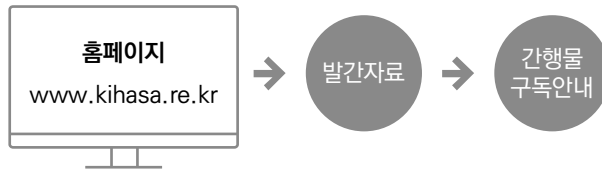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